

20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서



KRIL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40년간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도 연구성과보고서」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전략’,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지방시대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방안 연구’ 등 인구감소와 지역 격차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에 두고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지방행정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마주할 다양한 도전과제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성과보고서에는 연구원에서 수행한 76건의 연구 성과 중 기본연구과제 9건, 정책연구과제 20건, 정책이슈리포트 15건, 자체연구 5건, 지침연구 4건과 42회의 정기간행물(이슈와 포럼 4회,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12회, 지방의정브리프 4회, 지방행정연구 4회, 세계지방자치동향 4회, 유튜브 14회)을 종합·정리하여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이슈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재정불균형, 행정혁신 등 중·장기적 시점에서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를 폭넓게 조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 성과보고서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협력을 끊임 없이 이어갈 것이며, 한층 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해주신 자문위원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국정과제위원회 등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연구와 발간에 힘써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모든 연구진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육 동 일

발간사

I. 연구원 소개

II. 연구보고서

1. 기본연구

우수과제

- | | |
|---|----|
| 1) 지방시대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방안 연구
: 지역 간 기능적 연계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 17 |
| 2)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 20 |
| 3)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전략
: 시나리오 플래닝을 중심으로 | 23 |
| 4)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 | 26 |
| 5) 지방이양정책의 진단 및 평가 연구
: 사무이양정책 및 지역맞춤형 특례정책을 중심으로 | 29 |
| 6)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 33 |
| 7)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의 개선방안 | 37 |
| 8) 인구감소지역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발전전략 연구 | 40 |
| 9)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선방안 연구 II :
지방사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 44 |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 우수과제

1) 지역청년지원에 관한 법·제도 수립방안 연구	49
2)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 방안연구	52
3) 지방규제 영향분석 방안 마련 연구	55
4)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59
5)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	63
6)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구분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	66
7)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성화 방안	69
8)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우발채무 관리 방안 연구	72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 우수과제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77
전라남도	2)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80
서울특별시	3) 서울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전적격성 검토 방안 연구	83
부산광역시	4)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추진 방안 연구	86
인천광역시	5) 카지노 관리·감독 권한의 지방이양 타당성 연구	89
광주광역시	6)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정책 추진 방안 연구	92



대전광역시	7) 대전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95
울산광역시	8) 울산형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방안	99
세종특별자치시	9) 지방시대 종합타운 건립 필요성 및 활용방안	104
충청북도	10)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07
전북특별자치도	11)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방안	110
경상북도	12)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방안 연구	112

4. 정책이슈리포트

서울특별시	1) 서울시 소재 경로당 중식 5일제 전면 추진의 수요 예측에 대한 연구	117
부산광역시	2) 부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120
대구광역시	3)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대구관광 활성화 방안	123
인천광역시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카지노 레저세 신설 방안	126
대전광역시	5) 대전광역시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129
울산광역시	6) 울산광역시 도시 브랜드 제고 방안	132
세종특별자치시	7) 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 대행 주체의 적정성 분석	135
경기도	8) 경기도 미래지향적 소방력 운영 및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139
충청북도	9) 산업단지가 충청북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42
충청남도	10) 지방관리 향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발방안 연구 : 대천항을 중심으로	146
전북특별자치도	11)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 타당성 연구	149

전라남도	12)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및 지역정착 지원 방안	152
경상북도	13) 지속가능한 대학-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해외대학 혁신사례 분석	155
경상남도	14) 경남 투자선도지구 활성화를 위한 유사사례 연구	158
제주특별자치도	15) 특별자치시도 공동협력과제 발굴 및 개정안 마련	161

5. 자체연구

1) 2025 지방행정 트렌드	165
2) 지방자치 30년 평가 기초 연구	171
3) 데이터기반행정 구현을 위한 지역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개선 방안 연구 : 인허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174
4) 지역경제 진단지표 설계와 검증방안 연구	178
5)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관리방안	181

6. 지침연구

1) 의료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1)	187
2)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영향권 설정에 관한 연구	190
3) 폐기물 부문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지침 연구	193
4) R&D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1) : 지방 연구개발사업 특성과 현황을 중심으로	196

III. 정기간행물

1.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201
2.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205
3. 지방의정브리프	206
4. 지방행정연구	207
5. 세계지방자치동향	211
6. 유튜브	213

IV. 부록

2024년도 연구과제 수행 목록

1. 기본연구과제	216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	217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과제	218
4. 정책이슈리포트	219
5. 자체연구과제	220
6. 지침연구과제	220
7. 수시연구과제	221
8.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221
9. 공동연구과제	221
10. 수탁연구과제	221
11. 타당성조사과제	221

※ 홈페이지 개편 시, QR코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R코드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rila.re.kr>)로 접속 바랍니다.

20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서

I

연구원 소개

1. 연구원 개요
2. 조직 현황



I . 연구원 소개

1 연구원 개요

» 설립목적

- 「민법」 제32조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역량 제고 및 지원

» 주요 연혁

- 1984. 9. ● (재)지방행정연구소 개소
- 1986.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정(법률 제3809호)
- 2002. 4. 2001년 공기업 및 경영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04. 6.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06.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개정(법률 제7910호)
- 2007. 5. 부설 지역균형개발지원센터 설치(「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 2011.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개정(법률 제10440호)
- 2014. 11. 행정안전부 지정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치(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2호)
- 2016. 12. 청사신축 이전(서울 서초동 → 원주 혁신도시)
- 2017. 1. '2017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4위 선정
- 2020. 6.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7호)
- 2023. 1.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 설치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 2023. 7.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재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제4항)
- 2023. 12. 지방규제연구센터 설치(「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행정안전부훈령 제322호))
- 2024.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40주년
- 2024. 11. ▼ 제 20대 육동일 원장 취임

» 미션 및 비전·핵심가치



» 전략 및 과제

3대 경영목표	6대 추진전략	19대 실천과제
Ⅰ. 현장 중심 고품질 정책연구 수행	1. 연구품질 혁신	1-1. 수요 기반 연구과제 발굴 및 체계적 편성
		1-2. 연구수행방식의 선진화 및 혁신
		1-3. 연구과제 평가시스템 및 환류체계 고도화
	2. 연구환경 혁신과 구성원 역량 강화	2-1. 연구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체계(디지털 집현전) 고도화
		2-2. 연구수행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산시스템 강화
		2-3. 맞춤형 역량개발 프로그램 확대
Ⅱ. 소통·협업 기반 성과공유체계 강화	3. 대내 소통 및 협업시스템 강화	3-1. 직원참여형 의사결정체계 구축
		3-2. 상호 신뢰에 기반한 노사협력체계 구축
		3-3. 윤리·인권 중심 경영체계 확립
	4. 연구성과의 체계적 확산·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강화	4-1. 연구성과의 다각적 홍보 및 활용체계 구축
		4-2. 국내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성과 공유 확대
		4-3.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Ⅲ. 연구원 제도 개선 및 운영 효율화	5. 경영혁신 체계 구축	4-4.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
		5-1. 경영혁신을 위한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5-2. 조직혁신을 위한 상시 소통채널 운영
	6. 조직·인사·재정의 체계적 혁신	5-3. 조직 생산성 및 효과성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강화
		6-1. 연구환경 최적화 방안 마련
		6-2.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평가제도 운영
		6-3. 재정운영의 효율성·투명성 강화

» 주요사업

구분	사업	분야		
연구원	연구사업	연구사업	기본연구과제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정책이슈리포트
			수시연구과제	자체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연구관련사업	학술행사	국내세미나(연구원 주최·유관기관 협력)	
			지방자치 혁신포럼	
			지방의정아카데미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
			공모사업(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국제협력	일본 CLAIR 및 전문가 교류협력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국제세미나	
		발간	지방자치정책브리프	지방의정브리프
			지방자치이슈와포럼	지방행정연구
			세계지방자치동향	연구성과물 콘텐츠(유튜브)
	수익사업	수탁용역 연구과제		
지방 투자사업 관리센터	조사사업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투자사업 이력관리	센터연구과제	
		센터정책과제	타당성조사 지침개정	
	조사관련사업	세미나 개최	공무원 교육	내부 역량강화
	조사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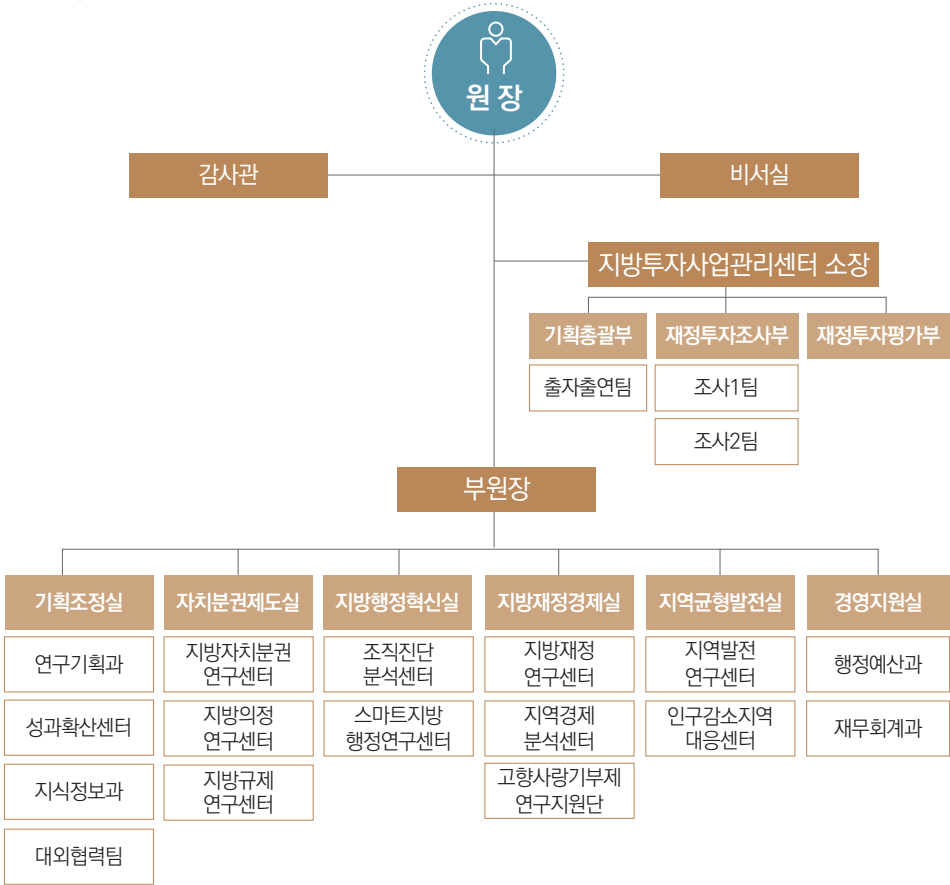
» 2024년도 예산

(단위 : 천 원)

세입			세출	
	합계	10,488,187	합계	10,488,187
일반 회계	정부출연금	2,854,000	인건비	6,300,922
	지방자치단체출연금	4,094,400	연구사업 등	1,557,048
	기금회계 전입금	1,226,040	경상운영비	1,383,638
	수탁용역수입	1,776,078	수탁용역사업	986,634
	잡수입	405,064	이월금(명시이월 사업비 포함)	259,945
	전기이월금	132,605	-	-
	합계	11,372,175	합계	11,372,175
특별 회계	정부출연금	200,000	인건비	2,422,879
	타당성조사 수수료	10,266,400	조사사업 등	2,992,134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수수료	163,400	경상운영비	564,512
	예비검토 사업 수입	300,000	이월금(명시이월 사업비 포함)	5,392,650
	잡수입	442,375	-	-

2 조직 현황 (2025.2.28.기준)

» 조직도



» 정·현원 현황

구 분	원장	연구직	전문직	투자분석직	행정직	공무직 (정원 외)	계
현원/정원	1/1	58/63	1/1	20/20	17/19	11/12	108/116

20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서

II



연구보고서

1. 기본연구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4. 정책이슈리포트
5. 자체연구
6. 지침연구



기본연구



1 지방시대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방안 연구 : 지역 간 기능적 연계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2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3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전략 : 시나리오 플래닝을 중심으로

4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

5 지방이양정책의 진단 및 평가 연구 : 사무이양정책 및 지역맞춤형 특례정책을 중심으로

6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7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의 개선방안

8 인구감소지역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발전전략 연구

9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선방안 연구Ⅱ : 지방사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1-1

★ 우수과제

지방시대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방안 연구 : 지역 간 기능적 연계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주제어 균형발전 | 지방시대 | 초광역권 | 기능적 연계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연구책임 박진경 • 연구진 김도형, 김민영, 양원탁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초광역권 지역 간 기능적 연계에 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전략 및 과제 도출

- 지역 간 기능적 연계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의 기본방향 설정
 - 지역 주도 정책추진의 자율성 확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 추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구도 탈피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치사슬 공유·활용,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확대
- 시·도의 경계를 초월한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추진전략 마련
 - 자율적으로 설정된 초광역권 협력권 하에서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합의 과정을 거친 특정 산업에 대한 공동계획안 마련
 - 기능적 연계 및 특정 산업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산업과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경제 혁신을 선도할 인력 양성 및 정주 복합전략 마련
 - 협력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협력 정책 하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가이드라인 제공 등

» 초광역권 단위 시·도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제도적 개선방안 제안

- 단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가칭)초광역협력계정 신설 및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재편
- 장기적으로 (가칭)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대상과 절차, 협력계획 수립, 협약 체결, 협력사업 주체, 국가의 협력 촉진 지원 시책, 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규정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지역 불평등 발생

- 저성장 경제로 돌입한 우리나라는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이 분화가 일어나면서 지역 간 소득 격차와 양극화 심화, 지역 불평등 발생
- 산업 대전환의 방향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 위주로 인적자본 중심으로 발전
 -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수도권과 대도시권은 통째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비수도권은 각개전투 증으로 효율성 저하

» 지방시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 법률 하에서 초광역권 정책 추진

- 경제적·산업적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 간에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비수도권의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초광역권 정책 추진
 -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수도권 대극형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역발전 추진 과정상 지역 간 협력 활성화는 항상 시도 되어 왔으나 집행상 한계 존재
 - 현 정부의 4+3 초광역권 정책은 발전계획은 수립되었으나 법·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 불충분

» 초광역권 산업 육성 시 협력제도를 활용한 지역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경제·산업·일자리 부문의 기능적 연계에 기반한 초광역권 정책의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 대책 필요
- 통합 법률 하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역 간 협력 방안 마련을 통한 새로운 성장모델 창출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신지역주의 이론 논의 및 지역 간 협력 정책동향 분석

- 경쟁력 강화요소로서의 지역과 신지역주의 이론 논의 및 정책동향 분석
 - 혁신 슈퍼 클러스터 이니셔티브와 신지역주의를 수정 보완한 개방형 지역혁신체계 및 개방적 협력권 등 관련 이론 고찰

-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를 거치면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 간 협력사업과 관련한 정책 동향 분석

» 기존 지역 간 협력제도 운영현황 및 국외의 지자체 간 협력방식 논의 및 분석틀 설정

- 기존 「지방자치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 간 협력제도 및 국외 협력제도 분석
 - 유럽연합(EU)의 지역 간 협력(Interreg) 프로그램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지역 간 협력법, 지역 간 합의 제도 및 협약형 협력제도 등 국외의 지자체 간 협력방식 논의
-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기능적 연계 지점 상정 및 분석틀 설정
 - '산업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경제적 분업관계'와 '경쟁구도에서 탈피한 정책적 협력관계'로 상정하고 기능적 연계는 지역 간 산업 및 일자리 연계구조에 초점

» 초광역권 단위 연계협력의 산업·일자리 기능적 연계구조 및 정책적 협력관계 분석

- 지역산업연관분석(regional interindustry analysis) 및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한 지역 간 기능적 연계구조 분석
 - 지역 간 연계구조 및 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필요 인력 및 일자리 요구사항 산출
- 정책적 협력관계 분석을 통한 두 지역 간 협력의 가능성 검토
 - 달빛동맹을 통해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대구와 광주 사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 정책적인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는 서울과 경북 사례 검토

1-2

우수과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주제어 재정격차 | 지방재정조정제도 | 재정형평화

연구책임 홍근석 • 연구진 이서희, 유보람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재정조정제도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 상이

- 제도별 도입 목적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주로 수평적 재정형평화 보다 특정 지역의 지원과 균형발전 지원에 치우친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함
 - 보통교부세는 총액 기준에서 격차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평적 재정형평화 기능 보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는 1인당 재정 측면에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 나타나 수평적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지역균형교부세 신설 방안을 제안함
 - 단기적 측면에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입률 적용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제안함
 - 중·장기적 측면에서 부동산교부세와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통합하여 지역균형교부세 신설을 제안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구·재정 측면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

-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 현상은 비수도권의 인구 공동화와 지방재정 악화를 야기함

- 2023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7%를 차지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력과 공공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지방재정 측면에서 수도권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있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검토하고,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도입 목적과 실제 기능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 실증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주로 총량적 측면의 재정격차 완화에 집중되어 있음
 - 보통교부세는 총량적 기준에서 재정격차 완화 효과 있으나, 1인당 세입기준 재정격차 완화 효과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며,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는 총량 및 1인당 세입 기준 모두 재정격차 완화 효과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재정격차 조정의 목표가 총량 기준일 경우, 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운영 방식이 적합하고, 1인당 세입(재정력) 기준으로 재정 격차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수평적 재정형평화 측면에서 제도 운영이 필요함
- 지역 간 재정형평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제도별 재정격차 완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
 -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는 1인당 재정 측면에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나 수평적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 보통교부세는 총액 기준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평적 재정형평화 기능보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지방재정조정제도 실태 분석과 시사점

- **지방재정조정제도 정책 목표와 운영 방식의 불일치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됨**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수평적 재정형평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 운영 방식은 특정 지역의 지원 및 균형발전 지원에 치우친 구조로 확인됨
 - 또한 보통교부세는 재원보장, 재정격차 완화라는 혼합된 정책 목표로 재정보장기능이라는 주요 목표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라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고 교부하는 과정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음을 확인함
- **제도별 도입 목적과 실제 기능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재원을 분배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균형발전과 수평적 재정 형평화라는 목표는 동시에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제도별 정책 목표에 따라 수평적 재정형평화와 균형발전 중 어떤 목적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방안 제안

- **(단기적 측면) 현행 제도 유지하되 배분 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격차 완화 효과 강화가 필요함**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입을 조정하되 정률산입률이 아닌 차등산입률 적용 방안을 제안함
 -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입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차등산입률제도 검토를 제안함
- **(중·장기적 측면) 새로운 지방재정조정체계 설계가 필요함**
 - 부동산교부세와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통합하여 지역균형교부세 신설을 제안함
 - 지역교육 수요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보다는 인구가 많고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부동산교부세의 운영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교육 교부기준을 폐지하고, 재정여건 교부기준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1-3

★ 우수과제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전략 : 시나리오 플래닝을 중심으로

주제어 인구감소 | 조직관리 | 행정체제

연구책임 김지수 • 연구진 최지민, 유자영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는 주도적인 자치조직권 행사 주체로서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해 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는 조직운영전략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함
- 새로운 조직운영전략 수립 방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용 예시를 제공함
- 제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중기인력기본계획의 실질화와 지자체 자체 계획수립 역량제고를 위한 데이터공유·컨설팅지원
 - 국가·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기준의 유연성 제고와 상향식 기능조정협의 절차 법제화
 - 사무재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한 지자체 업무범위의 현실화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에 대응해 자치단체 조직운영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021년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가 시작되면서, 인구증가를 전제로 설계되었던 국가 차원의 모든 정책이 새롭게 리프레이밍(reframing)되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함
- 자치단체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관리전략 수준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새롭게 정의되는 것이 필요함

-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조직운영전략의 범위 역시, 현행법 제도의 개선을 포함해 필요할 경우 지방행정 체제 개편까지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확장될 필요가 있음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조직운영전략과 전략 선택의 핵심동인 도출

- 자치단체 조직운영전략의 범위를 선행연구를 통해 새롭게 규정하고, 효율성·민주성을 기준으로 국가-당해지자체-인접지자체 차원에서의 조직운영전략 선택의 핵심동인과 선택 기준을 도출함
 - (절차) (1단계) 선행연구를 통한 전략 범위 및 핵심동인, 전략 선택 기준 도출 → (2단계) 전문가 의견 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한 타당성·신뢰성 제고
 - (조직운영전략의 범위) 조직문화 개선,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조직·인사제도 개선부터 국가차원의 지방행정 체제 개편 등을 포괄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확장하여 정의함
 - (전략 선택의 핵심동인) 효율성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규모 적정성, 민주성 관점에서 주민/직원 등 구성원의 공감대 및 지역 다양성 등을 선정함
 - (전략 선택 기준) 국가 차원의 상황판단 기준으로 행정수요 지표의 변화, 자치단체 차원의 상황판단 기준으로 재정·환경 인프라·인력 규모 등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함

»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활용한 조직운영전략 시나리오의 개발 및 적용

-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활용하여 ‘(핵심이슈) 지자체 중기인력계획상 자치단체의 총정원 규모에 관한 전략 수립 방안’을 모색함
 - 시나리오 개발은 ‘핵심이슈 파악→변화동인 파악→시나리오 도출→시나리오 쓰기→대응 전략 수립’의 5단계 절차를 따름. 국가 차원의 위기 여부와 당해지자체-인접지자체의 문제상황 여부를 중심으로 8개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시나리오별 조직운영전략의 적합도를 평가함
 - (주요 전략) 행정 체제 개편을 전제로 한 전략으로, ① 행정구역 통합, ②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③ 광역-기초기능 재배분+기관 구성 다양화, ④ 광역시로 관할구역 경계 변경, ⑤ 광역-기초 기능 재배분,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 전략으로, ⑥ 중장기 인력계획 수정(증원), ⑦ 인력 재배치(현행 유지), ⑧ 중장기 인력계획 수정(감원), ⑨ 인사관리 및 일하는 방식 변화(디지털 혁신, 성과 관리시스템 변화, 조직문화 및 인사관리 제도개선 등) 등이 제시됨

- 위기 수준이 높을수록 행정 체제 개편을 포함한 대안의 선호도가 높고, 위기 수준이 낮을수록 인사관리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 및 정원의 현행 유지 또는 증원을 전제로 한 전략의 선호도가 높음
- 자치단체를 위한 시나리오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제도적·인식론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도출함

» 정책제언

• 중기인력기본계획의 실질화와 보완제도 확충이 필요함

- 자치단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원을 관리하는 ‘중기인력기본계획’의 실질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인력 수요 예측 및 재배치 제도 강화가 필요함
- 자치단체의 자체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공, 지자체 대상의 컨설팅 지원, 매뉴얼/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제공, 전문가풀 형성 등이 필요함

• 과소군 기능수행의 적정범위 설정을 위해 ‘국가-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근거의 유연성 및 절차 법제화’와 ‘사무재평가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 과소군 지역의 조직 효율화를 위해 중앙부처 사업의 일몰제 등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스스로의 예산 규모와 인력 범위 등을 고려해 수행가능한 기능 범위를 정하고 광역-기초 간 협상을 통해 수행 기능의 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역사회의 조직운영전략에 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자치단체 공무원 스스로 인사관리 및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고,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기구·정원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전략 개발 의지와 능동적·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함 → 자치조직권에 대한 역량강화의 기반이 될 것임
- 지역사회(지방의회, 주민, NGO 등)가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사회적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함

1-4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

주제어 책임성 | 자치분권 | 지방의회 | 주민참여 | 지방정부

연구책임 박재희 • 연구진 김건위, 정기용, 선소원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결론

- 지방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정부 내·외부의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제도는 거의 없는 실정
 - 집행기관 내부의 자체 감사 및 자체 평가가 본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체 감사 및 자체 평가의 내용도 회계 감사 또는 복무 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성과나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
 -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정부 책임성 장치들도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원 수준의 미흡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주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
 -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 책임성 기제도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장치는 거의 없음

» 기대효과

- 중앙정부의 타율적인 통제 수단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적 통제 및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기대

» 정책제언

- 지방정부의 자율적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권한이나 위상이 실질화되어야 함
-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지방의회)은 기관 간 구조적 대립이 아닌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관 구성의 형태를 전환하여야 함

- 주민들이 지방자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조직 활동을 통한 참여의 효능감을 높이고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방안(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입법, 주민투표)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역대 정부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
 -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체제를 마련
-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함께 권한 확대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중요
 -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의 제도적 차원의 자율성 강화는 지방자치분권 성공의 필요조건을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음.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가 필요

» 연구 목적

- 중앙정부에 의한 타율적인 통제 수단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적 통제 및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 논의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지방정부 책임성 진단

- 일반주민은 지방공무원과 비교하여 지방정부 책임성 수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권한 및 책임성 수준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
-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후견적 책임성 확보 기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주민 주권에 입각한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집행기관에 의한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

- 자체평가 및 자체감사 용어를 명확히하고 평가대상 및 시기를 체계화
- 자체평가 및 자체감사의 유연성 및 전문성 강화
- 자체평가 및 자체감사 계획이 자체평가 및 자체감사 결과와 연계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

-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결범위 확대, 단체장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요건의 제한, 조례의 규칙과 위상 강화, 기관구성 다양화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기간 설정에 있어 지자체 자율권 부여 필요
- 지방의원 겸직제도 및 징계제도를 정비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위원회의 실행력을 제고하여 지방의회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

- 지방정부 성과정보 공개 및 정책의 유연한 수정
- 참여 주민에 대한 사전학습 기회 제공
- 지방정부와 주민 간 소통 채널의 다양한 설계 및 운영
- 핵심 정책결정자의 참여 및 행정절차 개선

1-5

지방이양정책의 진단 및 평가 연구 : 사무이양정책 및 지역맞춤형 특례정책을 중심으로



주제어 지방이양정책 | 차등분권 | 지방이양 평가모델

연구책임 주희진 • 연구진 고경훈, 전대욱, 유수동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이양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지역의 여건·사무특성 등을 반영한 유연한 지방이양방식의 적용

- 지방이양정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을 제고하고 지방이양대상 사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이양대상사무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어떠한 이양방식이 보다 적합한지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해당 사무에 대한 지역 구분 없이 지방이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전반적인 행정절차의 개선 등의 경우에는 균등이양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반면, 특정 지역에서 지방이양 필요성 제기, 사무수행역량이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 등에서의 지역의 여건 등을 반영한 차등이양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단위사무 대신 기능중심의 지방이양정책 추진

-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법령에 명시하고,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무의 이양도 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법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지방이양 초기단계에서의 재원조치 방안 마련 및 재정분권을 위한 노력 강화

- 실효성 있는 지방이양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에 따른 추가적 비용에 대한 재원조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지방사무가 된 이후 언제까지 또는 어느 정도의, 그리고 언제까지 재원을 보전하는 것이 충분하고 합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이양정책 평가지수의 활용

- 지방이양정책 평가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이양의 수준을 진단 및 성과관리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지방이양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

•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체계적 관리방안 모색

- 중앙행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무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양된 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1단계),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2단계) 필요
- 지방이양사무의 이력관리 등을 통한 지방이양정책의 전 과정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마련 필요

• 전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이양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열악한 여건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권한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전문인력 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지방이양에 대한 중앙과 지방차원의 노력은 공공의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주민 등의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의 지방이양정책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한 긍정적인 주민 인식 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중앙정부에 대한 권한 집중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수준임
 - 또한 지방이양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의문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이양정책을 평가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지방이양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지방이양정책 평가 및 지방이양정책 평가모델의 제시

• 지방이양정책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종합

- 과정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양 희망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재원조치의 충분성 및 인력·조직 역량의 충분성 등은 보통 이하로 나타남
- 결과적 측면에서는 지방이양정책으로 인한 단체장의 관심이 가장 크게 변화되었다고 나타난 반면, 조직·인력의 변화나 투자자원배분의 분위기 변화 등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고 응답함
- 영향적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의 증진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지방행정의 대응성 확보, 지역적합성 제고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방이양정책의 평가지수 도출

- 공무원이 지방이양정책의 영향에 대한 응답비율을 토대로 지방이양정책 평가지수를 도출함
- 그 결과 우리나라 지방이양정책의 총괄적 평가지수는 약 51.02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평가기준별로 살펴보면 지방분권의 증진이 12.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방이양정책의 심층분석 결과

• 광역단위

- 광역단위의 정책단계별 지방이양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제기됨
 - (과정적 측면) 균등이양방식과 차등이양방식에서 공통적으로 비용보전 등 재원조치의 불충분성, 기관위임사무 집행적 성격 위주의 사무 이양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적됨
 - (결과적 측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주민의 관심변화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영향적 측면) 전반적으로 경제적 규제 완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지역 간 격차라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됨
- 기능별 지방이양정책 평가지수의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균등이양방식과 차등이양방식에서 모두 문화·체육·관광분야 및 행·재정 분야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남. 그 뒤로 균등이양방식의 경우 보건·복지, 지역개발 등의 순으로, 차등이양방식의 경우 지역개발, 행·재정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단위

- 기초단위의 정책단계별 지방이양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제기됨
 - (과정적 측면)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요구가 지방이양의 전반적인 과정과 결정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결과적 측면) 기초자치단체의 역량과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공무원 등의 업무처리에서의 어려움 등이 지적됨
 - (영향적 측면) 지방이양의 효과가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거나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기능별 지방이양정책 평가지수의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균등이양방식과 차등이양방식 모두 산업경제·중소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뒤로 균등이양방식의 경우 환경보호·관리, 문화·체육·관광의 순으로, 차등이양방식의 경우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방이양정책의 성과·파급효과에 대한 동태분석 결과

• 정책 전과정에 대한 모델링 및 동역할 작용에 관한 추론 결과

- 분석 결과, 지방이양정책의 전과정에 관한 시스템 구조는 조절작용이 풍부한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고, 방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같은 일차적인 성과부터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대응성 강화와 같은 궁극적인 성과,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궁극적인 파급효과에 관해서는 대부분 강화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방이양정책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저항과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보전 조치의 지연 등은 지방이양정책의 효과성을 제약하는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방이양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이와 같은 반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함

• 실험설계 및 시나리오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지방사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시나리오 1(분권정책의 추진)으로 나타났고, 지방재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나리오 2(재정분권 노력 강화)로 나타남
- 또한 이양사무의 지역적합성 제고에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시나리오 3(차등분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강화)으로 나타났고, 지자체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지방행정 효율성·대응성(ERL)에 있어서도 시나리오 3(자치단체의 차등분권 노력도 강화)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양정책의 성과 및 파급효과가 분권정책 추진(DPD)으로 환류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시나리오 1(분권정책의 추진)이 이양정책의 환류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냄

1-6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주제어 스마트지방행정 | 재난안전관리체계

연구책임 김수동 · 연구진 강영주, 이재용, 이경은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 개인 차원에서의 구축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전문가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가 필요할 것임
- 중앙정부의 경우 재난안전데이터 홍보 및 활용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해야 할 것임

• 조직 차원에서의 구축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난안전데이터 수집·연계 및 관리체계 구축, 관련 지원 및 조직체계 (전담 조직 설치, 협의체 구성 등), 프로세스 분석 활용(업무 프로세스 관리 도구 도입 등)이 필요할 것임
- 중앙정부의 경우 인사관리제도 개선(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등),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지침 개발(표준조례(안),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시스템 차원에서의 구축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난관리 업무 자동화 추진이 필요할 것임
- 중앙정부의 경우 재난안전데이터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지원(재난정보 분석, 관리 등),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고도화 추진을 고려해야 할 것임

1. 기본연구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4. 정책이슈리포트

5. 자체연구

6. 지침연구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 전환과 재난 취약성 증가

-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직면하게 되면서 행정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역의 재난 취약성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도시 시설물의 대형화, 고층화, 노후화로 인하여 재난 위험요인 노출이 증가되고 있음
 - 고령사회 진입,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등 재난약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확립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이러한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는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강화될 수 있음
 -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운영, 인력, 재정 등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의 한계를 최소화하면서 이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재난관리 데이터에는 주민의 위치 정보, 건강 정보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이 제약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데이터 과학, 정보 기술,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임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프로세스 성공 요인 논의

-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는 업무 프로세스 관리(Business Process Management, BPM)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

- 재난관리의 경우에도 과정적·절차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BPM의 관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관련된 논의를 종합하여 개인, 조직, 시스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프로세스의 성공요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개인 차원에서 프로세스 인식, 데이터 인식, 전문성과 같은 측면이 고려될 수 있음
 - 조직 차원에서 리더십, 프로세스 관리, 협력 및 조정, 조직문화와 같은 측면이 고려될 수 있음
 - 시스템 차원에서 표준화, 자동화와 같은 측면이 고려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재난 발생 및 재난안전데이터 수집 현황

- 최근 5년간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 현황을 조사하였음
 - 자연재난은 호우 및 태풍 유형에 보다 집중되어 있고, 그 피해 정도는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재난은 감염병 유형과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산불 등 화재 유형에 보다 집중되어 있고, 그 피해 정도는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수집 및 공개된 재난안전데이터 현황을 조사하였음
 - 자연재난의 경우 풍수해, 지진, 산사태, 폭염 등에 대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재난의 경우 다중밀집건축물붕괴, 산불, 해양선박사고, 초미세먼지 등에 대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난안전데이터의 재난유형 및 협업기능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음
 - 재난유형 네트워크의 경우 풍수해의 중심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 협업기능 네트워크의 경우 대응 조치, 위기징후관리, 수색·구조·구급 지원, 긴급통신 지원, 자원봉사관리, 임시적환장 운영 및 폐기물 처리 등에서 높게 나타났음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데이터 관리 및 활용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데이터 관리 및 활용 실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오산시, 울산광역시, 전주시 등 4개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담당자의 기술에 대한 신뢰 및 활용 역량,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역량, 데이터 분석과 예측 역량 등을 강조하였으며,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채용 등 인력관리를 강조하였음

- 조직 차원에서는 연구개발 영역과 적용 영역, 분석가와 실무 담당자,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경찰 등),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사이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스템 차원에서는 데이터 생성 및 수집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업무 프로세스 관리 분석 및 모형 개발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및 재난안전데이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프로세스 도입 및 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개인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 담당자들의 재난안전데이터 활용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직 차원에서는 프로세스 관리, 부서 또는 관계자 간 협력 및 소통,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를 운용하기 위한 규칙과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시스템 차원에서 다수의 재난안전관리 담당자들은 재난안전데이터의 표준화와 자동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난대응 프로세스 모델링 정립의 일환으로 실제 재난대응 시 어떠한 업무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였음
 - 응급복구 장비 보유현황 파악 및 지원,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장기 수습복구 방안 마련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과 같은 기능에서 부하가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7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의 개선방안

주제어 국고보조사업 | 지방재정성과 | 지방재정효율성

연구책임 김성주 • 연구진 전영준, 최정우, 김윤승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국고보조사업 운영 제도 문제의 개선

- 국고보조금(국비)과 사업내용의 주요 관리 법규 구분이 필요함
 - 보조금이 아닌 사업의 성과제고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의 역사성과 사업의 세부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부처에서 관련 법규를 운영해야 함
- 국고보조사업 성과평가와 환류체계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함
 -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지원, 예산삭감, 사업폐지 여부는 사업의 성과나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관련 법에 성과평가와 결과 반영에 대한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국고보조사업 운영 구조 문제의 개선

- 국고보조사업 사전 적격성 심사 시 지방 의견수렴 항목을 신설해야 함
 - 기재부의 국고보조사업 사전 적격성 심사 절차 중 기초자료 분석 단계에서 현재의 4가지 분석 사항 외에 광역시·도 및 시, 군, 구의 해당 지자체 의견조회 결과 항목을 포함해야 함
- 중앙-지방간 공통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함
 - 국고보조사업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지방이 공통 성과지표를 설정 및 측정하여 다음 해에 개선된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PDCA 형식의 사업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함
 - 일본사례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중앙-지방간 구조적 한계 개선을 위해 일본 PDCA 형식의 관리체계 도입 검토가 필요함

» 국고보조사업 운영 행태 문제의 개선

- 국고보조사업 모니터링 제도가 강화되어야 함
 - 보조금 위주의 보조금 관리 법률의 한계가 그 사업비의 집행률이 중간 점검 목적이 큰데, 사업비가 아닌 사업내용 중심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사업부처별 지자체 간담회 정례화 및 성과지표화가 필요함
 -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고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각종 간담회, 워크숍 및 기타 협의회의의 건수를 실적에 포함시켜서 성과를 지표화하여야 함
- 정치적 행태요인에 따른 사전 검증절차의 강화가 필요함
 - 국고보조사업 결정에 있어서 외부환경 문제로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행 및 이·불용액과 같은 재정비효율성 문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서 급히 결정되는 사업의 경우도 재정투입 사업은 전수 외부 검증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소비세 인상에도 지자체 재정력은 하락

- 2020년 이후 지방소비세가 점차 인상되었으나 지방재정력(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있음

» 국고보조사업 기획주체와 집행주체 이원화 한계 극복 및 성과제고 필요

-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을 기획하는 주체(중앙부처)와 집행하는 주체(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성과창출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지금까지처럼 국고보조금에 대한 접근이 아닌 지자체에서의 국고보조사업 성과 제고가 필요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국고보조사업 관리·이론의 이론 분석

- 국고보조사업의 개념 및 정부 간 관계에서 국고보조사업 관리, 국고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문제점,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의 정리조건, 관련 선행연구가 정리되어야 함

» 국고보조사업 관련 법령, 운영현황 및 한계 분석

- 중앙 및 지방의 국고보조사업 관련 법령, 부처별 보조금 관리규정 및 지침 비교, 국비와 지방비 현황, 이·불용액 현황,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의 한계를 분석함

» 국고보조사업 평가사례 분석

- 기재부 시행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6년간의 평가사례를 분석, 추진단계별(기획, 집행, 성과) 지적사항을 제시함

» 설문조사(지방공무원), 심층인터뷰(중앙공무원) 실시 및 분석

-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16일 동안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결과에 대해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담당자 9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FGI) 실시 및 추진단계별(기획, 집행, 성과)로 인식, 애로사항 등 분석함

»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의 개선방안 제시

- 개선 대안으로 기본방향은 제도적, 구조적, 행태적 원인에 의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제도적, 구조적, 행태적 원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각각의 방안을 제시함

1-8



인구감소지역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발전전략 연구

주제어 인구소멸 | 지역발전 | 지방소멸

연구책임 이소영 • 연구진 이원도, 윤소연, 김주락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인구감소지역 상호 연계성 강화 전략 수립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다소 불명확한 생활권 연계협력 개념 및 제도 재편
 - 인구감소지역들의 지역연계구조 분석을 통해 인접한 자치단체 외에도 연계구조가 확인
 - 인구감소지역 연계협력은 광역-기초간, 인구감소지역-비인구감소지역, 비 인접 지자체 간 등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이 포괄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상 생활권의 개념은 국토계획법상 생활권의 개념과 상충되므로, 특별법상 개념을 연계권 또는 연계협력권으로 개념 재정립
- 자치단체 관심이 낮은 인구감소지역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 및 이해 제고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분석결과, 연계협력사업은 전체 4,667건 중 77건(1.6%)에 불과
 -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지역별 공동관심주제 도출 및 이를 통한 연계협력사업 발굴 제안
- 인구감소지역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 지자체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부문 시상제도 마련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투자계획서 평가시 지역 간 연계협력성(5%) 고려로는 유인책 미작동
 - 연계협력사업을 선호하지 않는 자치단체에게 보다 강력한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필요

구분	대안 1 :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서 평가배점 상황	대안 2 : 지방소멸대응기금 별도 협력재원 마련	권고안
인구감소 지역 연계협력 활성화 재정 인센티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계획(80%)/ 계획 연계성 (20%) 중 지역 간 연계협력성 (5%)로 되어 있는 투자계획서 평가배점 상황 조치 강점: 현재 제도 체계내에서 큰 개편이 아니므로, 관련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 용이 약점: 단일 자치단체별로 투자 계획서를 수립하는 현 시점에서 평가배점 상황 조치로 연계 협력 활성화의 강력한 유인책 이 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협력사업 재원 설정 강점: 연계협력사업에만 배분되는 별도 재원으로 자치단체 협력사업 적극 발굴 약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1호) 변경 등 별도의 절차 및 관계 지자체간 합의 도출과정 필요 	연계협력 활성화의 관점에서는 대안2를 권고

-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배분 기준 변경은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조정이 필수적이겠지만, 현 체계에서 변경안은 관심지역 배분 기준인 5% 정도로 제안 가능

구분	내용	변경안	비고
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 시·군·구의 배분금액은 시·군·구가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 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중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에 배분 (중략) 	고시 제2022-11호 제5조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 상호 연계 강화를 위한 상호연계성 분석 및 제도 개편 전략 마련

- 인구감소지역대응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중요
 - 현재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실태 및 인구감소지역 상호연계성 분석을 기반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개편 전략 제언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실태 분석

- 인구감소지역 관련법 및 인구감소지역의 연계협력사업 분석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책무 규정 마련
 - 100개 지역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상의 연계협력사업 분석한 결과, 전체 4,667건 사업 중 연계협력사업은 77건(1.6%)에 불과, 협력 유형도 광역-기초 간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

»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인구감소지역대응정책 특성 분석

- 100개 지역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한 중점협력방향 도출
 -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지역의 공동관심주제는 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② 관광 및 문화자원 연계 개발, ③ 이주민 정착 유도 및 지역사회 안정화, ④ 생애주기별 복지 및 돌봄지원, ⑤ 교육 및 청소년 지원, ⑥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기술 활용 6개 주제로 도출
 - 광역자치단체별 분석결과, 중점추진사업은 차별적으로 나타나므로, 지역별 공동협력사업 제언

»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간 상호 연계성 분석

- 2024년 최초 공표된 통계청 실험통계 생활인구 DB를 활용한 지역 간 상호 연계성 분석
 - 분석결과, 지역 간 상호 연계는 주중과 주말, 권역별로 차이를 보임
 - 예컨대 대구/경북의 인구감소지역은 주중에 인접한 지방 대도시권과 연계성이 높게 나타나다가 주말엔 인접한 경북 기초지자체 간 연계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인구감소지역별, 지역위계별, 시기별, 시도별로 다양한 연계구조가 확인

» 인구감소지역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 기본방향으로 다양한 협력방식의 지원, 상호 소통 및 이해 제고, 행·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
- 추진전략으로 다양한 지역 간 연계구조의 육성, 지역위계별 연계구조 활성화, 중점 추진분야별 연계협력사업 발굴 촉진, 지역별 공동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연계협력사업의 재정 인센티브 제공, 연계협력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제시

1-9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선방안 연구 II : 지방사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주제어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지방재정투자사업 | 영향권 | 지불거부응답
지불주체 및 기간 | 거리소멸함수 | 로지스틱회귀분석

연구책임 송지영 · 연구진 이민기, 정연백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국가사업과 다른 지방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CVM 개선방안 도출

- 국가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다른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특성 고려
- CVM 적용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적정 영향권 모색
 - 도시지역권근린공원 유형에 대하여 영향권의 확대 가능성 확인
 - CVM 적용대상 사업의 영향권 설정 방안 제언
- 미지불응답(지불거부응답) 특성 분석을 통한 CVM 적용상의 개선방안
 - 미지불응답을 배제하고 WTP를 추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선택편의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WTP 추정방식의 개선 필요
 - 초기제시금액 설정, CVM 설문 표본추출 방식의 개선, 영향권 확대 필요성, 지불주체와 지불수단의 일관성 확보, 설문지와 보기카드에서 현실감 있는 가상시장 구성을 위한 유사시설 사례 보완, 해당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홍보 등 이해도 향상, 설문 연령대 확대 등 CVM 고도화 방안 제언
- 지불주체 및 수단의 적정 적용방안
 - 지불주체는 가구, 지불수단은 세금, 지불기간은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설문 응답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데 보다 타당함을 재확인

» CVM 가이드라인(지침) 개발의 단초마련

- 2개년도에 걸친 계속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CVM의 고도화 방안 마련
 - 계속 연구에서 축적된 CVM 설문 원자료(raw-data) 분석결과에 기초한 LIMAC CVM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1차년도(2023년): CVM 수행과정 전반에 걸친 쟁점사항 도출 및 WTP 영향요인 분석
- 2차년도(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고유특성을 CVM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 CVM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사항 제시

- 3차년도(2025년) LIMAC CVM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세부적인 추가 논의사항 제시(설문조사 유의사항, WTP 추정모형, 보고서 기술방식 등)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LIMAC CVM 가이드라인(지침)마련을 위한 계속 연구 필요

- LIMAC CVM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의 필요성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 있어 CVM의 유용성과 높은 활용성에 기인하여 (가칭) LIMAC CVM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의 필요성 증대
 - LIMAC은 '23년부터 CVM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계속 과제로 수행
- 지방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CVM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가사업과 차별화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CVM 관련 DB 및 기초연구 수행의 중요성 인식

III 연구의 주요내용

» CVM 적용에 있어 지방사업의 특성 반영방안 모색

- 거리-소멸함수(distance-decay function)를 적용한 CVM 적용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적정영향권 탐색 및 적용방안 모색
 - 거리-소멸함수(distance-decay function)를 적용하여 적정영향권에 대한 사후 검증
 - WTP의 거리조락 현상 확인 및 CVM 적용사업들의 적정영향권 탐색
 - 도시지역권근린공원 유형에 대하여 영향권의 확대 가능성 확인
 - CVM 적용대상 사업의 영향권 설정 방안 제언

- **미지불응답(지불거부응답) 특성 분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미지불응답 및 지불거부응답 영향요인 도출
- LIMAC 타당성조사 설문 원자료를 바탕으로 미지불응답 및 지불거부응답의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 초기제시금액의 중요성, CVM 설문 표본추출 방식의 개선, 영향권 확대 필요성, 지불수단과 지불주체 일관성 확보 필요성, 65세 이상의 고령자층의 설문대상예의 포함 가능성 확인

- **지불기간과 지불주체 변화에 따른 지불의사 및 최대지불의사금액 변동 분석**

- FGI를 통해 지불기간과 지불주체의 변경에 따른 응답자의 지불의사의 변동 분석
- CVM 설문에서 적정 가상적 시장을 구현할 수 있는 보기카드 및 시나리오의 중요성 재확인
- 불의 현실성을 감안할 때, 5년의 지불기간 및 가구를 지불주체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을 제언

기본연구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1 지역청년지원에 관한 법·제도 수립방안 연구



2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 방안연구

3 지방규제 영향분석 방안 마련 연구

4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5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

6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구분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

7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성화 방안

8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우발채무 관리 방안 연구



2-1

★ 우수과제



지역청년지원에 관한 법·제도 수립방안 연구

주제어 지역청년 | 청년인구유치 | 지방소멸 | 균형발전 | 지역발전

연구책임 박진경 • 연구진 김민영, 조정찬, 최민정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청년 지원 정책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청년 지원 정책틀 마련

- 국가와 지자체는 모두가 청년 발전을 도모해야 할 공동의 책무자이며, 지방은 특색있고 의미 있는 청년정책의 산지로서 정책 일선에서 청년의 니즈와 가치를 파악하며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해야 함
- 청년의 도약과 성장을 돕는 지역발(發) 청년정책의 추진, ‘지역’과 ‘청년’을 연계하는 지역 격차 완화정책의 추진,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는 지역청년정책 추진
 - 지역청년 지원 정책의 비전은 청년은 지역에서 꿈을, 지역은 청년에서 미래를, 목표는 청년과 지역이 함께 하는 로컬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
 - 지역청년 지원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로컬 청년 생태계 구축, 지역활력형 청년 비즈니스 기반 창출, 수도권과 지역의 청년 상생발전 전략을 제안

» 새로운 입법으로 (가칭)지역청년지원법 제정(안) 제안

- 지역청년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서울 및 수도권과의 교류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은 (가칭)지역청년지원법 제정
 - (가칭)지역청년지원법은 청년과 지역의 주도에 의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 지역청년특구 지정 및 전략계획·운영계획 수립,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 및 지역청년특구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청년특구사업시행, 지역청년특구에 대한 특례 등 법률의 내용별로 조문을 세분화하여 구성안 마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꾸준한 청년정책에도 청년의 체감도 미흡, 지역청년 삶 여건의 지역 간 격차 확대

-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 하에서 청년정책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지만 청년의 삶은 더욱 치열해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들의 체감도가 모두 미흡
 -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역에서는 인적자원이 취약해져 지방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과다 경쟁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들이 동시에 어려움에 직면

» 지방시대를 향한 균형발전과 지역청년정책 연계 추진 필요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로 지자체는 지역산업을 가동시키고 지역의 인구를 재생산하는 주체인 청년인구를 ‘핵심 인적자원’으로 인식, 지역에 청년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 중
 - 청년세대는 전체 인생에서 실패를 해가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 인생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기 위한 청년인구의 유치가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을 살리기 위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
-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유출을 저지하고, 지역과 청년이 함께 안정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필요
 - 청년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청년 지원 정책을 제안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지역청년의 선호와 특성 및 지역 간 청년인구의 실태 분석

- 청년세대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물질적 소유보다 개인의 삶의 질과 경험을 더 중시하며, 효율성과 경쟁보다는 연대와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김
 - 탈물질주의적 성향을 가져 감성적인 소비와 지역 특색을 중시, 워라밸과 유연한 일자리 탐색 경향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新 라이프스타일과 선호도를 반영한 지역청년정책 추진 필요
-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입이 두드러지게 커지고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간 청년인구 불균형 심화

» 지역청년 지원 제도 및 정책분석을 통한 법·제도적 한계 검토

- 중앙부처의 지역청년 지원과 관련되는 법·제도 분석을 통한 관련 제도의 한계 검토
 - 국무조정실 소관 「청년기본법」,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 기존 지역청년 지원 제도 및 정책이 기본적인 전국 공통의 청년지원 법률이어서 ‘지역’과 ‘청년’을 연계한 정책 설계 필요, 하향적·산발적 청년정책의 수정 필요

» 지역청년 지원 정책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지역청년의 유입거점 조성,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 정책 등 다양한 정책사례 검토
 - 서울청년센터와 미국 포틀랜드 ADX, 지역청년 인재교류 및 파견 사례,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와 넥스트 로컬 등 수도권과 지방 청년의 연계협력 정책사례, 다부처 협업사례 등
-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여 지역 여건 및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하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 실현
 - 지역이 단기적·가시적 성과에 목매지 않고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 청년정책의 분권과 특화발전 지원 필요

2-2

우수과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 방안연구

주제어 행정체제 | 지방자치제도

연구책임 최지민 • 연구진 최인수, 전대욱, 강영주, 김지수, 주희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안 도출

- 본 연구는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여 다음의 8가지 개편 대안을 검토함
 - 구역개편: ①광역 시·도 간 통합, ②시·군·구 통합, ③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 ④대도시 거점기능 강화
 - 기능연계 및 조정: ⑤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⑥지방자치단체 기능조정
 - 기능전달구조의 개선: ⑦하부행정기관 효율화, ⑧자치계층 재검토
- 8가지 개편 대안들은 현황, 대안의 세부검토, 추진 시 검토사항의 3가지 항목(대안에 따라 일부조정)으로 검토됨

» 추진체계와 검토과제를 제안함

- 범정부 행정체제개편 추진 조직과 추진법제(행정구역 통합에 집중)를 제안함
 - 가칭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법 제정 후 위원회 전환), 국회 차원의 행정체제개편 관련 특별위원회 등 설치 병행 필요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행 특례 규정은 약 15년 전에 발굴하여 제도화된 내용이므로, 행정수요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적실성을 재검토하여 2가지 대안을 제안함
 - ① 제1안: 별도의 법을 신설하여 현재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산재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함
 - ② 제2안: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3장 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에 규정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담음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함

- 행정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정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대응의 탄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 출발함
-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다양한 수단을 논리모형에 근거하여 대안의 연계구조를 제시함
- 지방행정체제의 8개 대안들은 현재 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정방식으로 과제의 목적과 적용방식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과제 간 연계성을 확보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제3장 구역개편

- 제 3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을 다루고 개편에 따른 검토과제를 제안함
 - 광역 시·도 간 통합: 인접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광역적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함
 - 시·군·구 통합: 지역 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하고자 대안을 검토함
 - 대도시 중심지 기능 설정: 대도시와 주변 지역 간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하여 중심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부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안을 검토함

» 제4장 구역개편

- 제4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기능 분배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체제개편의 대안을 다루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기초 간, 광역 간, 초광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함
 - 기능 배분과 연계: 자치단체 간 협력 가능 분야를 설정하고, 교통·환경·문화 등 주민 밀착형 서비스에서의 협력을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와 절차를 살펴봄

» 제5장 기능전달 구조의 개선

-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고 있음
 - 계층제 조정: 다양한 유형의 행정구역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 재배분은 전통적인 2계층제의 변화를 야기하게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다양한 계층제 개선 유형을 살펴봄
 - 하부행정기능 효율화: 읍·면·동 단위에서 권한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일괄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들을 제시함

» 제6장 추진체계와 검토과제

- 현재의 권고안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차원에서 권고하는 것으로 추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구조가 필요함
- 이에 과거 정부와 국회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체계를 검토하여 행정체제 개편 추진 조직과 추진법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함

2-3

지방규제 영향분석 방안
마련 연구

주제어 지방규제혁 | 자치법규정비 | 지역경제·일자리

연구책임 전대욱 · 연구진 정기용, 김필, 김해솔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자치규제 영향분석제도의 추진과 영향분석서(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고시, 훈령 등)에 의한 등록규제의 신설·강화를 전제로 한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방법론을 개발·제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의 경우 규제의 신설·강화시 국무조정실에 의해 마련된 규제영향분석이 시행되고 관련 방법론에 관한 매뉴얼이 보급되어 있으나, 자치단체 소관 규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특성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함
 - 국가적인 규제영향분석 체계와 조화를 이루며 자치단체에 부합하도록 영향분석안을 개발: 표준형·간이형 영향분석서 서식, 영향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 영향분석서 작성매뉴얼(각 항목별 작성요령) 및 시행을 위한 법제 개선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등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가적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자치단체 적용

- 국가적인 규제품질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규제영향분석의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위한 사전연구로서 지방규제를 위한 분석방안의 개발 필요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국가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신설·강화되는 중앙부처 규제의 경우 영향분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향후 자치단체로의 확대시행이 필요함

- 다만 국조실의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특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국조실의 매뉴얼과 일관되면서 동시에 지자체와 지방규제의 특성에 부합하는 분석방법론 및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론 및 매뉴얼의 개발·제안을 목적으로 하며, 그 시행을 위한 법제개선안 및 국조실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의 지자체 적용전략 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의한 자치규제 및 관리현황 분석

-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개정 및 자치규제 등록현황 분석
 - 2023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총 제·개정건수는 33,706건(제정 8,538건, 개정 25,168건)이며, 이 중 등록된 자치규제는 총 771건(신설 358건, 강화 116건, 완화 295건)이고, 자치규제의 등록률은 2.3%에 불과하므로 규제등록제 활성화 필요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관리현황 및 관련 제도적 기반 분석
 - 2023년 기준 등록규제 관리를 위한 규제영향분석서 적용사례는 광역 46건 및 기초 319건이며, 6개 광역 및 8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규제영향분석의 표준양식이 존재하나 자치단체마다 상이하므로, 전국적 차원에서 등록규제 관리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표준양식 필요

» 규제영향분석의 개념·제도와와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의 개념 및 국내외 사례분석
 -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이론적 배경 및 주요 내용과 국내 적용현황(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 매뉴얼, 부산, 대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11개 사례, 영국 규제영향평가제도, 호주의 통합 규제영향분석 제도, 미국의 특정 규제영향분석 등 최근 동향 및 제도운용 사례 분석
- 해외사례 분석 및 지방규제 적용 위한 시사점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 규제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 타당성(비용-편익분석) 등을 중심으로 분석의 적용이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 여건을 감안한 간소화된 방법과 지방규제로 인한 지역내 이해관계자의 규명 그 영향관계를 파악 등을 중점적으로 적용방안 개발 필요

» 자치규제 영향분석 방안 및 정책제언

- 자치규제 영향분석 방안 개발 및 제언
 - 자치규제 영향분석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자치규제 영향분석 작성유형, 자치규제 규제영향분석 구성안(분석개요, 정량적 및 정성적 비용-편익분석 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종합결론),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 항목별 작성요령(매뉴얼) 등 개발 및 제언
- 자치규제 영향분석제도 추진을 위한 법제개선안 및 추진방안 정책제언
 - 자치규제 품질관리 체계의 정비방안, 자치규제 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화 법령 정비방안, 전문가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지방규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국조실 시스템 연계방안,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의 시범적용을 통한 지방규제 영향분석 방안의 환류 등 논의

| 표 | 지방자치단체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

구분	항목	비고
1. 자치규제 및 규제영향 분석의 개요	1-1. 자치규제 사무명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1-2. 분석대상 유형	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장
	1-3. 소관부서·작성자	소관 실·국·과·담당 명기(규제실명제)
	1-4. 규제조문 (근거법규 및 분류)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위임법령 및 조례·고시 등 자치법규 등 명칭과 조항
	1-5. 규제의 내용	규제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요약
	1-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현황·규모 등
	1-7.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결과 요약	정량·정성적 비용편익 분석 요약표
	1-8. 일몰설정 여부	규제 존속·재검토 기한 및 사유 (규제일몰제)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2-1.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현황자료 등 공공부문 개입 필요성

구분	항목	비고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2-2 자치규제의 목표·기대효과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 또는 규제도입의 기대효과
	2-3.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효과 대비 규제수단의 적절성 및 사회적 부담정도
	2-4. 자치규제의 지역경제 로의 영향·파급효과	경쟁제한 및 기업활동 영향,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가능성 등 체크(필요시 내용 작성)
	2-5. 비용·편익 (또는 효과) 분석·비교	계량적 비용편익 분석 또는 규제·신설 강화의 정성적인 긍·부정적 효과 분석 세부사항 기술
	2-6. 정책적 고려사항	자치규제 정비계획, 규제순응도, 이해당사자 협의·의견수렴 결과, 현재 기술수준, 유사사례, 규제대안의 대체가능성, 존속기한의 타당성, 기타 행정적 영향요인·실효성(집행자원·능력, 절차·민원 등) 등 해당여부 체크, 필요시 내용 작성
3. 종합결론 및 기타	3-1. 분석결과 요약	비용·편익(또는 효과) 분석 및 기타 고려사항 종합
	3-2. 기타 의견	기타 규제의 타당성과 관련된 중요 의견 등
	3-3. 별첨	규제대안의 적절성 입증자료, 언론기사 등 별첨

2-4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주제어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 재외국민 유형별 관리 방안 |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완화

연구책임 이재용 · 연구진 김수동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및 기대효과

- 재외국민 유형별 개선 방안 제시
 - 재외국민 유형을 2015년 1월 22일 이전/이후 이주자와 국외 출생자를 구분하고, 유형별 맞춤형 절차를 각각 제시함
 -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입법과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행정 효율성 제고
 - 주민등록번호 기반 서비스 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 제거,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사회적 형평성 보장
 -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
 - 의료·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정책제언

- 재외국민 맞춤형 고유식별번호 도입
 - 기존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호환이 가능한 13자리 고유식별번호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법적 요건 완화 및 기술적 호환성을 고려한 비용의 최소화가 필요함
 - 고유식별번호 발급 시 재외공관과의 연계를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입법 및 행정 절차 개선
 - 주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재외국민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
 - 재외국민 등록 및 주민등록번호 발급과 관련한 특례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2016년 7월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라 재외국민 대상 주민등록제도가 개편됨
- 국외출생자, 국내 주소지가 부존재하는 국외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선거권, 교육권, 금융거래, 행정서비스 등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함

» 연구의 필요성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의 주요 이슈 검토와 함께 문제점 및 관련 현안 진단이 필요함
- 현행 제도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의 도출이 필요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재외국민 유형별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

재외국민 유형		현행	개선방안
2015.1.22. 이전 이주자	유형1: 주민등록말소 이주자	입국 후 재등록	[재등록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신청 서류 필요 등 온라인을 통한 기존 정보에 대한 시스템 정정 신청 개선 • 입국 전 재등록, 본인 외 위임자를 통한 재등록 절차 간소화 • 해외에서 재등록 방안 •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입국과 동시에 주민등록재등록 신청 방안 • 온라인 재등록 방안 • 재외공관에서의 주민등록사무 처리 방안
	유형2: 주민등록 비전산화 이주자	입국 후 재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규등록 방안 • 재외공관을 통한 신규등록 방안 • 주민등록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고유식별번호를 활용한 인증 방안 • 재외공관에서의 주민등록사무 처리 방안

재외국민 유형		현행	개선방안
2015.1.22. 이후 이주자	유형3: 주민등록 이력 이주자	-	-
	유형4: 주민등록 무이력 이주자	입국 후 재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신규등록 방안 재외공관을 통한 신규등록 방안 주민등록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고유식별번호를 활용한 인증 방안 재외공관에서의 주민등록사무 처리 방안
해외 출생자	유형5: 주민등록 이력 해외출생자	-	-
	유형6: 국내 미입국 해외출생자	입국 후 재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신규등록 방안 재외공관을 통한 신규등록 방안 주민등록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고유식별번호를 활용한 인증 방안 재외공관에서의 주민등록사무 처리 방안 기존 해외이주신고가 불가(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에 대한 제도 개선

주: 유형3(2015.1.22.이후 이주 주민등록 이력자)과 유형 5(해외출생 주민등록 이력자)의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이용 가능하므로 별도의 논의 불필요

» 관련 주요 입법 방안

• 특례규정 신설

- 2015년 1월 22일 이전 해외 이주자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위한 특례 규정 도입이 필요함
- 국내 입국이 어려운 재외국민은 영사 대리로 주민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
- 예외 규정을 통해 행정상 관리주소나 부모의 최종 국내 주소를 활용한 등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재외국민 주민등록 사무처리위원회 설립**

- 행정안전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어 주민등록 사무의 심사 및 의결을 담당할 수 있음
- 영사관을 통한 주민등록 사무 처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주민등록 절차 및 방법 개선**

- 주민등록 시 요구되던 기존의 30일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할 수 있음
- 재외공관에서의 전자적 주민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음

2-5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



주제어 착한가격업소 | 물가안정화정책 | 소상공인지원

연구책임 유보람 · 연구진 이서희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착한가격업소 지정 사업 지역물가 안정화 기여

- 지역별·품목별 물가 비교 결과, 착한가격업소의 지방 물가 안정화 효과 간접 확인됨
 - 착한가격지정업소의 경우 상권에서 낮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최대 12년 전 수준까지 유지되는 품목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착한가격업소 지정 사업체의 질적·양적 평가 결과 긍정적 결과 도출

- 착한가격지정업소와 미지정업소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비교 결과 지정업소 소폭 높음
 - 2015~2020년의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비교 결과 지정업소는 미지정업소와 비교하여 각 10.13%p, 10.03%p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통한 체감효과 조사 결과 긍정적 응답률 높게 나타남
 - 가게 이미지 개선(39.7%)과 홍보 효과(21.9%)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요금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19.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착한가격업소 성과의 안정적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도 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제도적 측면의 법적 지원 근거 부족으로 제도의 성과가 확산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2023년 최초 국비 15억 원이 지원되었고, 2024년 18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지원근거 부재함
 - 재정 및 제도지원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확산 필요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 타당성을 확보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발전 방안 모색 필요

-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인지도가 낮고 체계적인 법·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지속되는 고물가에 대비한 대응 정책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 제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제도의 타당성 검토가 선제 되어야 하며, 제도의 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모색 필요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법률체계 정비 및 예산 지원 필요성 검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동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재정지원에 관한 책임을 갖고 있어 안정적 지원 근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인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경우 독립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예산확보를 비롯한 안정적인 지원과 운영이 가능함
-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도와 유사한 타 부처 제도 검토 결과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어 2024년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 이에 2024년 1월 9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일부개정을 통해 백년가게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결과

- 착한가격업소 지정 사업 지역물가 안정화 기여에 효과가 확인됨
 - 지역·품목별 물가 비교 결과, 착한가격업소는 인근 상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지방물가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착한가격 지정업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상승효과가 확인됨
 - 착한가격지정업소와 미지정업소의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2015-2020년) 분석 결과 지정업소는 미지정업소와 비교하여 각 10.13%p, 10.03%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사업자 체감 효과는 긍정적 평가가 확인됨

- 가게 이미지 개선(39.7%)과 홍보 효과(21.9%), 낮은 요금 유지(19.8%)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보통 및 부정 응답률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모색

- 착한가격업소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체계 정비가 필요함

-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외에 법률에 포함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통해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독립된 법률 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다만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추진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규 법률 제정 가능성이 낮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확대를 통한 독립적 법률제정이 필요함

- 지역 물가 안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 물가 안정화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으로 관련 부처는 다양한 물가안정화 정책을 운영중에 있어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업팀을 구성하여 상시 협력체계 마련하고, 부처 간 협력과 조율 담당이 필요함
-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부처 간 물가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별 수집 데이터를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함

2-6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구분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

주제어 인구소멸 | 지역발전

연구책임 김민영 · 연구진 이소영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현재 관심지역에서는 소액 기금사업만이 추진되고 있어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인구 유출을 억제할 ‘인구 댐’으로서 잠재력이 있는 관심지역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제안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함
 -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를 관심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함

» 주변 지역과 연계한 인구감소지역 발전 전략 수립

- 인구감소지역 지원은 대부분 개별 시·군·구 차원에 국한되어 있어 인구 유출을 막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발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9조(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해, 지역 간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함

- 관심지역은 인구 댐 역할을 수행할 만한 잠재력이 큰 만큼,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고,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인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1~'22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과 '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틀 마련

- 법률상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舊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정의되며, 이에 근거하여 2021년 10월 19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
- 이와 별도로, 2022년 2월 10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3호) 제2조 제3호에 따라 18개 시·군·구가 관심지역으로 추가 지정됨
- 2022년 6월 9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 행·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확립됨

» 관심지역까지 재정 및 특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 대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관심지역 지원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관심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관심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장기적 지역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검토 및 진단

-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행정 지원’, ‘재정 지원’, ‘정보·인재 지원’의 세 측면에서 조사하고,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을 분석함

- 이를 통해 관심지역이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행 지원체계에 편입하여 준하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함
- 아울러, 시·군·구 단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정·협력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모색함

» 해외의 지방 인구감소 대응 사례 조사

- 한국과 사회적 특성이 유사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조사하여, 지방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함
- 두 국가의 권역 형성 방안 및 상향식 사업 제안 방식을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일본의 지방창생 응원세제와 대만의 벤처 자본 활성화·신용 보증 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재정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함
-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위해, 일본과 대만의 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례를 토대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정책 검토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살펴봄
- 또한, 인재 파견, 자원 매칭, 대학 협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재 지원 수단을 종합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심지역 지원 필요성 정립 및 선정 기준 마련

-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8대 지표를 활용해 전국 시·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심지역 선정 기준(안) 세 가지를 제안하고 각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함
-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수의 약 20%를 관심지역으로 지정하는 현행 방안을 유지하는 방안 역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함

2-7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성화 방안



주제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역투자 | 정책펀드 | 민관협력(PPP)

연구책임 박진경 · 연구진 양원탁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방향 설정 및 비수도권 특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유형 제안

- 실질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협치를 통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안착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는 관광·레저형, 스마트 농업형, 친환경·신재생 에너지형, 혁신산업단지형, 의료·헬스케어형을 고려 제안
 - 정부와 지자체는 민관을 지원하기 위한 one-stop 절차 마련, 성과확산을 위한 정책홍보 및 포상, 부단체장 회의 등 중앙-지방의 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해서 제도 홍보 강화
 - 지자체는 민자유치 사전준비와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고, 적절한 규제와 통제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하며, 프로젝트 추진 단계별 로드맵 마련

» 중앙부처간 협력적 추진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조직 정비

- 중앙부처간 협업 및 정책소통 강화 등을 통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중앙과 지자체간 다각적 협력체계 구성,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조직 정비
 - 지자체는 기획실 산하 전담조직인 지역활성화 투자 TF 설치·운영, 지자체 펀드 투자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 고려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분 자펀드 결성방식 개선(안) 제안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 개정, 자체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하한선 적용 등의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안) 제안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비수도권의 지역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펀드 방식의 새로운 제도 도입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낮은 단발적·소규모 투자 위주, 시장보다는 관 주도로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의 지속가능성 취약
 - 지자체의 사업기획 경험 부족과 지방사업 특유의 각종 리스크로 민간이 지역투자에 소극적
-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지역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지원 필요

- 민간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충분한 규모의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해 펀드방식 도입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기본적으로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출자를 통해 조성되므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수익성 기반 공익성 사업 추진 필요
- 무엇보다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수익성 있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설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먼저 개발·기획하고 반대로 자산운용사를 찾아야 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제도 및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 발생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법·제도 및 민관협력(PPP) 이론, 국내 정책펀드 논의

- 지자체·민간 주도 신속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도입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법적인 출자근거와 관련되는 행정안전부의 법령과 고시, SPC 설립 및 추진절차와 관련되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 등 법·제도 분석
-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등 관련 정책펀드 현황 분석 및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의 차별성 검토
 - 효과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문적인 펀드 운용체계 마련, 자펀드 운용사 및 투자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역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 결정 객관성 확보 필요

» 최근 건설경기 동향 분석 및 국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분석

- 고금리, 고물가, 인건비 및 공사비 상승, PF 위축으로 투자위축, 건설경기는 더욱 악화
 - '94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기존에 추진 중인 비수도권의 시설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 고금리 상황 속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가 활성화되기 힘든 여건
 - 비수도권 지역 맞춤형 사업유형 발굴 필요, 추진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적용 필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프로젝트 추진, 특혜시비 등 논란 방지 대책 마련,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 및 부처 협업 강화, 지역의 애로사항 반영 및 지자체의 역량 제고 중요

» 국내외 민관협력 지역활성화 추진사례 분석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펀드로 선정된 주요 프로젝트 사례 분석
 - 충북 단양군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경북 구미시 국가산단기숙사 건설사업 등 현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펀드로 선정된 주요 프로젝트 사례 분석, World Bank 등 해외사례 분석
- 국내외 민관협력 사례분석 결과 지자체의 사전적인 민관협력 준비단계가 필요하고, 지자체의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역량 중요
 - 지자체의 구체적인 정책들과 로드맵 필요, 지자체가 펀드에 적합한 구조체를 만드는 역량 중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의 융복합 사업 발굴

2-8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우발채무 관리 방안 연구

주제어 우발채무 | 보증채무부담행위 | 예산외의 의무부담 | 부지매입확약 | 민간투자사업

연구책임 송지영 • 연구진 김상기, 김지훈, 박선영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우발채무 개념 구체화 및 분류

- 우발채무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 중 우발성이 있는 금전적인 채무로 정의
- ‘우발성’을 기준으로 우발채무 분류
 - 발생가능성이 높고 금액추정의 신뢰성이 있는 경우 ‘(가칭)추정채무’로 분류하여 발생자체가 불확실하고 금액 추정이 어려운 우발채무와 구분

» 주체별 관리대상 우발채무 유형 설정 및 관리방안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우발채무와 행정안전부가 관리할 우발채무의 구분
 - 재정적 리스크가 낮은 우발채무 유형은 행정안전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리역량의 선택과 집중
- 우발채무의 누락이 없도록 우발채무 사례 구체화 및 회계처리방법 명확화
-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표준협약서(안) 제시
- 우발채무 사업의 투자심사기관 차등화(금액기준) 및 재심사 규정 필요
- 지방채발행한도 산식에의 우발채무 반영기준 개선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발채무가 포함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방안 필요

- 우발채무로 인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 심화
 - 2017년 5월 의정부경전철(주)가 운영적자로 파산하면서 해당 시설관리운영권의 가치에 해당하는 해지시지급금을 의정부시가 지급해야 하는 문제
 - 2022년 9월 발생한 강원도의 출자기관인 중도개발공사 공사채에 대한 보증채무 불이행 선언
- 우발채무 범위의 모호성
 - 우발채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사전적으로는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가 되는 것을 의미
 - 행정안전부는 우발채무에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포함된다고 규정
- 우발채무의 발생사유와 역할, 점검 필요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우발채무의 개념 및 재정관리제도

- 우발채무의 개념
 -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상에 ‘우발채무’라는 용어는 규정된 바 없음
- 우발채무의 유형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를 우발채무로 분류하고 있음
- 우발채무사업의 투자심사, 의회의결, 지방채발행한도액
 - 우발채무 사업은 총사업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함(2024.1.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제1항 개정)
 - 우발채무 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이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
 - 지방채발행한도액 산정시 우발채무는 50% 반영

»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 규모를 연도별, 자치단체별로 분석하고 우발채무 유형별 사례를 분석함
 -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전체 우발채무 규모는 2020년 2조 5,104억원에서 2022년 3조 4,876억원으로 증가함
 - 기초자치단체의 우발채무 금액, 재정적 위험도가 큰 유형의 우발채무 비중이 높음

» 사업추진방식별 우발채무 사례

- SPC(PFV) 사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기관 협약사업,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위탁 개발사업 등 사업추진방식별 사례 분석
 - 부동산 PF사업에서 적정 자기자본 비중이 필요하며, 지자체 신용보강시 금리인하가 필요하고, 충실한 사업성 검토, 공정한 리스크 분담이 필요함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협약체결에 앞서 적정수요 추정 등 객관적 사전검토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관리대상 우발채무 사업 설정 및 관리방안

- 감사원 감사결과 및 전문가FGI를 통해 우발채무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리사업과 행정안전부 관리사업을 설정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우발채무 사업에 대한 관리
 - 정책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차입금, 공공토지비축협약은 행정안전부 관리대상에서는 제외
 - 현재 우발채무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민간투자사업 MRG 등도 우발채무에 포함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 사업 관리방안
 - 협약체결시 전문가 활용, 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 매입조건 구체화, 리스크와 수익의 공정한 분배 등
 - 협약체결이후 사업모니터링, 지자체 귀책사유 지양 등
- 행정안전부의 우발채무 사업 관리방안
 - 중앙투자심사 내실화,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우발채무 컨설팅 강화
 - 우발채무 기재 상세화 및 누락방지, 지방채발행한도 산식 조정, 투자사업 이력관리 연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라남도 2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서울특별시 3 서울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전적격성 검토 방안 연구

부산광역시 4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추진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 5 카지노 관리·감독 권한의 지방이양 타당성 연구

광주광역시 6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정책 추진 방안 연구

대전광역시 7 대전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울산광역시 8 울산형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방안

세종특별자치시 9 지방시대 종합타운 건립 필요성 및 활용방안

충청북도 10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11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방안

경상북도 12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방안 연구



3-1

★ 우수과제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제어 제주혁신도시 | 공공기관 이전 | 지역경제효과

연구책임 김도형 · 연구진 이원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제주혁신도시 성장거점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 추진 전략의 마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구축한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을 도모
 - 혁신도시와 연계한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산업 육성 전략,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과의 연계방안을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이전공공기관, 지역기업, 지역 대학 등의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전략 설계로, 인재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종합적인 사업추진 로드맵 수립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전공공기관-대학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발굴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추진

» 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 유치를 위해 현행 규정의 상위 순위 업종 분양자가 하위 순위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주 업종 70% 이상 유지 조건을 60%로 하향 조정
 -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1순위에서 3순위로 변경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주업종 70% 이상 유지 조건부 허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용지 간 유치대상이 상호 변경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
-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력산업은 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으로, 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클러스터 입주 기업과의 협업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

- 특히 그린에너지 솔루션은 국립기상과학원과의 협업 R&D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로, 도내·외 기후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공공기관 이전 완료에 따른 제주혁신도시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의 필요성 제기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5년에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9년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의 성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
- 제주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지 6년이 경과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추진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응

-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목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립형 지방화’에서 ‘혁신도시 고도화와 성장거점 구축’으로 전환(국토교통부, 2023: 5)
-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도시 정책이 요구

- 제주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검토하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연계 특성을 고려한 상생발전의 방향성 제시 필요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이전공공기관에 따른 격차 변화

- 지역경제성장 변수 중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변화는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안정된 것으로 분석
- 서귀포시의 산업 종사자로 서귀포시의 지역내총생산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
 - 특히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서귀포시의 지역내총생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서귀포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는 양상으로 나타남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별·산업별 연계 변화 효과

- 지역 내(서귀포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015년 이전공공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글로벌센터)의 이전은 약 56억 원의 산업별 생산효과를 유발
 - 이들 5개 이전공공기관 이전에 의해 타 산업의 중간재, 중간재 생산 산업의 발전은 각각 약 482억 원, 356억 원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
- 반면에 지역 간 파급효과는 분석 결과 약 51억 원의 지역 간 산업별 생산효과를 유발
 - 이들 5개 이전공공기관 이전에 의해 타 지역의 타 산업 성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특성은 제주도 전체에 대한 전·후방 효과에 비해 서귀포시의 산업 간 전·후방 효과가 큰 것을 의미

» 연수생 방문으로 인한 지역별·산업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연수생의 소비는 소비재 소비를 통한 서귀포시의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외 타 지역의 산업 활성화로도 연계
- 2023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연수생 증감 변화를 2013년~2019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평균 이용자와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역 내 효과는 감소하였고, 지역 간 효과에서도 COVID-19 외부충격에 의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2

★ 우수과제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주제어 지역발전 | 인구감소

연구책임 이원도 • 연구진 김주락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전략 마련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생활인구 측정을 위한 기준 및 적합성 검토

-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정된 유동인구 기반 생활인구는 시공간 단위 및 집계방식 등 측정방식에 따라 큰 편차가 존재함
- 데이터의 한계점 극복 및 정책적 활용을 위해선, 체류시간 최소요구치의 객관성 및 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점검표 작성 등 타당성 확보 방안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세밀한 공간해상도로 측정된 생활인구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국지적인 공간적 집중(혹은 분산)에 대한 직관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유형별 생활인구 확대 전략

- 산정된 생활인구의 특성은 대도시형, 복합형, 그리고 농어촌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도시형은 일평균 유동인구가 많고, 청년인구 비중이 높고, 다른 광역지자체 체류인구 비중이 높은 여수, 목포, 순천이 포함되어 있음
- 복합형은 광양, 나주와 같이 주중 생활인구가 주말보다 많고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서, 관광 및 여가보다 통근 및 통학 등 정기적 생활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
- 농어촌형은 대부분의 전남 기초지자체가 속해있으며, 일평균 유동인구가 적고 고령인구 비중이 높으며, 전남 주민등록인구 비중이 높은 특성을 지님

• 제도적 보완

- 지자체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추가하여 지역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

- 또한, 생활인구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선 지자체에서 규제 개선 수요와 특례 제안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하고 자율성을 지닌 생활인구 확대 시책 마련이 필요함
- 나아가 다양한 시공간 범위 및 '관계의 단계'별 생활인구과 같은 다양한 대안적 인구통계 작성검토가 필요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적 인구통계의 필요성

•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대안적 인구통계 활용 필요

- 인구감소시대에 총인구 감소와 구조적 변화에 따른 양적, 질적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지역에 새로운 인구 위기가 발생하였음
- 새로운 인구 위기가 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변화의 양상을 빠르게 파악하고, 위기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지역 인구 현황 파악과 추세 변화 분석을 통한 시의성 높은 인구통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정책 활용을 위한 전남의 대안적 인구통계 분석

-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대안적 인구통계가 도입되고 있으며, 새로운 자료수집 방식을 통해 생산된 통계는 인구의 정태적·동태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
- 대안적 인구통계의 하나로서, 지역 인구감소 위기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그리고 등록외국인 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었음
-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지정된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만 산정·공표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선 전라남도(이후 전남) 생활인구 현황과 특성을 '대안적 인구 기반'의 '대안적 데이터'를 통한 인구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음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전남 생활인구 현황과 특성 분석에 따른 정책적 활용 방안

• 전남 생활인구 산정

- 최신(23년도 4월 기준) 각기 다른 시공간 단위(시군구, 읍면동 단위)에서 수집된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남 생활인구를 추정하였음

• 전남 생활인구 현황 및 특성 분석

- 추정된 전남 생활인구의 기술통계 및 탐색적 시공간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음
- 기초지자체(시군구)별로 추정된 일별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약 2.2배로 나타났으며, 주말이 평일보다 높았으며, 중장년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노년, 청년, 그리고 유소년 인구순으로 나타남
- 읍면동별로 추정된 일별 생활인구는 국지적인 집중양상과 변동성을 통해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전남 체류인구 중 청년인구는 담양, 나주, 화순, 그리고 여수가 핫스팟(hot spot)으로, 해남-강진-보성-고흥군 일부 읍면동은 콜드스팟(cold spot)으로 나타났음
- 다른 시공간 단위에서 추정한 생활인구는 규모와 지역별 분포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 향후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의 생활인구 추정에 있어 집계방식과 시공간 단위의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 전남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방안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정주 및 체류, 그리고 외국인까지 포함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인구유형별 현황과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시의성 있는 인구현황과 특성이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되기 위해선 1) 지역 재원확보의 기초자료, 2) 지역 정주여건 확충을 위한 검토자료, 그리고 3) 국토 재구조화를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선 추정된 전남 기초지자체별 생활인구 기반으로 한 생활서비스(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탐색을 의료·숙박·관광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음

3-3



서울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전적격성 검토 방안 연구

주제어 지역균형발전 | 지방예산회계 | 지역경제·일자리

연구책임 전대옥 • 연구진 선소원, 황도원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전적격성 검토 매뉴얼(안) 개발

-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대상·규모 결정을 위해, 관련된 시·구청 사업 및 민자사업(화이트사이트)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전적격성 검토 가이드라인 제시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전적격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개발·제시함
 - 사전적격성 검토서(안)의 주요 내용: ① 핵심목표지표 선정 검토서 (사업신청 부서, 검토담당 부서와 협의) → ②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 기여도 산출 검토서 및 근거자료 작성(사업신청 부서) → ③ 적격성 판단기준 체크리스트 작성(사업신청 부서) → ④ 검토담당 부서 확인 및 위원회 위원별 최종검토서 작성 (검토담당부서 확인후 균형발전위원회 상정 및 판단)
 - 위원회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적격성 검토서의 활용은 위원회 실제 운영여건 감안하여, 사전적격성 검토서를 위원회 내부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본 위원회에 앞서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안, 본 위원회에서 위원별 평정을 통한 활용방안 등을 제시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성과관리·평가체계의 일환으로 사전적격성 검토제 도입

- 사전적격성 검토제 도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취지 제고 및 성과견인 필요
 -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해,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춰 지역균형발전 현황 모니터링을 시행(일반현황 모니터링 지표 활용)하고, 중장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성과평가를 시행(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

- 이러한 성과평가 체계에 있어 특히 연차별 특별회계의 편성이나 민자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 정책수립 단계에서 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전적격성 검토제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 및 민간투자 개발사업(화이트사이트 제도) 등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전적격성 검토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개념적·제도적 검토 및 서울시 추진방안

•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성과관리를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제도 현황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및 정책.법제 추진현황,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평가제도의 개념과 적용, 국가의 균형발전사업 평가제도 리뷰, 국내의 사전적격성 검토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평가제도의 시행 현황 및 주요 검토사항 등 고찰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관리·평가제도 추진방안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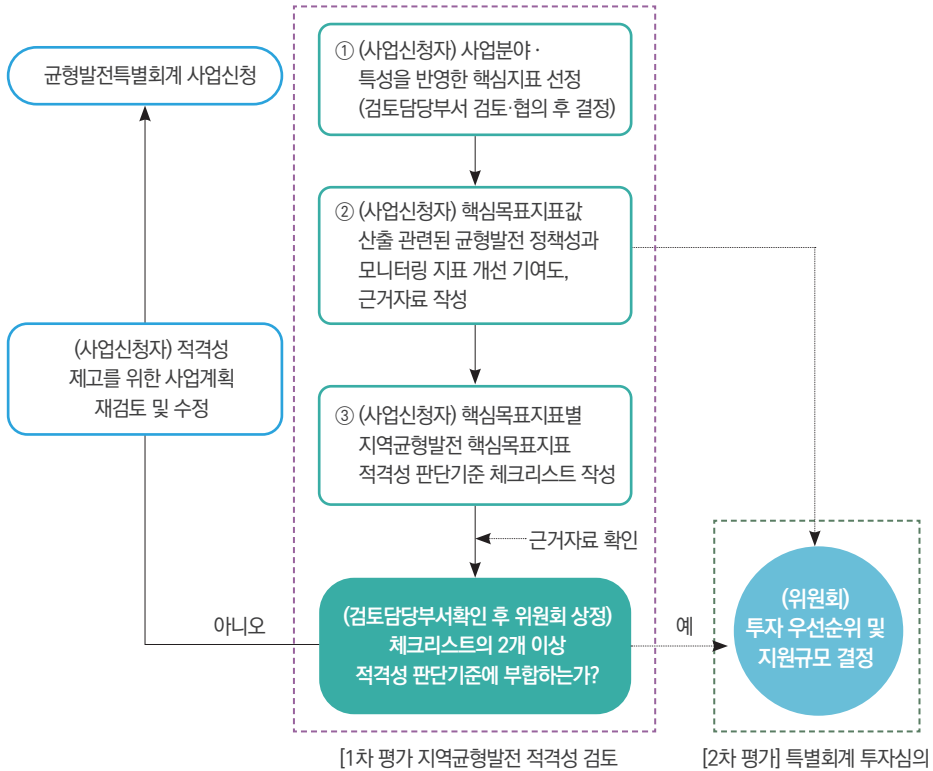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법제 현황, 추진체계 및 5개년 계획체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세부사업 개괄 및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특별회계 투자사업 및 기타 사업(화이트사이트 민자사업 등) 추진 현황 등 사전적격성 검토 대상사업의 특징 및 검토방안에 관한 시사점 도출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성과관리·평가 체계의 특성,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모니터링·평가방안 및 정책평가 지표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수립 및 성과관련 검토사항 리뷰,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사전적격성 검토제도 도입의 의의 및 검토제도 도입의 추진방향, 검토시 고려요인 등 고찰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전적격성 검토 도입방안 및 시범적용

• 사전적격성 검토방안: 검토체계의 구상 및 검토서 서식 개발·제안

- 지역균형발전 정책취지에 부합성 검토를 위한 핵심목표지표 선정(사업신청 부서, 검토담당 부서와 협의), 기 구축된 성과관리·평가 체계와의 일관성 제고 및 정책성과의 견인을 위한 사업목표치로서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 기여도의 산출, 적격성 판단기준 자가 체크리스트,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의사결정 등의 절차에 따른 검토서 및 작성매뉴얼 개발 및 제안

[그림]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전적격성 검토 절차 및 흐름도



• 사전적격성 검토방안의 시범적용을 통한 실제적 검증 및 시행방안 시사점 도출

- 서울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등 권역별로 기 추진되었거나 또는 추진 중인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도출된 사전적격성 검토서를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검토방안의 실제적 타당성 검증 및 검토방안의 수정·보완을 시행
- 아울러 시점적용에 있어서 관련 사업추진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검토서의 적용시 유의사항 및 검토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제시

3-4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추진 방안 연구

주제어 지역발전 | 지역경제·일자리 | 지방분권

연구책임 윤소연 · 연구진 김도형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인프라 조성을 통해 남부권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임
-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여건과 대내외적 정책 동향, 국내·외 제도 및 사례조사를 통해 부산광역시가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전략을 제시함
- 이는 향후 부산광역시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 3대 전략 분야(물류, 금융, 디지털·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 제언
 - (국제적 물류도시) 공항·항만·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항만·공항 배후단지를 기반으로 복합물류 서비스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세계 금융 중심지)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 정비, 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보, 부산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특화된 금융 분야 개발 및 육성 등이 중요함
 - (디지털·첨단산업 중심지) 기술 역량 강화와 혁신·연구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지원, 국제협력 강화,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종합계획 수립 등 필요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의 성장동력 마련 필요

-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남부권 거점도시 육성 지원 추진
 - 정부는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를 통해 부산의 발전을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로 꼽으며, 수도권과 남부권을 양대 축으로 한 균형발전 계획을 제시함
-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 성공을 위한 실행력 제고 필요
 -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의 성공적인 도입과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간의 유기적 연결 방안과 국제적 수준의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결조건 등 실효적인 규제 개선 및 제도 도입을 위한 다차원적인 검토 필요

III 연구의 주요내용

»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여건 및 현황 검토

- 글로벌 도시로서 부산광역시의 경쟁력과 잠재성 분석
 - SWOT 분석을 통해 부산광역시는 종합적인 글로벌 도시로서의 인지도나 경쟁력이 다소 미흡하나 부문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국내 관련 정책분석
 - 국내 주요 특구제도 및 국내 경영환경 및 선호도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특구를 통한 세제·규제 특례 적용의 한계와 국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사례를 통해 투자유치 경로 다양화 및 산업구조 다각화가 정책 성공을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남

» 국외 글로벌 허브도시 사례 분석

- 싱가포르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 싱가포르는 언어적 요인과 함께 지리적 위치, 문화적 다양성, 정치적 중립성, 깨끗한 정주환경과 높은 교육수준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

- 다양한 보조금 제도와 지원정책, 능력주의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두바이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 두바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전 세계적인 허브도시로 급성장한 배경에는 전략적인 위치, 적극적인 경제 개방 정책, 과감한 도시 개발 계획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자유무역지대(IFZs) 등 기업친화적 규제 환경을 조성하면서, 자국민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함

• 홍콩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 중국 본토 및 아시아 주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낮은 세율과 간소화된 규제 환경을 통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설립·운영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함
- 강력한 금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무역·물류·관광 등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를 다각화해 옴

»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추진 방안 제언

• 기본원칙과 방향, 목표 및 추진전략(안) 제시

- 기본원칙: ① 균형발전과 국가 전반의 경쟁력 확보, ② 비교우위 분야 개발과 차별화된 규제혁신·특례를 통한 경쟁력 확보 ③ 경제구조 다각화, ④ 언어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과 시스템 구축, ⑤ 포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 구축, ⑥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 추진방향: ① 국제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치 확립, ②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 구축, ③ 사회적 포용성과 형평성을 보유한 국제도시 구축을 제안
- 비전: ‘대한민국 新 성장동력,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 목표: ‘국제적인 물류도시’, ‘세계 금융 중심지’, ‘디지털·첨단산업 중심지’
- 추진전략: ① 공항·항만·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혁신전략 추진 및 항만·공항 배후단지를 기반으로 복합물류 서비스 인프라 구축, ②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 정비, 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보, 부산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특화된 금융 분야 개발 및 육성, ③ 기술 역량 강화, 혁신·연구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지원, 국제협력 강화, 인력양성

3-5



카지노 관리·감독 권한의 지방이양 타당성 연구

주제어 지방분권 | 조직관리

연구책임 최지민 • 연구진 강영주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카지노 관리감독의 개념 정의를 통해 사무를 확정하고 이양의 논리를 개발함

- 카지노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종합한 뒤, 유사중복되는 사무를 통합하고, 개별 사무를 유형화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대상 사무의 목록을 도출함
 - 카지노 관리감독 사무는 크게, 계획 수립 및 관리, 교육 및 윤리, 매출 및 회계 관리, 상시감독 및 모니터링, 시설관리 및 검사, 중독 예방 및 관리, 허가 및 명령, 협조 및 지원의 총 8개 차원으로 분류함

» 차등적인 이양가능 사무의 권한이양 절차를 검토함

- 전체 사무중 이양이 타당하다고 판정된 사무는 47개로 추출하였으나, 이양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토대로 시점별 이양추진 사무를 유형화하여 맞춤형 전략을 도출함
 - 1영역(단기과제로 추진필요): 총 15개 사무로 내부관리 성격의 사무는 10개, 외부환경 관리성격 사무는 5개, 감독행위 성격사무는 0개로 도출
 - 4영역(중기과제로 추진필요): 총 24개 사무로 내부관리 성격의 사무는 6개, 외부환경 관리성격 사무는 12개, 감독행위 성격사무는 6개로 도출
 - 2영역(장기과제로 추진필요): 총 8개 사무로 내부관리 성격의 사무는 2개, 외부환경 관리성격 사무는 4개, 감독행위 성격사무는 2개로 도출

» 기타 이행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제시함

- 권한이양의 절차와 단기적으로 이양가능한 1영역 사무를 기반으로 한 조직을 설계하여 15개 사무 수행에 1개팀 5명(팀장 포함)을 조직구조를 제안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카지노 신설에 따른, 카지노 관련 행정수요의 확대

- 2024년 2월 인스파이어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에 대한 최종허가를 취득하고 3월 3일 공식 개장함
- 카지노 공급확대에 따라 각종 위반사례가 증가에 따라 관내 카지노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 대두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주민의 비중이 높은 인천의 경우, 관내 외국인 카지노라고 할 지라도 해당 업장이 유발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카지노 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관리·감독의 적정 범위 설정의 어려움이 존재

- 운영과 관리감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개념상 현행 카지노 관리·감독기능은 카지노 감독의 기본 기능을 카지노 허가(licensing), 회계(accounting) 및 법·규정집행(enforcement)을 포괄적으로 아우름
- 관리·감독의 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원화되어 있어서 통합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함
 - 카지노 산업의 인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이나 관리·감독권한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담당
- 현행 카지노 관리·감독의 관리체계의 기구와 인력의 제약으로 인한 관리 감독의 공백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카지노 산업을 규제할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를 고려한 총괄적인 법·제도에 관한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음
 -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의 관점(조직도상 서비스산업 유치과)에서 카지노를 접근하고 때문에, 사행산업의 진흥에 방점이 찍힘
 - 그 결과 외국인 전용출입 카지노라는 점에서 카지노 운영과 관리전반에 사업장이 속한 지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편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카지노 관리·감독 기능의 지방이양 필요성 검토

- 각종 통계자료 및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국내외 카지노 산업의 전반적 추이를 분석함
- 카지노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연혁 및 관련 법제분석, 국내외 운영사례를 통해 카지노 관리·감독 체계 개선의 쟁점을 도출함
- 인천 관내 현황(정책수요, 제도적 맥락) 분석을 통한 카지노 관리·감독 권한의 이양 필요성을 확인함

» 권한이양의 타당성 검토

- 카지노 관리·감독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 관리·감독 기능을 정의하고, 검토범위를 확정함
- 기존의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논리구조를 검토하여 권한이양에 필요한 모형 및 검토기준을 도출함

» 권한이양에 따른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경제자유구역의 법상지위와 부여되는 지역의 특례구조를 특별자치도와 비교함으로써 국가-지방의 시행가능한 카지노 관리·감독 권한의 역할을 설정함
- 이양범위와 거버넌스 구조의 관리비용요소(법제정비 비용 및 기구인력 규모 등)등을 고려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안함

3-6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정책 추진 방안 연구

주제어 지역발전 | 지역사회·공동체 | 야간관광

연구책임 김주락 • 연구진 김도형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정책 추진 방안

• 지역의 매력을 드러내는 명확한 야간관광 테마 설정

- 지역 고유의 인문·자연환경을 활용해 광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야간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시각적 스펙터클과 지역적 특성과 매력 유지 사이의 균형 확보를 위해 노력
- 관광 목적지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광주의 야간관광을 ‘매력적으로’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방식의 홍보 전략 고민

•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 분담

-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지역관광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이해당사자로서 주민 참여 통로 확보
- 도시의 야간 매력 증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연계와 협력을 통한 야간관광 활성화

- 지역 중심도시로서의 거점 기능을 활용해, 관광 목적지로 선호도가 높은 인접 전남 지역과 연계한 지역 간 협력적 관광정책 추진
- 야간관광 사업을 기존 관광명소와 연계해 방문자의 체류시간을 증대하는 시공간적 연계 도모
- 야간관광 활성화에 주민이 참여하고, 이것이 주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 관광과 지역사회가 선순환하는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관광 수용태세 개선

- 방문자의 선호를 충족하는 다양한 숙박시설 확보, 심야 대중교통망 확충, 관광안내소 고도화를 통한 효과적인 야간관광 정보 제공 등 추진

-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 시설물 설치와 점검, 주변 지역 주민 삶의 질 확인 등 관광객과 주민, 서비스 제공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간관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야간관광의 필요성 제기

- 야간관광이 유발하는 다양한 효과가 제시되면서, 각급 정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야간관광 정책을 계획, 추진 중
- 더불어 내국인의 국내여행에서 숙박 관광여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야간을 활용한 관광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짐
- 광주광역시의 여건을 고려해 바람직한 야간관광 진흥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광주광역시의 야간관광 차별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높은 상황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야간관광 이론적 배경 검토

- 야간관광의 등장과 개념, 특성과 효과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종합해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설정
- 야간관광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광경향의 변화를 다룬 문헌을 정리

»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여건 분석

- 광주광역시 관광 일반 현황과 여건, 방문자 행태특성 등을 분석하고, 상위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
-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여건에 관한 SWOT 분석을 통해 야간관광 추진 방향 설정

» 국내외 야간관광 사례 분석

- 국내외 야간관광 우수사례를 검토해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 국내사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도시 중 대전과 전주를 사례로 지역특성 및 야간관광 사업을 분석
- 해외사례는 야간에 진행되는 이벤트, 야간 특화 공간 조성 사례를 선정해 세부 내용을 조사하고, 운영 및 관리 방식 등을 분석

3-7

대전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주제어 지역균형발전 | 지방재정 |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책임 전영준 • 연구진 유보람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대전형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전략

• 대전형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SWOT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 홍보 방안과 답례품 및 기금사업 등의 발굴·개발에 보다 많은 역량 투입이 요구됨(SO 전략)
- 주요 교통시설(역사나 복합터미널) 내(內) 또는 인근에 위치한 성심당에서 제도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市)와 당해 업체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SO 전략)
- 20~30대 기(既) 기부자가 가진 넓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전형 고향사랑 기부제(특색있는 답례품 및 기금사업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함(ST 전략)
- 성심당을 통해 일종의 재미를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예: 답례품에 한정하여 이의 포장 시에 위트 있는 감사의 문구 동봉, 기부자 한정 상품 제작 등) 개발이 요구됨(ST 전략)
- 수도권 지역 가운데 대표 부촌(서울 강남 3구, 분당 등)에 해당하는 곳을 중심으로 대전형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WO 전략)
-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지한 주요 연구기관 및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 및 그 부모들을 유치할 수 있는 답례품(견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성이 존재함(WO 전략)
- 인근 충청권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WO 전략)
- 점진적인 홍보비 규모 확대 및 출향민보다는 일반 시민을 대상(타겟팅)으로 한 홍보 방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함(WT 전략)
- 대전광역시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를 환기시킬 수 있는 지역적 특색이 강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WT 전략)

- **대전형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시기별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제도 도입기(제도 시행 1~3년 차)에는 주요 목표로서 '모금 실적의 최대 달성'을 설정하고, 특정 대상(20~30대 방문객, 수도권 부촌 지역 거주 출향민)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특정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답례품을 선정 및 관리할 필요성이 존재함
 - 제도 성장기(제도 시행 4~5년 차)에는 주요 목표로서 '모금 실적의 최대 달성'과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설정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를 확대하며, 지역에 대한 2,3차 소비를 견인할 수 있는 답례품(관광상품) 개발에 보다 많은 역량 투입이 요구됨
 - 제도 정착기(제도 시행 5년 이후)에는 주요 목표로서 '기부와 성과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설정하며, 제도의 성과 자체가 주요 홍보 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세부 방안

- 홍보 및 모금 분야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 확대를 위해 고액 기부자 유치, 수도권 지역 기부 유치, 홍보대사 활용 등을 도모할 필요성이 존재함
- 답례품 분야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 확대를 위해 청년층 대상 서비스형 답례품과 과학 분야 관련 답례품 등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기금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 확대를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관 사업과 답례품 연계형 사업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존재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시행 첫해(2023년)의 전국 지자체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결과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다수의 평가가 존재함
 -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는 약 52만 5천 건의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약 650억 2천만 원을 모금하였음
 - 이는 시행 초반 낮은 인지도와 저조한 모금 실적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패를 예상하던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킨 결과임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제도의 조기 정착과 가일층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별 차별화된 전략 모색이 요구됨
 -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재정확충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사회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기부자 개인은 각종 혜택의 수혜를 통한 편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의 특성 및 강점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제도 운용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 실적에 있어 지자체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지역적 특색을 보다 잘 반영한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함**
 - 대전광역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리적·경제적 여건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다 세밀한 운용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음
 -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지출된 홍보비 대비 모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제기한바, 향후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운용 실적 제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짐

III

연구의 주요내용

» 고향사랑 기부제 주요 현황

-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한 해 동안 243개 전국 지자체의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임
 - 연령대별로 30대는 15만 4천여 건(29.5%), 40대는 14만 1천여 건(26.9%), 50대는 13만여 건(24.8%)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가 높은 비중(약 81%)을 차지함
 -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한 답례품별 구매액 비중은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수산물(7.3%) 등 순으로 나타남

»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운용 사례 검토

- 2023년 우리나라 지자체의 주요 운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담양군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전체 기부 건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가운데, 100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100만원 이상 기부) 비중(4.4%)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압도적으로 큰 수치를 나타냄
 -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실적이 수위에 있는 지자체 세 곳(전남 담양군, 전라남도(본청), 울산광역시(본청))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서 ①다양한 양질의 답례품과 ②타 부서 또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강조됨

»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분석

- 대전광역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1,484건의 기부를 통해 1억 2,270만원의 모금액을 달성함
 - 연령대별 기부 건수를 살펴보면, 30대가 514건(3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40대 383건(25.8%), 50대 207건(13.9%), 20대 174건(11.7%), 60대 103건(6.9%), 70대 62건(4.2%), 80대 이상 29건(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부자들에게 제공된 주요 답례품들을 살펴보면, 전체 가운데 '성심당 마들파운드 2호'가 가장 큰 비중(32.1%)을 차지함
-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텍스트 마이닝 및 CONCOR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전고향사랑기부' 키워드 관련 TF-IDF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20~30대 연령에 해당하는 기부자가 많으므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및 전시 행사 관련 홍보 활동을 확대해 볼 수 있음
 - '대전고향사랑기부'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의미연결망분석을 실시한 후 유사 단어 간 관계 파악을 위하여 군집분석 방법인 CONCOR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전광역시는 지역의 대표 산업인 과학과 대표 상품인 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대전광역시는 수도권과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교통 편의성이 높으며 청년층의 기부율이 높은 특징이 있으므로, 청년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대전형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전략(SWOT 전략)을 제시함
-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세부 방안을 제시함

3-8

울산형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방안



주제어 인구소멸 | 지역경제, 일자리 | 지역발전 | 지역사회공동체

연구책임 유자영 • 연구진 이경은, 김주락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추진체계 고도화 방안 제시

- 조례 상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상 지원 급여 항목 추가 및 보완
- 조례 상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의 실효성 확보
- 전담기구마련: 외국인지원과(안) 설치 필요: 인력상황에 따라 '전담인력보강', '팀신설', '과신설'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
- 울산형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협의회 구축 필요
- 정착단계별·지원분야별 지원정책 마련 필요

»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자격별 정착지원 방안 개발

- 비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전문인력 대상 체류-정착-통합 지원정책 개발결과 제시(표참조)

| 표 |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별 정착지원 방안

		비전문(E-9), 방문취업(H-2)	숙련기능(E-7-4)	전문·숙련(E-7)	내국인 주민
통·번역	현행	• 지역사회 일상생활 필요 정보 통번역			
	보완	• 작업장 지시어	• 용접·도장·부리산업 교재(이중언어)	• 용접·도장·부리산 업교재(이중언어)	• 언어 및 문화 교환 필요

		비전문(E-9), 방문취업(H-2)	숙련기능(E-7-4)	전문·숙련(E-7)	내국인 주민
노무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관련상담(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산재불가,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동,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관련) • 한국어교육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대상 노무, 상담(6시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외국인 유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외국인 유의 교육 • 재취업 지원제도 구축 • 사회보험제도 교육 • 자격전환시 노무 및 체류 지원 • 취업박람회개최(숙련기능인력 비자발급 가능 기업 참여 유도) • 기업홍보 및 취업상담, 현장 채용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형지원체계-울산형동행프로젝트’ 도입 필요: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 지원
주거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제공 기숙사 점검 및 감독 • 非 주거용 시설 점검 및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제공 기준 주거비 공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 지속 점검 및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공백 기간 지원 • 공공매입 임대주택 제공 • 빈집 재설비 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공백 기간 지원 • 공공매입 임대주택 제공 • 빈집 재설비 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교육) 숙소 및 기숙사제공 의무 교육 강화 • 외국인-내국인 간 공동주택규범 공유 및 강화
교육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한국어 교육 • 법무부 제공 안전교육(비전문인력 한하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수용성 일회적 교육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 교육(일상-직장용어) • 작업장 안전교육(다국적 언어) • 숙련기능 점수 획득 지원 교육 • 숙련기능인력접수제 가점추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습득-직무역량 교육 • 이중언어 교육(일상-직장용어, 동반가족 대상) • 작업장 안전교육(다국적 언어) • 직업능력개발 관련 교육 • 취업연계 정보제공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 교육(일상-직장용어, 동반가족 대상) • 작업장 안전교육(다국적 언어) • 직업능력개발 관련 교육 • 취업연계 정보제공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수용성 교육 3회이상 제공

		비전문(E-9), 방문취업(H-2)	숙련기능(E-7-4)	전문·숙련(E-7)	내국인 주민
보건· 의료	현행	• 민간 기관에서 비정기적으로 긴급시 제공			
	보완	• 건강보험 미가입자 의료지원 • 재난지원 대상 포괄	• 건강보험 미가입자 의료지원 • 재난지원 대상 포괄	• 건강보험 미가입자 의료지원 • 재난지원 대상 포괄	
문화	현행	• 다양한 국적 커뮤니티 지원	• 다양한 국적 커뮤니티 지원	• 다양한 국적 커뮤니티 지원	• 외국인에 대한 일방적문화지원
	보완	• 문화바우처 제공	• 문화바우처 제공	• 문화바우처 제공	• 내·외국인간 일상속 점점 강화를 통한 상호이해증진 • 물리적 공간 지원
사회 통합	현행		• 법무부 제공 사회통합프로그램	• 법무부 제공 사회통합프로그램	
	보완	• 울산형 초기정착 지원 • 고용노동부 제공 필요	• 산업현장 밀착형 사 회통합프로그램 교 육 제공 • 숙련기능인력 정착 지원금 지원 • 정주용거주비자 (F-2)변경 지원	• 울산형 초기정착 교육 지원 •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제공 • 동반가족 조기적 응프로그램(법무 부) 제공 • 사회통합프로그램 적극 연계 • 정주용거주비자 (F-2)변경 지원	• 내국인 퍼실리테 이터 양성 • 멘토-멘티 형성 • 통합모니터링단 운영 • 종합지원센터 구축

출처: 연구진 작성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로 인한 지역사회 활력 감소

- 외국인유입 증가로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 규모 유지 가능

» 생산가능 ‘외국인’ 인구의 유입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단위 정책 필요

- 중앙정부 주도의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더하여, 조선업 중심의 울산광역시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정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

» ‘울산형외국인근로자정착지원’을 통한 울산 정주 외국인근로자 증가 대응필요

- 법제도분석, 외국인근로자 실태분석, 정책수요 분석
- 국내외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사례 분석
- 울산형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방향 및 정책대안 도출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지원 법제도 분석결과

- (중앙)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제1~4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변화된 지역의 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움
- (울산) 외국인근로자 지원 추진체계인 조례, 담당부서, 지원기관 등을 검토하여 울산광역시의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수요를 파악함
 - 현재 울산에는 비전문인력, 전문인력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이들에 대하여 특화된 정착지원보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역과 외국인근로자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정착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사례분석결과

- (국외) 독일, 스웨덴, 일본의 사례를 통해 각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인력유치가 이루어졌고, 사회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목표와 수단들 차이로 인한 전달체계도 상이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함

- (국내) 외국인근로자 규모가 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조례, 전담기구, 주요사업 등을 분석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도출함

»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방안 제언

-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조례 제·개정
- 전담조직 마련
- 공공-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정책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설계: 정책 대상 및 수단의 명확화
- 내국인 주민 대상 사업 병행 필요

3-9



지방시대 종합타운 건립 필요성 및 활용방안

주제어 지방시대 | 지방분권 | 지방행정

연구책임 박재희 · 연구진 주희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결론

- (지방시대 종합타운 건립의 필요성) 지방시대 분권 거점으로서 발전가능성, 지방시대 중추도시로서 상징성, 협력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지방행정 기능의 종합성
- (지방시대 종합타운 활용성) 지리적 중심성과 지방 분권성의 대표 공간으로 활용,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국내외 지방행정 관련 주요 회의 개최 장소로 활용, 전국 단위 광역/기초자치단체 협력회의 개최 및 담당 실무자들 간의 소통 및 업무 공간으로 활용

» 기대효과

-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지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써 지방시대 종합타운 건립 준비를 적기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책자료로 활용
- 관련 중앙부처, 지방 4대 협의체 등 지방시대 연계·협력 기관에 지방시대 종합타운 사업 제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를 위한 물리적 공간확보 필요성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지방시대 종합타운 건립 사업 추진의 당위성 확보 및 발전 방향 제

» 정책 제언

- (지방시대 종합타운 건립의 추진 전략) 추진 운영 주체 분리 검토, 사업 방식 및 자원조달 방안 마련, 잠재적 입주대상 기관 유인 및 사업 추진의 공감대 형성, 잠재적 입주대상기관 유인체계 설계, 지방시대 종합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마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국회 세종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확정되었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세종특별자치시 (가칭) 지방시대종합타운 건립 추진
 - 세종시는 지방시대 정책 및 지방자치 연구 기능 수행 공간으로 지방시대 종합타운 건립을 계획

» 연구 목적

- 지방시대 종합타운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지방시대 종합타운 활용방안을 마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지방시대 종합타운의 목표 및 핵심가치

- 지방시대 종합타운의 건립 목표는 분권 기능의 집적화를 통한 지방시대 구현이며 핵심가치는 분권성, 협력성, 상징성, 종합성임

» 지방시대 종합타운의 필요성

- 지방시대 종합타운의 필요성으로 지방시대 분권 거점으로서 발전 가능성, 지방시대 중추도시로서 상징성, 협력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지방행정 기능의 종합성을 제안함
 - (지방시대 분권 거점으로서 발전 가능성) 대통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등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 (지방시대 중추도시로서 상징성) 지방자치 종합타운을 건립하여 지방시대 중추도시로서 위상 확보에 기여
 - (협력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지방시대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여 공간적 분산에서 파생되는 업무의 비효율성 및 거래비용을 해소하고 협업을 촉진하여 지방시대 정책의 성과를 견인
 - (지방행정 기능의 종합성) 국제교류 및 협력, 언론 기능을 보완하여 지방행정 기능의 종합성을 강화

» 지방시대 종합타운의 활용성

- (분권성)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는 지리적 중심성과 지방 4대 협의체 및 지역 사무소의 소재에 따른 지방 분권성의 대표 공간으로 활용
- (상징성)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국내외 지방행정 관련 주요 회의 개최 장소로 활용
- (협력성) 대통령 주재의 국정과제 논의, 전국 단위 광역/기초자치단체 협력회의 개최, 담당 실무자들 간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
- (종합성)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종합 업무수행 공간으로 활용

3-10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주제어 공유경제정책 | 공유경제기본계획 | 공유경제사례

연구책임 김성주 • 연구진 김윤승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충북 공유경제 SWOT 분석 및 세부전략 도출

내부역량	강점(S)	약점(W)
외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 모델 도입 충북형 도시농부사업 등 유사사업 성공 경험 보유 공유경제 관련 인프라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적 기반의 미비 공공 자원의 제한적 활용 공유경제 개념의 혼동
기회(O)	S-O 전략	W-O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확대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 확대 가능성 모바일 등 통신 인프라 고도화 	<p>SO: 다각적 공유자원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1: 공유경제 정책의 법적 제도적 확립 및 활용성 증대기반 구축 SO-2: 공유경제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도 중심의 다양한 정책 제언 SO-3: 공공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및 법적 제약 선결 	<p>WO: 공유경제 홍보 및 인식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1: 기존 인프라와 자원의 활용성을 높인 신규 공유자원 발굴 및 플랫폼화 WO-2: 지역사회의 잠재 자원 발굴 및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 WO-3: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위협(T)	S-T 전략	W-T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공유경제 도입에 따른 거버넌스 문제 	<p>ST: 공유문화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1: 공유경제 개념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및 참여 독려 ST-1: 플랫폼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의 증대 및 추가적 수요 확보 	<p>WT: 공유경제 거버넌스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1: 신규 자원의 공유경제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WT-2: 공유경제 모델을 통한 탈 지역 협력 모델 구축으로 거버넌스 조성 WT-3: 거버넌스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연계 협력 강화 및 조정기구 운영

» 충북 공유경제 4대 추진전략 및 11개 세부과제 제시

- 전략 ① 공유경제 정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다각적 기반 구축
 - 공유경제 정책의 법적 제도적 확립 및 활용성 증대기반 구축
 - 공유경제 정책의 기반 구축을 위해 도 중심의 다양한 정책 제안
 - 공공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및 법적 제약 선결
- 전략 ② 공유자원의 발굴 및 효율적 활용 촉진
 - 기존 인프라와 자원의 활용성을 높여 신규 공유자원 발굴 및 플랫폼화
 - 지역사회의 잠재 자원 발굴 및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
 -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 전략 ③ 주민 참여와 인식 제고를 통한 공유문화 확산
 - 공유경제 개념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및 참여 독려
 - 플랫폼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의 증대 및 추가적 수요 확보
- 전략 ④ 공유경제의 협력적 구축으로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
 - 신규 자원의 공유경제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공유경제 모델을 통한 탈 지역 협력 모델 구축으로 거버넌스 문제 해결
 -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및 조정기구 운영

» 충북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제시

-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함
 - 11개 시군 중 조례 미제정 지자체인 9개 시군의 조례제정 확산을 유도하고, 각 시군과 산하기관의 공유경제 정책 사업 관련 부서가 매우 다양하므로 전담조직 마련이 필요함
-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및 사업의 성과관리가 필요함
 - 민관협력과 중간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탄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시민단체 중심의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공유경제촉진위원회 및 협의체 등을 구성함
 - 성과관리를 위해 공유경제 사업도 포함하여(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의 형태)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 형태의 성과관리가 시행되어야 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공유경제정책 추진 중

- 2012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공유경제 정책들이 추진 중에 있음

» 충북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및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 충청북도의 경우 2022년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
- 동 조례에서 마련토록 한 충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공유경제의 개요 및 정책현황 정리

- 공유경제의 개념, 중앙과 지방의 정책현황, 충북도 및 시군의 공유사업 및 자원 현황 및 쟁점 등을 정리함

» 국내·외 공유경제 사례 분석

- 일본과 미국 등 해외사례, 국내 광역과 기초의 공유경제 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정리함
- 충북도 내 공유경제 인식조사 실시 및 시사점 제시
- 충북도민들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경험, 이용방식, 충북도의 역할, 수요 및 공급의향 등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시사점을 제시함

» 충북 공유경제의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 충북도의 공유경제 비전, 4개 추진전략 및 11개 세부추진과제,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 제시함

3-11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기관 방안

주제어 특별지방행정기관 | 정비방안 | 사무기관

연구책임 고경훈 · 연구진 김건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입법은 전북특별법에서 개별권한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종합적·포괄적으로 이양하면서 전북자치도가 자기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개입해야 하는 사항만을 전북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임
- 포괄적 기능이양의 관점에서 지방이양 추진함에는 첫째, 이양기능을 검토함에 있어 사무위임의 원칙을 고려하고, 재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를 발굴하도록 하며, 둘째, 인력 및 재원의 동시이양을 위해서 「(가칭)이양사무행·재정평가위원회」 등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인력 및 재원의 동시이양을 위한 비용산정 모델을 개발하여, 지방이양에 따라 인력과 재정이 보전될 수 있게 하여야 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중앙정부가 지역단위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종합성 및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지역주민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고경훈·주희진, 2023: 19-20)
- 뿐만 아니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하기 보다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바, 이는 현행법에도 반하는 것임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의 특성 있는 발전과 자치역량 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이 연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능 제고 및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전북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역량을 고려한 이관방안을 모색함
- 다만,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의 당위성이 충분히 논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정비방안을 모색함
-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우선 이양대상 사무로 검토되고 있는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노동 및 산림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분석함
- 제3장에서는 전부이관, 사무위임, 지휘감독권 이관 또는 시·도의회 통제, 협업체계 구축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전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모형을 도출함
- 제4장에서는 협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협업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실행방안을 제시함
- 제5장에서는 단위사무 이양의 한계 및 포괄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다음과 같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양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및 기능중심의 지방이양 추진전략을 제시함
- 제6장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완전이관을 위해 각 분야별 제주이관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완전이관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함

3-12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방안 연구

주제어 지역발전 | 민간투자 | 정책펀드

연구책임 양원탁 • 연구진 박진경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사전 준비와 민간투자 활성화 로드맵 수립

- 펀드의 투자 대상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확보, 인허가 등 행정 리스크를 고려한 프로젝트 발굴 및 지방자치단체 사전 준비 필요
-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목표, 출자구조와 분야, 재정 출자 규모, 운용체계, 연차별 계획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 활성화 로드맵’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운용 기반 마련

»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자체펀드 운용구조 마련

- 프로젝트의 분야, 유형, 위치(지역) 등에 따라 수익성과 공공성이 차이를 나타내므로 위험 분산과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에 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
- 지자체 재정,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여 출자자 구성, 유형별 출자 규모, 운용 형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별 수익성, 회수 자원 예측을 통한 주기적인 투자금 회수 및 리스크 관리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펀드 관리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 전문적인 운용을 위해 기업역량과 운용계획에 관한 운용사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정책목표 달성 또는 수익에 기반한 성과 보상 체계와 부적정 투자 관리 방안 마련
-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펀드의 부적절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지역, 프로젝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 운영

» 민관협력에 기반한 자체펀드 추진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 지역 자체펀드 기획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융복합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자 프로젝트 관련 전문가 영입과 민관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
- 펀드의 전문적인 기획과 운영을 위한 금융·민간투자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대학, 자산운용사, 건설사, 프로젝트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 자체 펀드 조성 및 체계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자체펀드 출자 근거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제1항 출자 대상에 관한 행안부 고시 개정(안) 제안
- 지방자치단체에서 펀드 방식으로 프로젝트 추진 시 수반되는 다층적인 투자심사 및 타당성 검토의 부담 해소와 프로젝트 적시 추진을 위해 재정사업투자심사제도 개선(안) 제안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 관련 별표의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펀드 출자 관련 항목 추가(제1안), 시·도 및 시·군·구가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심사 및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 면제(제2안) 검토
- 펀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 펀드운영위원회 운영 또는 행안부 차원의 총괄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펀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조례 마련 및 시·군 확산 도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 주도의 단발적·소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도입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금융 논리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에 유용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한계가 발생
- 경북은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자체펀드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제반 검토가 필요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이론 및 정책 동향

-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책펀드에 관한 개념적 논의와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펀드 조성 측면의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 활성화 자체 펀드 조성의 필요성과 의의, 펀드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제도적인 쟁점을 바탕으로 펀드 조성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

» 경상북도 현황과 민간투자사업 특성

- 경상북도의 현황과 중장기 발전계획, 공공시설 운영 현황과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자체 펀드의 투자 분야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
 - 경상북도의 시장구조와 민간투자사업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목표 설정, 수익성과 정책목표 달성의 균형을 위한 프로젝트 유형 구분 및 프로젝트 선정 등 투자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

» 지역특화 펀드 조성 및 운용 사례 분석

- 지역에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조성한 특화 펀드 사례를 선정하여 조성, 운용, 성과 측면에서 특성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펀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 지역 시장구조를 반영한 정책펀드로서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서울 Vision 2030 펀드, 런던 그린펀드 사례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펀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자체펀드 조성 방안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목표 달성과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전략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조성과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법·제도개선 방안을 제안

정책이슈리포트

- | | |
|---------|---|
| 서울특별시 | 1 서울시 소재 경로당 중식 5일제 전면 추진의 수요 예측에 대한 연구 |
| 부산광역시 | 2 부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 대구광역시 | 3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대구관광 활성화 방안 |
| 인천광역시 |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카지노 레저세 신설 방안 |
| 대전광역시 | 5 대전광역시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
| 울산광역시 | 6 울산광역시 도시 브랜드 제고 방안 |
| 세종특별자치시 | 7 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 대행 주체의 적정성 분석 |
| 경기도 | 8 경기도 미래지향적 소방력 운영 및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
| 충청북도 | 9 산업단지가 충청북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 충청남도 | 10 지방관리 향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발방안 연구:
대전항을 중심으로 |
| 전북특별자치도 | 11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 타당성 연구 |
| 전라남도 | 12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및 지역 정착 지원 방안 |
| 경상북도 | 13 지속가능한 대학-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해외대학 혁신사례 분석 |
| 경상남도 | 14 경남 투자선도지구 활성화를 위한 유사사례 연구 |
| 제주특별자치도 | 15 특별자치시도 공동협력과제 발굴 및 개정안 마련 |

4-1



서울시 소재 경로당 중식 5일제 전면 추진의 수요 예측에 대한 연구

주제어 경로당 중식 5일제 | 노인복지 | 수요예측

연구책임 선소원 • 연구진 주희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중식 5일제 전면 도입에 대한 단계적 접근 필요
 - 각 자치구별로 경로당의 중식제공 현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면 실시 속도에 차등을 두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취약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로당에 대한 우선적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로당 중식도우미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중식도우미 모집대상에 대한 여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예컨대, 1순위로 중식도우미의 기존 모집 조항인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모집이 안 되었을 시 2순위로, 65세 이상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음
 - 경로당 중식도우미의 급여를 상향시켜 중식도우미 구인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밑반찬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급식도우미 인력부족 문제와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음
- 경로당 회원 증가에 따른 경로당 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
 - 경로당은 여가활동을 하며, 노인들의 중식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시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노인 인구비율 증가

-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서울시 인구의 15.4%였으나,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8.36%로 증가

• 노인 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인 증가

- 80세 이상 인구비율도 증가하였으며, 노인기초생활수급자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노인 1인 가구도 증가함
- 1인 노인 가구 중 남자 비율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서울시 경로당 중식 현황 및 주요 문제점

• 서울시 경로당 중식 현황

- 3,609개의 경로당 중에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은 3,090개로 중식 제공 경로당의 비율은 85.62%임
- 경로당 수 대비 주 5일 중식 제공 경로당 비율은 22.61%(전국 평균인 32.93%)이었으며 식사 제공 중인 경로당 대비 주 5일 중식 제공 경로당 비율은 26.41%(전국 평균인 38.72%)임
- 주 7일 중 식사 제공 평균식사 제공횟수도 3.3개(전국 평균 4.2개)임

• 경로당 중식제도의 주요 문제점

- 중식도우미 문제, 부식비 및 운영비 문제, 시설환경 문제, 회원증가로 인한 문제, 경로당의 식단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

» 서울시 경로당 전면 시행에 따른 예산 추계

• 서울시 경로당 중식 희망 수요

- 서울시 전체 중 신규 식사 제공 희망 경로당 수는 258개로 식사 제공이 없는 경로당 581개 중 44.4%가 식사제공을 희망하였음
- 서울시 전체 중 식사 제공 확대 희망 경로당 수는 1,653개로, 1~4회 식사제공 중인 2,274개 중 72.69%가 식사제공 확대를 희망하였음

• 중식 5일제 의무 확대 시 경로당 변화

- 5일제 의무 확대 시에는 서울시 전체로 보면 519개의 경로당에서 중식을 처음 시작해야 하며 1~4회 중식이 실시되던 경로당에 추가되는 중식 횟수¹⁾도 구별로 445.28끼가 증가하며, 1~4회 중식을 실시하던 경로당은 평균 2.4끼를 추가로 준비가 필요함

1) 수치계산 : 5일제 중식 실시 시 경로당에 추가되는 중식 횟수= 식사제공 경로당 수*5-경로당별 평균 식사제공 수*식사제공 경로당 수

4-2



부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주제어 지역발전 | 인구감소

연구책임 이원도 • 연구진 윤소연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전략 작성

- 부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 특성에선 타지역 거주자의 비중과 규모가 작고, 평균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작성된 경제적 파급효과 모델 추정결과에서 생활인구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년과 중장년 부산시민이 타지역 거주민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고려할 때, 부산 인구감소지역 회복탄력성 회복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관광객과 같은 방문자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
- 또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첨단기술과 창의 및 디지털 분야와 같은 전략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정주인구 회복이 가능할 것임

• 제도적 보완

- 최근 부산은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 전환을 강조하였으며, “부산형 생활인구 모델”을 통해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강화와 지역별 활력지수를 통한 지역사회 활력 및 만족도 측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와 운영과 같이 적극적으로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또한, 부산 원도심 인구감소지역(동구, 서구, 영도구)는 부산 중구와 함께 원도심 통합 생활권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시대, 지역이 마주하는 인구감소 위기

- **지역 인구감소 심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의 현실화**
 - 국가적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별 인구분포의 격차 확대는 지역의 자생성과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
- **부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
 - 부산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3대 위험인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모든 부문에서 위기 징후가 포착되고 있음
 - 선행연구 검토에서 부산은 국가적 저출산, 고령화에도 영향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사회적 인구이동이 현재 인구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음
 - 총인구 증가가 어려운 인구감소시대엔 출산 장려 및 전입인구 증가를 통한 인구활력 회복과 일자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 인구 현황파악 및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
 - 대안적 인구통계로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포괄적인 인구에 대한 현황 및 추세 파악이 가능함
 -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선 부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과 특성을 확인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음

III 연구의 주요내용

» 부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

- **부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특성**
 - 부산 인구감소지역인 동구, 서구, 영도구의 주민등록인구와 합계출산율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며, 타시도 체류인구의 비중은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4.1배)보다 적게 나타남
 - 부산 인구감소지역은 “대도시형” 생활인구 특성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생활환경에 비해 낮은 지역매력으로 인해 지역 내 인구유입이 적고, 산업·일자리 부문의 경쟁력이 낮음

» 부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생활인구 증감이 지역 상권매출에 미치는 영향

- 생활인구가 부산 인구감소지역 소비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음식점, 유통, 숙박업 부문으로 나누어 혼합모형을 작성하여 추정된 영향계수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인
- 작성된 혼합모형 추정결과, 부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증가는 소비 매출액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종별 영향력은 차이가 있음
- 중장년 인구는 모든 부문에서 소비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 관광상품(예: 지역 체험 해상)과 일자리 지원정책(예: 신중년 경력형 취업 지원)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4-3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대구관광 활성화 방안

주제어 지역발전 | 지속가능발전

연구책임 김민영 · 연구진 양원탁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팔공산 국립공원 연계 대구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 팔공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 문화가 융합된 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여 대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지속가능한 관광 개념을 도입하고, 웰니스 및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구 전역의 관광 매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함

»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 관광객 유형별 전략 수립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팔공산 인근 관광객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관광객 유형을 등산객, 복합 문화 체험 관광객, 자연과 역사 탐방 관광객, 테마 관광 애호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관광객 유형별 고유한 관광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제안함
 - 등산객은 산 자체를 여행의 목적으로 삼으며 건강 증진과 자연 속 치유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1박 이상 체류를 유도하고 관광 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마련함(예: 팔공산 힐링 캠프, 자연 숲 치유 워크숍)
 - 복합 문화 체험 관광객은 역사적 명소와 쇼핑 명소를 함께 찾으며 대구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하려는 욕구가 강해, 문화, 쇼핑, 자연을 결합한 패키지 관광 상품을 제시함(예: 대구 문화 탐방 스탬프 투어, 프리미엄 웰니스&힐링 투어 in 대구, 팔공산 연계 웰니스 투어)
 - 자연과 역사 탐방 관광객은 팔공산 일대의 자연경관과 역사적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테마 관광 애호가는 특정 테마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행하는 경향이 있어, 문화 해설 프로그램과 경북과 연계한 광역 관광 프로그램을 제시함(예: 역사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경북 역사 탐방 패키지)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팔공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대구 팔공산권 관광 활성화 필요성 증대

- 2023년 7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고 같은 해 12월 팔공산이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팔공산 국립공원과 이와 인접한 동구, 군위군 내 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전략이 필요해짐
-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지리적·행정적 재편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과도 맞물려 있음
 - 2030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대규모 인프라 확충으로 팔공산 및 인근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대구 팔공산권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필요성 증대

- 대구 팔공산권은 풍부한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팔공산 산림축이 지나가는 등 생태 환경과 관광 자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이 필요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관광 트렌드 분석

- 팔공산권은 환경, 경제,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과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임
 - 팔공산권은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며, 최근 인근 지역이 팔공산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관광 및 웰니스 관광에 대한 최신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팔공산권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
- 또한, 국립공원공단이 발간한 ‘2024년 국립공원 탐방 트렌드 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탐방 트렌드와 도시근교형 국립공원 방문자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트렌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대구 팔공산권 관광 여건 및 자원 분석

- 제7차 대구권 관광개발계획(2022~2026),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동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팔공산 국립공원 종합관리계획, 팔공산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계획 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구 팔공산권의 관광 여건을 분석함
- 대구관광 데이터랩 등 자료를 활용하여 대구 팔공산권 관광자원 현황을 조사함

» 대구 팔공산권 및 팔공산 관광객 특성 조사

-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를 활용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대구 전역 관광객 특성을 분석하며, 특히 팔공산이 위치한 동구와 군위군의 관광객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함
- 아울러,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 내국인 유동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광객의 연령 분포, 카드 소비액, 주요 방문지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팔공산권의 관광 패턴과 소비 행태를 분석함

4-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카지노 레저세 신설 방안

주제어 지방세 신세원 | 지방재정 확충 | 카지노 레저세

연구책임 이서희 • 연구진 홍근석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외국인 전용 카지노 레저세 신설 및 확대 적용 방안 검토

- 카지노 레저세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지역 경제 및 사회적 외부효과를 고려할 때 타당성이 높음
 - 사행산업 내에서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경마, 경륜 등)에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카지노는 제외되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카지노 레저세는 안정적 세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카지노 운영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교통, 치안, 도박중독 등)를 감안할 때, 해당 부담을 감당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대상으로 한 레저세 신설을 제안함
 - 첫째, 고정세율 방안으로 세율이 명확하여 과세 기준이 간단하며, 관리와 예측이 용이하나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감소 위험이 있음
 - 둘째, 누진세율 부과방안으로 매출 규모가 큰 카지노에서 더 많은 세수를 확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누진세율이 높을 경우, 일부 카지노의 투자 위축 가능성이 존재함
 - 셋째, 혼합과세 방안으로 고정세율과 누진세율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 가능함. 다만 과세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어 행정 관리 비용 증가를 고려해야 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지방재정은 경기 변동에 취약하며 자체 재원의 확보가 점차 중요해지는 추세임
 - 기존 세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충당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레저세는 경마, 경륜·경정 등 일부 사행산업에만 적용되고, 카지노에는 제외됨. 이는 조세 형평성과 지방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불균형 문제를 야기함
- 지방재정 확충과 사행산업으로 인한 외부효과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대상으로 레저세 신설을 검토해야 할 시점임
 - 인천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관광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카지노 수익을 지방세로 활용해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카지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치안·도박중독 등 외부효과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사업자와 이용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세제 개편이 요구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레저세 과세 체계 및 현황

- 레저세 과세 구조와 특성, 제세부담금 현황 및 카지노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함
 - 레저세는 사행산업 중 일부(경마, 경륜 등)에만 부과되며, 간접세 및 소비세 성격을 가짐. 지방재정 확충 및 사행산업 외부효과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음
 - 카지노는 국세와 기금 부담 비중이 큰 반면, 지방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특히 외국인 카지노는 코로나19 이후 매출과 입장객이 회복세를 보이며, 지방재정 기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잠재적 신세원으로 검토되었음

» 카지노 레저세 국내 입법 동향 및 해외 사례 검토

- 여러 차례 카지노를 레저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됨
 -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카지노 세제를 통해 지역 개발 및 사회적 비용 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통해 합리적 세율 설계 및 세수 배분 방안을 검토하였음

» 카지노 레저세 신설에 따른 예상 쟁점과 신설 타당성 검토

- 카지노 레저세 신설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4가지로 제시하였고, 신설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 카지노 레저세 신설 시 예상되는 쟁점은 첫째, 적정 세율 설정, 둘째, 조세저항 가능성, 셋째, 지역투자 감소 및 마지막으로 행정적 복잡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카지노 레저세 신설에 관한 쟁점이 존재함에도 사회적 외부효과를 원인부담자가 부담한다는 측면, 안정적 지방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며 사행산업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음

4-5



대전광역시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주제어 지역발전 | 청년정책 | 주거지원

연구책임 김도형 • 연구진 양원탁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청년가구 주거안정 지원의 접근

-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은 단순히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청년들은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를 중요한 선결 과제로 인식
 - 안정된 주거환경은 청년들이 결혼을 계획할 수 있는 심리적·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결혼에 대한 실질적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출산과 양육의 물리적 기반으로서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제공은 필수적인 요소
 - 주거안정을 통해 청년가구가 장기적인 가족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출산율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청년가구 주거안정 지원정책의 방향

- 청년의 생애주기는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주거 수요의 특성이 나타나므로,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단계적 주거 지원이 필요
- 결혼과 출산에 초점을 둔 주거 지원 강화로, 청년 주거정책은 결혼 및 신혼부부를 특별히 배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자녀 출산 시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하거나 주거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주거 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지역사회와 연계한 커뮤니티형 주거지원을 통해 정착 의지를 강화하고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사회문제

-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도시 지역에서 청년가구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전을 포함한 도시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불안정한 삶을 영위
 - 청년층의 고용이 불안정한 문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청년 주거 불안정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
 - 이러한 배경에서 청년가구의 주거불안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청년가구 주거안정 지원의 필요성

-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안정된 주거환경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주거 지원을 통한 청년가구의 주거안정 보장은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 청년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정책은 단기적으로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 경제에도 기여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정책지원 대상 변경에 의한 시뮬레이션 분석

- 기존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주거지원 정책을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를 연계하여 파악함으로써 출산율 증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주거지원 정책의 효율성 파악
- 주거지원 정책을 청년 1인가구, 신혼부부로 대상을 변화하여 정책지원별 모형을 구축하고, 정책지원 차별화에 따른 영향을 파악
 - (시나리오-1) 주거지원 정책으로 인한 남녀 청년 1인가구 변화에서 도출되는 대전광역시 출산율 변화 도출
 - (시나리오-2) 주거지원 정책으로 인한 남녀 청년 1인가구 변화에 추가적으로 신혼부부 변화를 고려할 경우에 도출되는 대전광역시 출산율 변화 도출

- (시나리오-3) 주거지원 정책으로 인한 신혼부부 변화가 대전광역시 출산율 변화 도출

» 주거지원 정책 변동 시나리오별 출산율 증대 효과

• (시나리오-1)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

-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 1인가구를 증대시키며, 특히 여성에 비해 남성 청년 1인가구를 증대
- 일자리 여건이 양호할수록 남성 청년 1인가구는 보다 증가하며, 여성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할수록 출생아수 증가에 기여

• (시나리오-2) 청년 1인가구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

- 대전광역시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 1인가구의 증대와 함께 결혼 증가로 연계
- 여성 청년 1인가구 증대를 통한 결혼 연계로 출생아수가 증가되는 정도는 0.180으로 분석
- 즉, 대전광역시 주거지원 정책은 단순한 청년 1인가구 대상 주거지원 정책에서 결혼을 연동할 경우에 출생아수 증가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가 증가

• (시나리오-3)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

-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역시 주거지원 정책은 효과적
- 주거지원 정책 외에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수반될수록 5개 자치구의 결혼 및 신혼부부 증가

4-6

울산광역시 도시 브랜드 제고 방안



주제어 지역발전 | 지역경제 | 도시브랜드

연구책임 이소영 • 연구진 박진경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울산 도시 브랜드 리브랜딩을 위한 추진체계

- 과학적 분석 및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민관협업형 브랜드 전략 수립체계 마련
 - 도시 자산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위해서는 각종 자료와 통계, 소비자 조사 분석기법 필요
 - 도시 브랜드 수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만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민관협업형 도시 브랜드 전략 수립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울산 시정의 이해 및 도시 브랜드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참여 방식 활용
 - 브랜드 수립절차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은 사전투표, 서포터즈 운영, 타운미팅 개최 등 가능
 -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상징체계 구조가 새롭게 구성되려면 공청회 등 시민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도 함
- 도시 브랜드 개발 주체별 역할 분담

	행 정	전문가	시 민
울산 대표 자산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브랜드 추진단 구성 • 전문기관 과제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전문기관 조사 수행 • 전문가 의견수렴 (델파이 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브랜드 서포터즈/ 타운미팅 등 다양한 새로운 소통 방식 설계
경쟁력 있는 자산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브랜드 추진단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전문기관 조사 수행 • 전문가 의견수렴 (델파이 조사 등) 	
핵심 브랜드 키워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브랜드 추진단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워드 취합 및 후보군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워드 선정(사전 투표, 천인회의, 연석회의 등 다양한 참여 방법 활용 가능)
도시 브랜드 요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브랜드 추진단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후보군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디자인 선호도 의견 수렴

» 울산 도시 브랜드 수립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

- 울산 도시브랜드 수립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민관협업형 도시 브랜드 수립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차원의 추진기반 구축 필요
 - 도시 브랜드 수립과정에서 의견을 조정할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예: 도시브랜드위원회, 상징물관리위원회, 시정 관련 위원회)
 - 울산의 경우,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연혁이 없으므로, 현재 브랜드 관리 조례인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상의 개정을 통한 추진기반 확립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새로운 도시 브랜드 정체성의 재정의 및 리브랜딩 전략 수립 필요

- 공업도시로서 울산 이미지를 쇄신하고 광역시 출범 30주년 맞이 도시 리브랜딩 전략
 - 현재 활용되고 있는 ‘울산 더 라이징 시티’의 낮은 브랜드 인식도 개선 필요
- 2028 태화강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계기 도시 이미지 쇄신 수단으로 리브랜딩 전략 수립
 -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력하기는 하나, 고래, 태화강 등 과거에 비해 다양한 도시이미지 활용
- 새로운 도시 자산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울산의 새로운 도시 정체성 반영
 - 도시 리브랜딩 전략이란 기존 브랜드가 반영하지 못한 도시 정체성을 조사, 분석하고, 새로운 도시 자산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새로운 도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임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울산 도시여건 및 브랜드 실태분석

-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2차자료를 토대로 울산시민의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인식 파악
 - 울산 도시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등 울산 도시 브랜드 요소 분석 및 관련 인식 검토
- 울산 도시 브랜드 현황 및 도시 브랜드 수립 관련 추진기반 검토
 - 울산 도시브랜드 현황 및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규정 검토를 통해 향후 도시 브랜드 추진체계 및 추진기반 마련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유사 사례분석

- 국내 도시 브랜드 리브랜딩 선행 사례지역 분석을 통한 울산 도시 브랜드 시사점 도출
 - 2022년 서울 도시 브랜드 수립 과정 및 2022년 부산 도시 브랜드 리뉴얼, 2023년 자치시 출범 10주년 기념 도시 브랜드 리브랜딩한 세종 사례 분석을 통한 추진기반 시사점 도출
- 미국 뉴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국 글래스고 등 해외 도시 리브랜딩 사례지역 분석
 -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반영하여 리브랜딩 전략을 수립한 해외 유사도시 사례 분석을 통한 울산 도시 브랜드 추진기반 마련 시사점 도출

» 울산 도시 브랜드 리브랜딩 추진방안

- 새로운 울산 도시 리브랜딩 전략 수립 절차 및 리브랜딩을 위한 추진체계 제안
 - 구체적인 도시 브랜드 전략 수립 프로세스 및 민관협업형 주체별 역할 분담, 추진기반 등 제언

4-7

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 대행 주체의 적정성 분석



주제어 공공시설관리 | 조직관리 | 지역발전

연구책임 김윤승 · 연구진 전영준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 요약 및 결론

- 세종특별시 새롬 종합복지센터와 보람 종합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 대행기관 선정에 필요한 근거 및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효율성(운영수지 분석)과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음
- 세종특별시 새롬, 보람 종합복지센터의 시설관리 대행 주체 적정성 판단을 위한 운영수지 분석 결과, 제1안(세종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연간 -1,429백만원, 제2안(세종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연간 -1,564백만원으로 제1안에 비해 제2안의 운영수지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세종특별시 새롬, 보람 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 대행 주체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정책적 분석 결과 6가지 기준(다른 사무방식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대행기관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 활용,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1안과 제2안 모두 모든 기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제2안이 정책적 적합성 측면에서 근소하게 우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정책제언

-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제1안이, 정책적 적합성 측면에서는 제2안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는 향후 세종시의 종합복지센터 운영 기조에 따라 대행기관 선정에 있어서의 합리적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운영수지 분석의 경우 일부 가정을 전제로 수행된 것임을 염두에 두고서 그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세종특별시 새롬, 보람 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 대행기관 선정에 있어 보다 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후 면밀한 원가분석 작업 등을 통하여 요소별 원가요소, 서비스 원가, 시설이용료 등에 대해 한층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임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생애 맞춤형 복지시설인 광역종합복지센터를 운영 중임
 - 세종특별시에서는 기능별 특화된 광역복지센터를 지역생활권별로 운영하여 각 세대 및 장애인, 여성에게 유형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이러한 계획 아래, '24년 초 기준으로 종합복지센터 4개소가 운영 중, 향후 2개소가 건립 예정임
- 세종특별시 내 종합복지센터(광역복지지원센터)는 출연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 운영되고 있는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세종특별시에서 운영 중인 종합복지센터는 지방출연기관(사회서비스원) 등 대행기관에 의해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공시설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특히, 종합복지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에는 지방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등 복수의 기관이 존재하는바, 어느 기관이 시설관리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공공서비스 공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요구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는 6개 지역생활권별로 각각 종합복지센터가 존재하며, 이들 센터는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 행정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새롬 종합복지센터(2생활권) 및 보람 종합복지센터(3생활권)는 현재 세종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을 대행하고 있음

» 공공시설 관리 대행 주체의 적정성 분석 방법

-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외부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보통 효율성 및 공공성(또는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함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대행 운영 중인 세종특별시 새롬 종합복지센터(제2생활권)와 보람 종합복지센터(제3생활권)인바, 적절한 대행기관의 선정을 위해 해당 시의 사회서비스원(지방출연기관)과 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에 대해 대행기관으로서의 타당성을 분석·비교함
- **효율성 측면의 타당성은 재무성 분석(운영수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음**
 - 해당 종합복지센터들의 시설 관리·운영 관련 비용산정은 2023년을 기준으로 산정 및 추계하였음
-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도시기반시설의 관리방식 또는 주체 결정기준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 i)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ii)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iii)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iv) 성과측정의 용이성, v)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vi) 책임행정의 보장의 6가지 기준을 적용하였음
 - 해당 분석을 위해 법률(조례), 사업계획서 등의 문헌 검토 및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시설관리 대행 주체 적정성 분석 결과

- **세종특별시 새롬, 보람 종합복지센터의 시설관리 대행 주체 적정성 판단을 위한 운영수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운영수입) 2023년을 기준으로 임대료, 대관료, 관리비 및 주차료 수입 등을 종합하면 제1안(세종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연간 운영수입은 287백만원으로 산정되며, 제2안(세종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현 시점에서 수입 추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1안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 (운영비용)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관리운영비용을 종합하면 제1안 대비 제2안의 운영비용은 약 135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운영수지는 제1안의 경우 연간 -1,429백만원, 제2안의 경우 연간 -1,564백만원으로 제1안에 비해 제2안의 운영수지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세종특별시 새롬, 보람 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 대행 주체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정책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무 대행 관련 법률, 조례, 업무 범위 규정을 검토하여 보았을 때 제1안(세종특별시 사회서비스원)과 제2안(세종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모두 종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업무를 대행하는 데 문제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시설관리 대행 주체의 적정성 판단) 1안과 2안 모두 앞서 설정한 6가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제2안이 일부 정책적 적합성 측면(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에서 근소하게 우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제1안(세종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제2안(세종특별시 시설관리공단)보다 운영수지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정책적 분석 가운데 시설관리 대행 주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적용한 경우는 제2안이 제1안에 비해 일부 항목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제1안이, 정책적 적합성 측면에서는 제2안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향후 세종시의 종합복지센터 운영 기조에 따라 대행기관 선정에 있어서의 합리적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운영수지 분석의 경우 일부 가정을 전제로 수행된 것임을 염두에 두고서 당해 분석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추후 면밀한 원가분석 작업 등을 통해 요소별 원가요소, 서비스 원가, 시설이용료 등에 대한 한층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임

4-8



경기도 미래지향적 소방력 운영 및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주제어 소방안전 | 지속가능발전 | 조직관리

연구책임 윤소연 • 연구진 이원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소방여건 현황과 전망, 소방활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경기도 차원의 미래지향적 소방력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결과를 통해 미래 경기도 소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단기 전략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소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대형재난에 대비한 지휘체계 강화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 경기도 소방이 추진 및 개선해야 할 과제로서 다음의 5가지를 도출함
 - ① 신규 소방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② 지역별 여건 및 전망을 고려한 유연한 소방력 운영, ③ 대형재난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 ④ 조직구조 개선을 통한 지휘체계 강화, ⑤ 유관기관 연계 및 상황실 권한·책임 강화
- 경기도의 여건과 전망, 개선과제를 종합하여 미래 경기도 소방력 운영 강화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시함
 - 첫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무를 발굴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신규 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둘째, 대형재난 상황에서의 지휘체계 공백 및 행정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부 또는 국을 신설하는 개선(안)을 제안함

- 셋째, 과거·현재의 소방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량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미래 소방수요 전망을 함께 고려한 경기도 소방력 운영 효율화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한 소방력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구, 기후, 사회의 변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고려한 능동적 소방 조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경기도의 인구·사회학적·물리적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마다의 여건과 특성이 매우 달라 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역량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경기도 소방 여건 및 소방활동 현황 분석

- 미래 경기도 소방활동 관련 주요 이슈
 - (소방수요 증가) 경기도는 지난 10년간(2014~2023년) 인구 및 소방대상물 증가에 따라 예방 및 대응단계에서의 잠재적 소방 활동(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수요가 크게 증가함
 - (취약성 증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외국인 인구 등 신체적·사회적 요인에 따른 안전취약 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물리적 취약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수요 다양화) 고층 건물과 대규모 산업단지 증가, 도심 철도·광역급행철도(GTX) 지하화, 드론·전기차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다양화되고 잠재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 소방기관별 출동 현황 분석(2021~2023년, 3년 평균)
 - (119안전센터) 연평균 화재진압 출동건수는 8,250건, 구급 출동 건수는 78만 3,229건, 생활구조 건수는 18만 608건으로 나타남
 - (119구조대) 연평균 구조 출동 건수는 20만 3,218건으로 관서당 연평균 약 5,390건의 구조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119지역대) 출동한 연평균 화재진압 출동 건수는 672건, 구조출동 건수는 8,113건, 구급출동 건수는 2만 2,515건, 생활구조 건수는 5,725건으로 나타남

• 관서별 소방활동 수요변화 전망

- 경기도는 향후 11개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지역에 속한 하위 소방조직으로는 소방서 13개소, 안전센터 76개소, 구조대 13개소, 지역대 9개소가 존재함
- 소방수요 변화의 가장 큰 동인인 인구변화 전망 자료와 관서별 1인당 총 활동시간으로 미래 소방수요를 비교·분석한 결과, 소방서별 인구감소율은 광명시가 가장 크고, 1인당 총 활동시간은 연천군이 가장 낮음

»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미래 경기도 소방력 강화 방안

• 미래 소방환경 변화를 고려한 기능 및 전문성 강화방안

- 지역별 주요 특성과 미래 수요에 맞춰 신규 사무를 발굴(예시: 고령화·다민족·기후변화 대응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예방·대응 전담팀, 상황 전파·홍보 전담팀 등)
- 경험·전문성을 갖춘 소방인력을 전담 배치하고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시행

• 조직구조 개선을 통한 지휘체계 강화 방안

- 동시 재난의 발생에 따른 지휘체계 공백이나 본부장 현장지휘로 인한 행정 공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부 또는 국 신설(안) 제안

• 지역 여건 전망 및 소방활동 분석 기반의 소방력 운영 효율화 방안

- 현재 업무하중이 낮은 관서이면서 향후 인구감소로 인해 소방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 관서 통폐합 등의 효율화 필요

4-9



산업단지가 충청북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주제어 지역경제·일자리 | 지역산업 | 지역발전

연구책임 홍근석 • 연구진 전영준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 결론

• 개별 산업단지의 생산유발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충청북도 지역에 대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생산유발효과는 324,275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충청북도 10개 산업단지 중 부지조성단계와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기업입주단계에서 10개 산업단지 중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됨

• 개별 산업단지의 부가가치유발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충청북도 지역에 대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13,163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충청북도 10개 산업단지 중 부지조성단계와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기업입주단계에서 10개 산업단지 중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 개별 산업단지의 취업유발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충청북도 지역에 대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취업유발효과는 10억 원 당 139,999명으로 분석 되었으며, 충청북도 10개 산업단지 중 부지조성단계와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기업입주단계에서의 취업유발효과가 10개 산업단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개별 산업단지의 인구 유입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충청북도 3개 권역 중 동북권과 서북권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서남권의 인구 유입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거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산수일반산업단지 등의 경우 인구 유입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산업단지가 충청북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단지 조성단계 및 산업단지별 유치 업종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음
- 부지조성단계와 기업입주단계에서는 산업단지별 토목공사 관련 지출 규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 규모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숫자 및 업종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 규모가 결정되었음
 - 부지조성단계의 경우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면적이 가장 넓고 부지조성 사업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부지조성단계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가장 크게 나타남
 - 기업입주단계의 경우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준공업지역 면적이 가장 넓어 상부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기업입주단계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운영 및 관리단계의 경우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가장 크게 나타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산업단지는 착공에서부터 기업 입주 후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까지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므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이자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산업단지 조성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분석하는 것은 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정책적 측면에서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사전 예측 및 사후 평가함으로 국토 전체의 자원 활용 및 배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역 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향후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충청북도 산업단지 현황 검토

- 2024년 1분기 기준, 충청북도에는 국가 3개(11,252천 m^2), 일반 90개(77,146천 m^2), 도시첨단 3개(337천 m^2), 농공 44개(6,302천 m^2) 등 총 14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이들은 다시 3개(동북권·서북권·서남권) 권역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충청북도 동북권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이 해당하며, 국가산업단지 1개, 일반산업단지 23개, 농공산업단지 12개 총 36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충청북도 서북권은 국가산업단지 1개, 일반산업단지 58개, 도시첨단산업단지 3개, 농공산업단지 18개 총 8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충청북도 서남권에는 국가산업단지 1개, 일반산업단지 9개, 농공산업단지 14개 총 2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됨

» 산업단지 파급효과 분석 방법

- 산업단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에는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 지역경제계량모형(Regional Econometric Model),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지역투입산출모형(Regional Input-Output Model) 등이 존재함
 - 이들 방법 가운데 해당 지역산업의 특성과 분석 목적 등에 따라 적절한 분석 방법의 선택 또는 적용이 요구됨
- 본 연구는 투입-산출(I-O) 모형, 산출-산출(O-O) 모형 등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산업연관분석은 산업 간의 유기적 관계를 활용하여 산업별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측정함

» 충청북도 산업단지 파급효과 분석 결과

- 10개 산업단지(동북권: 제천제3산업단지,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충주첨단산업단지/ 서북권: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성본산업단지, 원남산업단지, 증평2일반산업단지, 산수일반산업단지/ 서남권: 보은산업단지)를 사례로 선정함
- 산업단지 조성단계를 3단계(부지조성단계, 기업입주단계, 운영 및 관리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부지조성단계와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기업입주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부지조성단계와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기업입주단계에서 10개 산업단지 중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
-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부지조성단계와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기업입주단계에서의 취업유발효과가 10개 산업단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 3개 권역 중 동북권과 서북권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된 반면, 서남권의 인구 유입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산수일반산업단지 등의 경우 인구 유입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남

4-10



지방관리 향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발방안 연구: 대천항을 중심으로

주제어 지방관리향만 | 국유지 지방이양 | 지방향만 개발

연구책임 김성주 • 연구진 김윤승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관리향만의 재정지원 확대

- 향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 개선 및 확대가 필요함
-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 향만은 국가관리향만, 향만공사관리향만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지방관리향만까지 확대가 필요함
- 향만재개발법 개정(2025. 5. 1 시행)에 맞춰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정비 또한 필요함

» 국유지 지방 이양 등 지방관리향만의 지역경제 활성화 용도로의 지원 모색

- 향만 재개발 부지를 향만시설 및 관련 공공시설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함
 - 따라서 향만 재개발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향만시설 국유지의 지방이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의 향만재개발 방식(수용 또는 사용, 환지, 총사업 정산 방식 등 3가지)은 각 개발방식별로 아래와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하므로 토지소유권 이양이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함
 - 수용사용방식: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일률적으로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써, 매입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지자체의 재정여건 상 사실상 불가함
 - 환지방식: 토지소유권을 원래 소유자에게 남겨 둔 후, 개발계획을 수립, 개발 후 투입된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개발된 토지를 돌려주는 방식인데 소유자가 해수부 1곳으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함

- 총사업비 정산방식: 토지 등 사업 대상지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일 때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를 정산하여, 사업비 만큼 토지 등 현물로 받는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인 국가의 협조가 없으면 추진 불가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항만은 지역발전의 핵심 축, 반면 노후·유휴화로 인해 재개발 필요**

- 항만은 국가성장뿐만 아니라 배후지역의 경제성장과 도시화 촉진에 이바지하기에 역사 속 많은 대도시의 발전 역사에서 항만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음
 - 그러나 항만이 물리적으로 노후화·유휴화되어 기존 항만공간에 대한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노후·유휴 항만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전국 11개 항만 및 17개 대상지가 지정되었으나, 대천항 투기장은 투자유치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가는 상황임

» **지방항만 관리주체와 소유주체 이원화에 따른 항만개발 한계 및 국가관리 항만으로의 전환 요구**

- 지방관리항의 경우 항만의 관리주체와 항만토지의 소유주체가 이원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만 개발에 한계가 있음
- 지자체에서는 항만개발의 막대한 비용으로, 지방관리항의 국가관리항 전환요구가 커지는 상황임
 - 이는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5.1.)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 항만 분류체계의 정비 연구용역(2023. 4~2024. 1)을 시행하였음

» **재개발시 막대한 매입비용 발생 및 재정분권 전환사업에 포함, 국비 보조대상 제외, 적극 개발에 제약**

- 대천항의 소유권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음에 따라 국유지 매입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지방이양항만 지원’ 사업은 2022년도부터 기존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가 중단됨
 - 이에, 지방항만은 그 관리유지 및 배후단지 개발까지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지방관리 향만 및 향만재개발계획 개요

- 지방관리 향만의 개요 및 지방이양 연혁에 대한 내용을 명기함
- 향만의 재개발 추진배경 및 재개발기본계획 개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

» 충남의 지방관리 향만 현황 및 재개발(대전향) 한계

- 충남의 지방관리 향만(연안) 현황 및 대전향 재개발 소요예산과 유지보수비 현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
- 대전향 재개발 시 예상되는 한계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

» 지방관리 향만의 토지이양 논의

- 향만개발 및 관리권한의 지방이양 시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
- 지방관리 향만의 토지 소유권 이양 논의 및 사무이양 시 토지 이양사례와 법적 요건을 검토함

» 대전향의 재개발 방안

- 대전향 재개발 여건 진단 및 향만의 재개발 사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
- 대전향의 재개발 방향 및 대전향의 재개발 추진방식을 제시함

4-11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 타당성 연구

주제어 광역교통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도로 | 광역철도

연구책임 박진경 • 연구진 이소영, 조정찬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제도개선 의 쟁점 및 필요성

- **자치분권 문제와 자치단체 공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 문제 발생**
 - 광역자치단체간 교통협력업무를 담당하는 대광위의 업무를 기초간 업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자치분권에 역행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역행하는 요소가 있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도개선의 필요성**
 - 현재 인구기준으로 대광법 적용 대상 확대 필요, 지역소멸 방지 등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의 특정지역 배려정책과 연관하여 적용 확대 필요, 지역의 특수성(새만금)과 연계한 대도시권 설정 필요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및 법적 근거 보완 논거 제안

- **대안 1: 전북특별법 개정(전주권에 국한된 특례를 추가하는 안)**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라 함) 제4편에 특례를 추가하는 방안
- **대안 2: 대광법 개정(예외조항을 만드는 안)**
 - 대광법을 개정하되, 정의규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보다 법률 마지막 부분에서 전주권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
- **각 대안에 대해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 제시**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97년 제정

-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라는 단기적인 현안 해결 목적
 - 자치사무의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문제 해결을 떠넘기려 하며 신속한 공동해결을 지연시키는 현실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 간 교통업무 분쟁을 조정하고, 시·도 간에 광역교통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특별시나 광역시가 위치해 있지 않는 경우 대광법 미적용

- 전라북도와 같이 특별시나 광역시를 끼고 있지 않은 지역은 대광법이 상정한 광역교통권과 무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로 분류되는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다면 이들 도시 상호 간과 이들 도시와 인접 시·군 사이의 교통인구를 고려할 때 「대광법」에서 설정한 광역교통권과 같은 법적 취급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이에 지역의 특수성(새만금)과 연계한 대도시권 설정, 지방소멸 방지 등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용 확대가 필요한지 검토 필요

III

연구의 주요내용

» 광역교통시설 및 대도시권의 용어 정의 및 지정요건 검토

-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그리고 기타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차휴게소,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광역버스운송사업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적 범위는 '대도시권'
 -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의 입법 논거 논의

-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 해결 목적

- 기본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가 있는 거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도에 걸치는 광역도로나 광역철도 등을 지원하는 법률로 출범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국가 목표보다는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라는 단기적인 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
 - 광역자치단체간 교통업무 분쟁 조정, 시도간 광역교통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 대광법 관련 법제 검토

- **‘도청’ 또는 ‘도청소재지’ 관련 법제**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등
- **「국가재정법」 등 재정관련 법제**

4-12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및 지역정책 지원 방안

주제어 외국인 정책 | 지역경제·일자리 | 인구소멸대응을 위한 외국인 유입

연구책임 정기용 • 연구진 주희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외국인정책 개선방안

• 외국인 유치 및 지역정책 지원 방안

- 전라남도과 외국인 정책환경이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방안은 비자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지역정책 방안은 외국인 우수인력 생활환경 개선 등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 가족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라남도의 외국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광역비자 도입 재입법 추진과 함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함

• 정책 분야별 외국인 우수인력의 유입 및 정책지원 방안

- (경제분야) 산업별 빈일자리 개선을 위한 인력 수요조사 실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한 전남-대학 간 유학생 유입 등
- (안전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의료비 지원 확대 등
- (통합분야)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내국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 등
- (협력/인프라분야) 도-시군-민간 외국인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국 광역자치단체 간 연합을 통한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비자 도입 재입법 추진 등

» 비자제도 개선방안

• 지역특화형 비자 개선방안

-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D-4-3)에도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R코드) 신설 필요
-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이후 우수한 고교 유학생이 졸업 후 전라남도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체류 자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필요

• 광역비자 도입 재입법 추진

-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역비자 도입 재입법 추진 필요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전남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

- 전라남도 인구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전라남도는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감소와 함께 노인인구 증가로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 청년인구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의 순유출이 지속되어 감소하고 있음

•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 설계 필요

-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전남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서 전남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정책의 설계가 필요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전라남도 외국인 현황 및 정책 검토

• 전라남도 외국인 현황

- 전라남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등록외국인 비율이 5번째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전라남도의 전체 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비율이 0.87%로 2019년 대비 2023년도의 등록외국인 비율이 18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함
- 전라남도의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총 49,110명 중 비전문취업(E-9)이 19,544명(39.80%)로 가장 많음

» 외국인 우수인력 수요 및 정착 정책

•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의 외국인정책 동향

- 중앙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으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쉐도국가라는 비전을 토대로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 5대 분야의 정책목표를 설정함

- 전라남도는 2024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및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추진함
- **우수인력 유치 정책**
 -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외국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우수인력 지역정착 정책**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추진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춰 세부적인 사업방향을 설정함
 - 또한 해외 국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에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4-13



지속가능한 대학-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해외대학 혁신사례 분석

주제어 글로벌 대학 | 해외대학 혁신사례 | 글로벌대학 사례

연구책임 김성주 • 연구진 최정우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창업정책관련 정책제언

- 주요 대학 사례의 활용: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 활동을 장려함
 - 특정 산업군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스타트업과 관련된 컨퍼런스가 열릴 정도의 대도시 위주로 창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정부 정책의 활용 및 창업을 장려함
 -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자원 접근성을 증대하는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토록 장려 및 홍보함

» 대학 수요자 범주 확대 및 대학간 연계협력관련 정책제언

-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국립대학)와 포항공과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특수대학), 경북전문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전문대학) 등 다양한 유형의 대학들 간 연합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같은 유형 간 인구구조 및 교육수요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 및 공유하고, 차별화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수요를 경상북도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대학 간 연계과정 제공이 필요함
 - '2년제 + 4년제'의 체계만을 유지하기보다, '4년제 + 4년제' 혹은 추가 준학위과정 신설을 통해 '4년제 + 2년제'와 같은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교육과정을 혁신하여야 함
 -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을 실제로 겪으면서 느끼는 불편함과 새로운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대학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참여를 장려하는 대학혁신이 필요함

» 강소기업 및 외국인 정주인력 양성과 관련 정책제언

- **외국인 학생 유치방안이 필요함**
 - 해외 우수 대학 및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입시 설명회와 리크루팅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 유학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정주인력 전환방안이 필요함**
 - 한국에서 생활하기에는 한국어가 필수이기에 한국어 교육 강화,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경로 마련 위해 취업지원 강화 및 생활지원과 정착 지원 제공이 요구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역 발전전략-지방대학 연계 혁신 창출 선순환 체계 마련 필수

- 지역의 발전전략-지방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의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경북의 인구감소, 청년유출, 산업경쟁력 약화로 지역소멸 위기 가중

- 경북의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산업생태계와 맞물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의 혁신전략 마련이 요구됨

» 해외대학 사례분석을 통해 경북 글로벌대학 추진방향에 시사점 제시

- 글로벌 대학의 활성화를 통한 경상북도 지역대학혁신 체계를 마련함
- 창업 전단계 지원, 강소기업·외국인 정주 인력 양성 특화, 대학교육 수요자 범주 확대 해외사례 분석, 시사점을 도출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글로벌대학 30의 개요 및 경북의 현황

- 글로벌 대학 30의 개요 및 경북의 지역-대학 연계 정책 현황을 파악함

» 해외사례 1: 창업 전단계 지원(창업 교육)

- 창업 지원 사례(이스라엘 텔아비브, 테크니온 대학), 대학 연구결과의 상업화 사례(미국 뱀스칼리지 대학)를 파악함

» 해외사례 2: 대학 교육 수요자 범주 확대 및 대학간 연합

- 지역 성인 대상 교육 제공 사례(미국 네셔널루이스, 시카고 대학), 온라인 대학 설립 및 운영 사례(미국 서던 뉴햄프셔 대학)를 파악함
-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외부 기업과의 협력 사례(미국 애리조나, 유타 대학), 대학 간 연합 사례(일본 도쿄 4대학 연합,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프랑스 그로노블 알프스 대학)를 파악함

» 해외사례 3: 강소기업 육성 및 외국인 정주인력 양성

- 외국인 정주 인력 및 강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전략 사례(독일 미텔슈탄트대학), 외국인 정주인력 양성 사례(일본 리츠메이칸대학)를 파악함

»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제시

4-14



경남 투자선도지구 활성화를 위한 유사사례 연구

주제어 지역발전 | 지역경제·일자리

연구책임 김민영 • 연구진 이소영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경남 투자선도지구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유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역 전략산업으로 무인기 산업을 설정하고 일관된 투자를 통해 산업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 내 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위해, 전담 팀을 신설하고 무인기 종합타운 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함양 e-커머스 전략산업 유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함양군이 농업에 특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농산물 가공·유통 단지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구축, 관련 조례 제정, 전담 조직 설립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도출됨
-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 유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운영이 필수적이며, 사업 인허가와 행정 절차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됨

» 투자선도지구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 유사사례 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요구됨
- 인프라 구축 및 거점육성형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협약 체결 기업의 계약 이행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 지침 마련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사업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구 지정 및 사업비 사용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 도, 시·군,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소통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경남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 차질 발생

- 투자선도지구는 2015년부터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있음
- 경남 지역에서는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함양 e-커머스 전략산업, KTX 통영역세권 개발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해당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공동 사업시행자의 문제, 입주기업 수요 저조, 그리고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경남 투자선도지구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이와 같은 현 상황은 경남 투자선도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보여줌
-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과 협력체계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III 연구의 주요내용

» 투자선도지구 현황 분석

- 투자선도지구는 경쟁력이 약화되는 비수도권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발전촉진형 15개, 거점육성형 11개, KTX지역경제거점형 1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총 27개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됨

- 경남에서는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함양 e-커머스 전략산업,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 등 세 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은 2026년까지 911.5억 원 투자를 통해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미래형 비행체 무인기 전문 특화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임
 - 함양 e-커머스 전략산업은 2028년까지 663억 원을 투자하여 함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생활 SOC와 지원주택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임
 -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6,564억 원을 투자하여 통영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KR)이 협력하여 2030년 개통 예정인 KTX통영역 주변 역세권과 그 배후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임

» 경남 투자선도지구 유사사례 분석

- 본 연구에서는 경남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다음 세 가지 유사사례를 분석함
 -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유사사례로 ‘전남 고흥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를, 함양 e-커머스 전략산업 유사사례로 ‘충남 청양 먹거리 종합타운’을,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 유사사례로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함
- 일차적으로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뉴스 기사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배경, 사업 내용, 성공 요인 등을 파악하고, 보완적으로 각 사업의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제 현장 상황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4-15



특별자치시도 공동협력 과제 발굴 및 개정안 마련

주제어 특별자치시도 | 행정재 특례 | 자치권 강화

연구책임 고경훈 · 연구진 선소원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할 수 있으며, 첫째, 각 특별자치시·도의 설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식과 둘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반법을 개정하는 방식임
- 그런데 특별자치시·도는 기능의 특수성, 지리적 특수성, 행정체제의 특수성 등에 기초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발현토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는 것이나, 현재의 특별자치시·도 법제는 특정 산업에 초점을 두는 규제 특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치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음
- 특별자치시·도 운영의 전제가 되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은 특별자치를 위해 모든 특별자치시·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합의하고, 법령상 주어진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제한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에 관한 일반법을 개정하여 일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재의 특별자치시·도가 ‘특별자치’의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유형의 행·재정상 특례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현행 지방자치법의 구조 하에서 특별자치시·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보통 지방자치법의 한 종류로, 일반적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가짐. 다만, 다른 보통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법률상 특례가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바, 이와 같은 측면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특례가 곧 특별자치시·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임

- 이 연구는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의 동반자로서 공동협력과제 발굴 및 공동 입법 추진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받고,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III

연구의 주요내용

- 현재 특별자치시·도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주, 강원, 전북자치도 및 세종자치시의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실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특별자치시·도의 경우에는 실제 ‘특별자치’가 가능한 수준에서 자치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따라서 실질적인 ‘특별자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지역의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을 단순히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위상에 부합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특별자치시·도의 고도화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사권의 완전한 자율성 확보가 필요함
 - 각 시도가 부여받은 특례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임
 - 지자체가 자치사무에 대하여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받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행사하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필요함

자체연구

- 1 2025 지방행정 트렌드
- 2 지방자치 30년 평가 기초 연구
- 3 데이터기반행정 구현을 위한 지역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개선 방안 연구 :
인허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 4 지역경제 진단지표 설계와 검증방안 연구
- 5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관리방안



5-1

2025 지방행정 트렌드



주제어 지방행정 | 지방행정 트렌드 | 지방분권 | 지속가능발전

연구책임 유수동 • 연구진 이서희, 이원도, 유자영, 김필, 문혜리, 김자연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행정은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전환점에 서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중장기적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2025 지방행정 트렌드 및 대응과제

트렌드	대응과제
다이버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과제 : 지역맞춤형 이민정책·이민행정 기반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제도적 기반 강화, 다문화영향평가 도입, 디지털 지원 플랫폼 확대• 중장기과제 :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권화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맞춤형 이민정책·이민행정 설계, 갈등관리 역량 강화
경계를 허무는 스마트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과제 :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기반 구축<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의료의 정의와 영역구분, 원격의료 관련 법·제도적 기반 구축,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의료취약지 우선 적용• 중장기과제 : 지역맞춤형 원격의료 활성화 및 의료격차 해소<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원격의료 세부 추진계획 마련, 거버넌스 기반 원격의료 제도화 논의 및 합의,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 구축

트렌드	대응과제
하이브리드 지방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과제 : 지역 현실을 반영한 지방행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 기반 행정구역 조정, 행정협약·사무위탁 제도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방안 논의 활성화 • 중장기과제 : 미래지향적 지방행정 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 지방행정 모델 개발, 컴팩트시티 구축과 지역균형발전, 광역 및 초광역 경제권 협력 확대, 정치적 리더십 강화 및 자율성 확대
로컬 그린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과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적응 및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감축 목표 설정,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석 마련 • 중장기과제 :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적응형 정책과 탄소중립 전략 통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 및 시민 인식 제고
153만호 빈집의 역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과제 : 빈집 실태조사와 정책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실태조사,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빈집 관리 시스템 개발 • 중장기과제 : 법령 제·개정과 제도적 실행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준비 및 시행, 빈집세 도입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 협력 및 교육 강화, 빈집세와 도시재생 연계, 지역균형발전과 주거안정 지원
농촌 공간의 재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과제 : 농촌 지역 유희공간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공간 실태파악 및 거버넌스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사업 기획, 자원 및 투자유치 방안 마련 • 중장기과제 : 지원체계 확립 및 지역 특화발전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구조화·재활용 종합계획 확대 적용,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 확립 및 운영 고도화, 지역 특수성 반영 및 장기적 확장 전략
지방교육의 전환점, 에듀테크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과제 : 에듀테크 모델 정립 및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에듀테크 도입 준비, 핵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표 개발 및 데이터 분석, IT·AI 교육 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중장기과제 : 지역별 맞춤형 에듀테크 체계 확립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듀테크 기반 교육체계 확립, 교원 디지털 역량 인증제 도입, 협력 플랫폼 운영, 강사 육성 거버넌스 구축,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격차 해소

트렌드	대응과제
재난·위기 관리의 나침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과제 : 지방주도형 재난·위기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위기관리 권한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 재난·위기대응 전문성 강화, 중앙-지방 간 소통 및 협력체계 개선, 민간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 중장기과제 : 지역맞춤형 재난·위기관리 및 지속가능한 대응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맞춤형 재난·위기관리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복구 및 예방체계 마련, 지방 간 및 중앙-지방 간 협력의 지속적 강화, 재난·위기관리체계의 디지털 전환
이제는 지방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과제 : 지방자치단체 정책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별 특례 발굴 및 제도적 기반 강화, 중앙정부 및 시·도와의 협력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 강화, 성과평가 및 책임성 강화체계 구축 • 중장기과제 : 지역특화발전 모델 및 상생발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상생발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특화발전 모델 구축, 지역주민 참여와 책임성 강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정책의 조화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행정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미래예측

•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미래예측과 정책대안 마련은 필수가 되었음

- 제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우리사회는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음
- 변화하는 환경과 그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미래예측과 그에 따른 대응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지방행정을 둘러싼 환경변화들은 지방행정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음
- 체계적·종합적인 미래예측과 분석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적 사고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사회의 요구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

III

연구의 주요내용

» 다이버시티 : 외국인 인력, 지방을 되살릴 열쇠

• 새로운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전망이다

- 외국인 인력은 지방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잠재력이 큼
-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던 외국인 유입과 관련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시켜 지역맞춤형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정착 지원이 시도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를 국가성장동력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가게 될 것임

» 경계를 허무는 스마트의료 : 원격의료의 그리는 지방의료의 새로운 풍경

• 원격의료 활성화가 지방의료 공백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의로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로서비스를 혁신할 것으로 기대됨
- 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와 원격의료는 지방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공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임
- 스마트의료 모델이 지방의료 공백 해소를 넘어, 의료 접근성을 재정의하며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하이브리드 지방행정 :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행정체제, 특별과 통합, 그리고 제3의 형태

•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이브리드 지방행정이 주목받고 있음

- 기존의 획일화된 행정 모델과 단순한 특별·통합 방식의 대안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미래지향적 행정 수요를 융합한 제3의 형태가 등장하게 될 것임
- 기존 지방행정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효율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 것임
- 하이브리드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중심 개념으로, 기존 행정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미래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적인 지방행정체제로 자리 잡을 것임

» 로컬 그린 리더십 :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방의 도전

• 로컬 그린 리더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지역 차원의 환경 리더십과 맞춤형 대응 전략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오르고 있음
- 로컬 그린 리더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목표 설정,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지역주민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강화,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기후위기 해결의 선봉에 서는 것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임

» 153만호 빈집의 역습 : 지방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전환점

- 전국적으로 153만호에 달하는 빈집 문제가 지방소멸과 도시 슬럼화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빈집은 단순한 방치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 침체와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빈집세 도입은 방치된 자산을 관리 가능하게 만들고, 지역 맞춤형 활용을 통해 지방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큼
 - 빈집 문제는 위기인 동시에 지역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임

» 농촌 공간의 재창조 : 농촌의 새로운 얼굴, 가능성으로 공간을 채우다

- 한국의 농촌은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며,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유희화 문제와 구조적 변화는 분명 농촌 지역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농촌 공간이 지닌 잠재적 가치는 이를 극복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
 -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약화된 농촌의 내생적 동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지방교육의 전환점, 에듀테크 시대 : AI로 진화하는 지방교육의 미래

-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육의 본질과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AI 기술은 교육 분야에서 맞춤형 학습과 데이터 기반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며, 교육 접근성과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음
 - AI와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지방중소도시의 교육 혁신은 교육의 불균형 해소에 활용가능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임

- 지방교육혁신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

» 재난·위기관리의 나침반 : 지방주도의 재난·위기관리, 새로운 기준이 되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위기관리 능력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재난·위기관리의 나침반’은 지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재난·위기관리 모델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위기관리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 수립과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주민 안전과 지역사회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주체가 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재난·위기관리의 나침반’의 방향은 단순히 재난·위기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을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

» 이제는 지방시대 : 지역맞춤형 지방분권, 지방이 변화의 중심에 서다

- 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임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와 맞춤형 대응,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특화발전이 더욱더 필요해졌음
 - 시·군·구 특례제도의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방분권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면서 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개별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군·구의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권한 이양과 정책 설계를 통해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임

5-2

지방자치 30년 평가 기초 연구



주제어 지방자치제도 | 지방분권 | 주민참여 | 행정체제

연구책임 박재희 • 연구진 최인수, 김건위, 김지수, 최지민, 주희진, 양원탁, 최정우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결론

- (지방자치 변화 가치 요소)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목적 등을 고려해 지방행정의 민주성, 지방정부 서비스 효율성, 지방정부 책임성, 지역발전 균형성을 지방자치의 변화 가치 요소로 선정. 이외에도 자율성, 사회적 형평성 등도 변화가치 요소로 고려 가능
- (지방자치 30년 실행구조) 행정체제 및 기관구성, 지방분권, 자치역량, 주민참여로 구성
- (지방자치 30년 평가대상) 행정체제 및 기관구성, 행정분권, 재정분권, 입법분권, 행정운영 역량, 거버넌스역량, 지역발전역량, 지역사회참여, 지방정치참여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 (지방자치 30년 평가기준 및 측정지표) 지방자치 요소의 평가 기준을 목표, 과정, 산출, 결과의 평가 영역으로 구조화하여 평가하여 측정지표는 목표의 타당성, 과정의 효율성, 산출의 달성도, 결과의 만족도로 설계하여, 각각의 측정지표별 조작적 개념을 설정

» 기대효과

-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기존 지방자치 평가를 반추하고 지방자치 30년 평가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 정책제언

- (지방자치 30년 평가의 방향)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조화롭게 평가

- (지방자치 30년 평가의 과제)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인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평가 과제 선정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실시 계획

-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년간의 지방자치제도 운영 성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용역 추진
 - 본 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기존 지방자치 평가를 반추하고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논의하여 지방자치 30년 평가의 기본 방향 설정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지방자치 30년 평가 방향

- 지방자치 30년 여건 분석 및 지방자치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30년 평가 주요 쟁점 및 설계 방향 제시
 - (지방자치 30년 평가 주요 쟁점) 주요 시기별 지방자치의 주안점과 그에 따른 제도 방향의 차별성, 양적 성장 시대에 도입된 제도들의 유효성 검토, 주민참여의 제도적 역량 및 지자체의 자치 권한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 30년 평가 설계 방향) 지방자치 30년 변화 분석의 방향과 지방자치 세부 요소 평가의 방향으로 구분하여 제시

» 지방자치 30년 평가 설계

- 지방자치 30년 변화 분석과 지방자치 요소별 평가로 구분하여 설계
 - (지방자치 30년 변화 분석) 지방자치 30년 변화 분석의 틀은 지방자치 실행구조 및 변화가치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 지방자치 실행구조는 지방자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실행 구조로 지방자치 요소와 계층구조 및 관할구역을 포함. 지방자치 30년 변화가치 요소는 지방행정 민주성, 행정서비스 효율성, 지방정부 책임성, 지역경제 균형성으로 구성

- (지방자치 요소별 평가) 지방자치 실행구조는 행정체제 및 기관구성, 지방분권, 자치역량, 주민참여로 구성. 지방자치 30년 평가 대상은 행정체제 및 기관구성, 행정분권, 재정분권, 입법분권, 행정운영역량, 거버넌스역량, 지역발전역량, 지역사회참여, 지방정치참여의 세부항목으로 구성

• 지방자치 30년 평가 기준 및 측정 지표 제언

- (지방자치 30년 자치 요소의 평가 기준) 지방자치 요소의 평가 기준을 목표, 과정, 산출, 결과의 평가 영역으로 구조화하여 평가
- (지방자치 30년 자치 요소의 측정 지표) 지방자치 요소의 평가 영역별 지표는 목표의 타당성, 과정의 효율성, 산출의 달성도, 결과의 만족도로 설계하고, 각각의 측정 지표별 조작적 개념을 설정

5-3

데이터기반행정 구현을 위한 지역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개선 방안 연구 : 인허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주제어 데이터기반행정 | 지역데이터플랫폼 | 인허가 데이터 관리 | 디지털 전환 | 데이터 연계

연구책임 이재용, 박영민 • 연구진 이경은, 김수동, 강희송, 노형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지역데이터플랫폼은 데이터기반행정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현행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화와 연계성 확보를 통해 플랫폼의 활용도 및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 중앙-지방 간 협력 및 자치단체 중심의 능동적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대효과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강화로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실행력의 향상이 가능함
- 데이터 연계 및 융합을 통한 공공 서비스 품질 제고가 기대됨
- 자치단체의 데이터 활용 자율성 증대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정책제언

- 법제도 정비
 - 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소유권과 활용 권한의 확대가 필요함
- 플랫폼 개선
 - 지역데이터플랫폼에 데이터 시각화 및 상세 검색 기능의 추가가 필요함
 - 데이터 표준화 및 오류 수정 시스템의 강화를 고려할 수 있음

- 협력체계 구축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및 학계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표준 데이터 레이크(Data Lake) 설계를 제언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데이터기반행정은 정책 문제 해결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 수행 방식임
- 중앙-지방 간 데이터 주권 문제, 외부 변화 대응 부족, 인허가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분석결과 및 지역데이터플랫폼 개선 방향

구분	분석 결과	개선 기본 방향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관련 제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 부재• 각각 다른 주체에 의하여 데이터의 입력이나 시스템이 구축되고 관리되어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상 혼선 발생 가능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데이터플랫폼 정책 수립 및 정책 지원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플랫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 상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검색 및 매칭에 필요한 특정 정보가 부재하여 다른 데이터와의 연계성 부족• 비표준 데이터 제공에 따라 데이터의 오류 발견 시에도 수정 불가• 데이터 오류 및 부재 사유나 개선 요청 부재• 비동일 데이터 분류체계로 인해 다른 데이터와의 연계나 호환성 부족•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관리상의 한계점 존재• 데이터의 시각화 기능, 상세 검색기능과 같은 부가 기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확대• 주체 간 협업 기반 마련• 관련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정책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구분	분석 결과	개선 기본 방향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관련 시스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사용 차원: 높은 현행 시스템 사용 빈도 및 업무중요도(비중) • 데이터의 입력과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낮은 사용 편의성 • 업무 및 데이터 연계 차원: 지자체 간, 업무 간 높은 수준의 데이터 공유 필요성 및 수요(지방세, 교통행정 데이터 등과의 연계) • 대민서비스 등 시스템의 외적 활용에 대한 낮은 인식 • 타 시스템 활용 등 현행 시스템에 모든 인허가 데이터가 미구축 • 자치단체 특성, 관행, 기능 미구현 등으로 인해 파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데이터 존재 • 데이터 공개로 인한 책임 문제, 과도한 민원 요구 등 담당 공무원의 데이터 공개에 따른 업무 부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데이터플랫폼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지역데이터플랫폼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주체 간 협업 기반 마련 • 관련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정책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적 측면: 데이터 미입력 및 오류가 다수 나타나 데이터의 신뢰성 및 활용도 저하 • 영역별, 그룹별, 업종별 데이터 입력의 편차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간 협업 기반 마련 • 관련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정책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소재목주체별 지역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역할

역할 구분	역할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관련 제도적 기반: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및 기능 개선 가능하도록 중앙의 법령·기준 마련 • 지역데이터플랫폼 운영에 관하여 컨트롤 타워로서 전반적인 관리 및 지원 • 지역데이터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책의 근거 및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 지역데이터플랫폼 모범사례 홍보 및 공유 공간 마련

역할 구분	역할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적 기반 확보: 데이터기반 행정과 관련한 명시적 근거 마련•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담조직 구성: 데이터 누락, 오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데이터 연계 및 호환성 강화•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 데이터의 활용·분석·관리 등 공무원의 인식 및 이해도 제고 목적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민간부문과 데이터 연계 강화: 제출서류 전자화, 자동검증처리 기반 구축 등으로 데이터 입력 간소화, 오류 최소화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표준화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부처간 공통데이터 탐색 및 확대, 분석 단위 세분화를 통한 데이터 결합 분석에 대한 지원• 공통의 추가지표 지속적으로 발굴•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운영
민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기반행정 및 플랫폼 관련 피드백 통합 제공• 데이터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가능성 제고• 신규 지표 발굴 및 연구 위해 민간데이터 적극 공유

5-4



지역경제 진단지표 설계와 검증방안 연구

주제어 지역경제 | 지역경제진단 | 지역경제 위기경보

연구책임 이서희 • 연구진 신두섭, 유보람, 최정우, 오유리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경제 진단지표 설계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제안

- 본 연구는 지역경제 진단지표 설계와 위험 신호 검출, 고도화된 검증체계와 통합 모니터링, 그리고 협의체 중심의 신속한 협업 대응을 종합적으로 제안함
 - 첫째, 진단지표 검증체계 구축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지표별 임계값 적용에만 치중하기보다, 혼동 행렬표(1종·2종 오류 등)와 머신러닝 등을 활용해 검증체계를 고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다만 머신러닝 기반 모형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ROC-AUC 등으로 예측력을 평가할 수 있으나, 구축 과정의 시간·자원 대비 효율성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 둘째,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임. 지역경제는 국가적·외부적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기획재정부의 경제위기경보 등 기존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함. 지역별 ‘임계값’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량·정성적 판단 기준을 결합하여 보다 유연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셋째, 정량적 지표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각적 협의체(TF) 가동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수립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의 조기경보시스템처럼 단계별 경보체계를 활용하고,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지역 내 기관들과 협업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별 기초자료(이상 징후 발견 시 세부요인 분석 엑셀표 등)를 활용해 협의체가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역경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한 요구 증대

- 지역경제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심층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그동안 지역경제 분석은 데이터 부족과 방법론 한계로 인해 정책결정 지원 기능이 미흡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본 연구가 진행됨
 -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지표 설계, 등급화 및 검증체계 구축 등 정량적 방법론 확립을 핵심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자 함
- 지역경제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분석이 필수적임
 - 지방자치단체 및 정책 입안자의 지역경제 정책 결정을 위한 지원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경제 정책 효과 분석을 고도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이를 위해 첫째, 지역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하고, 지역경제 진단지표를 확정함
 - 둘째, 세부적인 진단지표를 통해 지역경제를 해석하는 귀납적 접근(inductive reasoning approach)을 시도하며 이러한 시도가 가능한지 진단함
 - 셋째, 지역경제 위기 진단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 적시성 높은 지표, 예측력 등을 확보한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접목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지역경제 진단을 위한 지표 설계 체계 구축

- 지역경제 진단지표 설계를 위하여 4단계 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최종 지표를 구조 지표와 변동 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표 | 지역경제 진단지표 최종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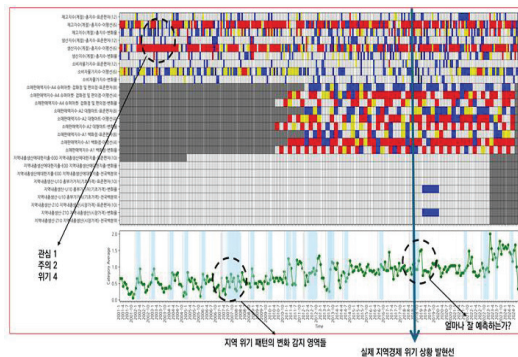
구분	항목	주지표	보조지표
지역 경제 구조 파악	경제종합	지역내총생산 (GRDP)	-
	인구구조	총 인구수	순 이동 인구수, 생활 인구수

구분	항목	주지표	보조지표
지역 경제 구조 파악	산업구조	산업별 GRDP	특화산업 현황, 사업장 수
	재정구조	재정총량, 지방세입비중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지역 경기 변동 파악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	생활 물가지수, 지방 공공요금 인상률
	고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실업급여 지급자 수,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생산·투자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재고순환 지표, 전력 사용량
	소비·지역상권	소매판매액지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 인허가 데이터, 소비자 심리지수, 소규모 상가 공실률
	부동산·건설	아파트/ 주택 가격지수	아파트 거래현황, 지가변동률, 건설수주액
	금융	금융기관 여수신	예금은행 대출연체율, 어음부도율, 금융기관 수

» 지역경제 진단지표 등급화 및 검증체계 제시

- 진단지표 등급화를 위해 첫째, 최종 확정된 지역경제 진단지표 특성에 따라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둘째, 구간 및 등급화 임계값을 설정·구분하고, 적용·시각화하며,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음
- 표준편차, 지역 내 순위, 지역 내 위치로 등급화하였고, 임계값은 기존 문헌에서 활용하는 범위로 지정하여 일괄 적용하였으며 표준편차 임계값(좌) 및 검증 예시(우)는 아래와 같음

기준	리스크	
	양	음
표준 편차	-3 미만	위기
	-2 ~ -3	주의
	-1 ~ -2	관심
	-1 초과	일반
	1 미만	일반
	1 ~ 2	관심
	2 ~ 3	주의
	3 초과	위기



※ 양(낮을수록 긍정적), 음(높을수록 긍정적)

5-5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관리방안

주제어 인구소멸 | 지역발전 | 교육발전특구

연구책임 이소영 • 연구진 박진경, 김도형, 김민영, 김주락, 최민정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교육발전특구 유형별 관리전략

- 일반자치 유형에 의한 공모 유형 한계 극복
 -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지정 유형은 지방 교육청과 공동협력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구분 (1유형:기초자치단체, 2유형:광역자치단체(광역시 및 제주), 3유형: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군)
 - 특구 공간적 범위의 불명확성,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모호로 성과관리단계상 혼선 발생
- 교육발전특구의 지역특성 및 중점사업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전략 마련
 - 대도시-도시-농촌의 지역특성에 따라 차별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특성 고려
 - 지역특성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운영모델별로 유형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특구 목적과 부합
 - 가능한 유형화안으로는 첫째, 지역돌봄형(농촌형/도시형), 둘째, 지역산업 연계형(광역시형/광역도형), 셋째, 특화지구 연계형(혁신도시/문화도시 등 다양한 지역특화특구 연계형)을 제안

» 교육발전특구 성공적 추진전략

-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
 - 지속적이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교육정책 수립
 - 지역특화산업 또는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정책으로 차별성 확보
- 교육발전특구 주체 간 유기적 연계 강화
 - 지자체와 교육청 양자간 협력 외 지역대학, 유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과 연계 강화
 - 교육발전특구 실무추진단 등 지자체와 교육청 간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의 운용

•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 교육 관련 규제 완화 및 특례 발굴 한계 극복하고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발굴
- 지역맞춤형 특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관리 필요

-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실적(결과)지표로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영향(효과)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종합성과관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표는 교육발전특구의 전체 사업목표, 즉 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성, ② 교육혁신과 지역발전과 연계성 등임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시대전략으로서 교육발전특구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리전략 마련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유형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2024년 두 차례 걸쳐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3가지 유형별로 총 56곳이 지정
- 1유형(기초-교육감), 2유형(광역-교육감), 3유형(광역 지정 시군-교육감)별 우수사례지역(선도지역)을 선정하여, 지역특성, 중점추진사업, 연계정책, 제안 특례, 성과지표 등을 분석

•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맞춤형 관리전략 제시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발전특구 유형별 특성

구분	1유형(단독형)	1유형(연계형)	2유형	3유형
중점 분야	유아돌봄형	혁신도시 연계형	지역산업 연계형 (초중고)	지역산업 연계형 (지역대학)
공간 범위	기초자치단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시)	광역자치단체(도) 지정 시군

구분	1유형(단독형)	1유형(연계형)	2유형	3유형
추진 주체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사례	화천군	충북 음성-진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지정 시군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지역 특성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고등교육기관 부재	충북혁신도시/ KEDI 교육관련 국책연구기관 소재	광주형 일자리사업/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우주항공 (진주, 사천, 고성), 스마트제조(창원), 나노(밀양), 조선(거제), 자동차/의생명(김해, 밀양)
중점 사업	화천형 늘봄프로젝트/ 국방산업 연계 자공고 전환/ 교육+돌봄+주거 패키지 지원	혁신도시 인프라 활용 공유협력 돌봄시스템/ KEDI 활용 교육과정 개발/ 혁신도시 외곽 교육격차 해소	빛고을 직업교육혁신지구 및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취업-창업-주거 지원	전략산업별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및 우주항공-미래자동차 분야 취업지원금 지원/ 우주항공 연계진학 지원
정책 연계	교육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강원도교육청 더나은교육지구/ 행정안전부 접경지역개발사업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지원정책/ 충북혁신도시 종합계획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교육부 RISE 및 글로벌 대학 연계/ 교육부 약형 특성화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등
지자체 특성	2007년 화천군 인적자원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충북혁신도시 연계/ 유관 산업 혁신기관 연계지원/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 유관기관 연계 활용	직업계고-지역기업- 대학 연계 지역인재 성장경로 구축 지원/ 광주형 일자리 사업 지원	경남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분야별 시군 특구 지정 육성
제안 특례	마이스터고 지정 및 취소 권한 이양 제안	국립소방병원 개원에 따른 관련 학과 정원 증원 특례	자율형 공립고 교원 정원 외 추가 배정 제안	경남 지역산업 인재양성에 필요한 맞춤형 특례 제안

»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현재 교육발전특구 추진과제로 분석된, ① 유형별 관리전략, ②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 ③ 교육발전특구 주체 간 유기적 연계 강화, ④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⑤ 교육발전특구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 ⑥ 관련 근거법 마련 등 전략별 정책 제언

지침연구

- 1 의료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1)
- 2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영향권 설정에 관한 연구
- 3 폐기물 부문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지침 연구
- 4 R&D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1) : 지방 연구개발사업 특성과 현황을 중심으로



6-1

의료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1)



주제어 의료시설 | 지방재정투자사업 | 병원 | 타당성조사 | 지침 | 의료시설 수요 | 의료시설 편익

연구책임 송지영 • 연구진 정연백, 박소연, 조현민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의료시설 건립사업의 타당성조사 지침 개발

- 1차년도(2024년): 의료시설 타당성조사 사례 분석 및 지방사업의 특수성 도출, 의료관련 통계 분석, 수요·편익 추정 방법론 연구
- 2차년도(2025년):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방법론 연구, 운영수지 분석 방법, 의료지침 개발

»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 제시

- 국가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부문 사업은 소규모 증축, 일부 진료과목 개설 및 진료센터 개설 그리고 응급의료 자원 확충 등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 및 적용 영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편익추정 방법론을 고도화하여 제시하였음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재 LIMAC의 의료부문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지침의 부재

-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문 연구」를 준용하고 있으나 국가사업과 다른 지방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의료부문 타당성조사 지침의 필요성 제기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의료부문 경제성 분석의 차별성

• 의료서비스의 특성

- 보건의료서비스의 긍정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감안할 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치재(merit goods)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의료서비스의 외부성·정보의 비대칭성·불확실성·정부 규제와 시장경쟁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개입의 논거를 확인함

• 국내 보건의료체계 및 공공의료 특성

-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전국민건강보장체계,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정부의 의료수가 관리정책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일반 재정투자사업과 의료부문 사업의 차별성

- 일반 재정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에 따라 특정 재화의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하거나 공급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됨
- 의료서비스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의료수가)하고 있어, 정부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기관(수량)을 공급한다고 해서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 질병의 발생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료서비스 공급 증가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수는 정부 규제에 따라 고정적임
-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국내 의료정책 환경에 따라 지방정부가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재정투자사업과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여 의료부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논거를 정립함

» 의료시설 타당성조사 사례 분석

• 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29건의 사례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6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고, 주요 선진국 사례도 분석함

- 의료시설의 편익항목 및 추정방법론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차이가 없으나, 지방사업의 특성(재활병원, 증축 등)에 따라 기타 편익항목들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특히 건강검진 수검률, 간병비 절감편익, 중환자실 등 신규 편익항목들을 반영한 것이 특징임
- 국가사업은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사업은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활용하기도 함(지방사업의 진료권이 국가사업보다 좁기 때문에 세분화된 통계자료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의료시설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 이용의사에 따라 편익 창출 유무가 달라 질 수 있음)

- 국외사례 분석결과 각국의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이 상이하여 우리와 같은 타당성평가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시행 전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최신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 고찰 필요성에 대한 함의를 발견하였음

» 수요추정 방법론

• 진료권(영향권) 설정

- 진료권 내 잠재적인 의료수요와 의료공급 현황(병상수, 종별 의료시설의 규모 등)을 비교하여 해당 진료권의 의료수요 대비 의료공급의 과소 또는 과잉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 진료권의 설정은 해당 의료시설의 실제 환자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주요 요소가 됨

• 수요추정

- 장래인구에 대한 추정, 진료권내에 요구되는 입원병상수 추정, 해당 의료시설 계획병상수의 적정성 검토
- 연간 입원 및 외래환자수, 신규로 유입되는 환자수, 응급시설이 포함된 경우 이로 인해 예방가능한 응급사망자수 추정

• 진료권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

- 지방의 진료권 내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및 일반 설문조사와는 큰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 필요성 및 설문지 작성 방법을 매뉴얼화 하여 수록함

» 편익항목 및 추정 방법론

• 일반진료 영역

- 원거리 의료시설로부터 이용전환에 따른 이용시간 및 교통비 절감 편익
-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 특수질환진료 영역

- 초기집중재활치료를 통한 환자의 총 재원일수 감소효과
- 특수질환군 전문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환자의 사회복귀 개선효과

• 공공의료 영역

- 응급시설 확충으로 인한 응급환자 사망률 개선효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에 따른 간병비 및 휴업손실 절감
- 중환자실 운영에 따른 중환자실 사망 감소 편익

6-2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영향권 설정에 관한 연구

주제어 지방재정투자사업 | 타당성조사 | 영향권

연구책임 김남주 • 연구진 심대용, 김진호, 정병관, 이진우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영향권, 수요권 및 설문조사의 범위 등 영향권 관련 용어를 재정립하였으며, 정량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영향권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타당성조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또한, 본 연구는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 타당성조사 분야에서 최초 수행된 영향권 관련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의 영향권은 사업 효과에 영향을 받는 공간적 범위로서 영향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수요추정 결과, 편익추정 결과 및 이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B/C) 및 재무성 분석결과(PI)가 달라지게 되나, 영향권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영향권(Impact Area)은 사업 효과에 영향을 받는 공간적 범위로 정의되며 투자의 규모 및 범위, 사업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적, 광역적 및 국가적 범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특히,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사업규모 및 제공될 공공서비스의 성격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적 범위보다는 지역적 또는 광역적 범위로 설정되어, 영향권 설정 범위의 중요성이 매우 큼
- 또한, 타당성조사에서 영향권이 설문조사의 범위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향권 설정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타당성조사에서 영향권, 수요권역, 설문조사의 범위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설정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특히, 명확한 사유 없이 설문조사의 범위를 영향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에 따른 수요 및 편익의 과소 또는 과대 추정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영향권과 사업유형별(부문별 지침)로 적용되고 있는 수요권역과 설문조사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지방재정투자사업 특성을 감안한 적정 영향권 설정 방안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III 연구의 주요내용

» 적정 영향권 설정의 중요성 검토

- 타당성조사의 영향권과 수요자의 공간적 범위가 크게 다를 경우, 영향권과 실제 수요자와의 공간 범위가 불일치함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 이에 따른 수요와 편익의 과대/과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적정 영향권 설정이 중요함
- 영향권의 범위가 작을 경우,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의향비율 및 이전수요비율, 추가지불가능응의액 등이 실제 대비 높아질 수 있으며, 반면 영향권의 범위가 클 경우 해당 수치들이 실제 대비 낮아질 수 있음

» 타당성조사의 영향권과 유사 개념과의 관계 정립

- 혼용되어 사용 중인 영향권, 수요권, 설문조사의 범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영향권(편익수혜자) ≥ 수요권(수요자) ≥ 설문조사 범위(설문대상)으로 나타남
- 편익수혜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효과를 받는 사람 또는 사물을 지칭하며, 영향권은 사업 시행 시 사업의 효과에 영향을 받는 공간적인 범위로 영향권은 편익 수혜자의 범위와 직결됨
- 수요자는 사업시행 시 제공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수요권은 이러한 수요자의 공간적 범위를 말함. 수요자는 편익 수혜자가 될 수 있으나 모든 편익 수혜자가 수요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설문조사의 범위는 시간 제약, 예산 제약, 낮은 응답률 등의 제약조건 하에서 유효 표본수 확보, 수리적인 통계적 타당성 및 일반화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설문조사의 공간적 범위로, 사업대상지와의 거리에 따른 인지도와 관심도 저하, 설문조사지의 복잡성 증가 및 응답률 저하 등으로 영향권 및 수요권 대비 작게 설정하게 됨

» 사업대상지와의 거리에 따른 이용의향비율 변화 분석

- 과거 수행된 타당성조사 설문조사에 대한 시설과의 거리에 따른 이용의향비율 변화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거리에 따른 이용자 감소 추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사업대상지와의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이용의향이 여전히 높거나, 일정거리 이후 이용의향이 없는 사업이 존재하여 적정 영향권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대상지와 거리가 멀더라도 이용의향비율이 높은 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권이 수행된 설문조사의 범위 대비 확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정한 거리 이후로는 이용의향이 없는 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권이 수행된 설문조사의 범위 대비 축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타당성조사 영향권 설정 고도화 방안 및 사례 제시

-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영향권 및 설문조사의 범위는 설문조사 전 내외부 전문가 논의 및 관련 각종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사업 영향권의 적정 범위를 논의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를 구득하지 못하여 영향권의 설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근거가 제시되지 않거나, 내외부 전문가 논의 또는 기존 연구를 통해 영향권을 설정함
- 본 연구에서는 이용 방문 및 이용패턴 데이터자료를 통해 정량적으로 영향권을 설정할 수 있는 고도화 방안 및 사례를 제시함
 - 한국관광 데이터랩 등 대상사업에 대한 기존 또는 유사 시설에 대한 방문 데이터자료를 통해 영향권 설정을 위한 정량적인 기초자료를 검 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영향권을 보다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영향권 설정 고도화 방안 및 사례를 검토하여 제시함

6-3



폐기물 부문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지침 연구

주제어 생활폐기물 | 소각시설 | 매립시설 | 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 |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연구책임 김상기 • 연구진 박용덕, 이정희, 주재문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폐기물 처리 시설의 적정 규모 산정의 중요성

- 일반적으로 폐기물부문의 수요예측은 장래인구에 과거 1인당 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곱하여 발생량을 추정하는 원단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대 이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론임
 -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압축/선별), 음식물처리시설 등 시설의 유형이 다양하며, 시설별 처리대상 폐기물이 다름
-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래 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발생량에 따른 적정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관리는 지자체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도 도움이 됨

» 객관적인 분석 지침 제공을 통해 투자사업 효율성 제고

- LIMAC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지방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본 지침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폐기물 분야의 대표적인 투자사업 유형인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시설(음식물처리시설 포함)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론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폐기물 분야 투자분석이 가능토록 지원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LIMAC은 2015년부터 폐기물 사업 20건에 대해서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별도 지침 없이 수행

- 통일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조사지침 개발 필요
 - 2015년 자료집 형태의 『환경분야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LIMAC)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후속 지침 연구로 이어지지 않았음
 -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압축/선별), 음식물처리시설 등 시설의 유형이 다양하며, 시설별 처리대상 폐기물이 다름
 - 이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보고서의 일관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분야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III

연구의 주요내용

» 폐기물 발생량(수요) 추정 방법론 제시

- 장래인구 추정
 - 조성법을 적용하여 장래 해당 지역내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론 설명
 - 사회적 유입인구 적용 방법과 주요 오류 사항 사례 제시
- 발생량 원단위 추정
 - 전국 및 9개 특광역시 10개 시급 자치단체와 8개 군급 자치단체의 지역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를 2013~2022년까지 조사하여 제시
 - 제시된 발생량을 기준으로 대상지역의 발생량 원단위 적용방법론 제시
- 가동일수 및 변동계수 적용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상의 가동율과 실적시 제시
 - 가동율과 변동계수 적용 기준 제시

»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추정 기준 제시

-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 및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설별 발생량 추정 방법론 제시

» 폐기물 종류별 처리시설의 총사업비 추정 기준 제시

-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 및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적정 설치 규모 및 해당 규모에 따른 총사업비 산정 기준 제시

» 폐기물 종류별 처리시설의 운영수지 산정 기준 제시

-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근거로 하여 각 항목별 운영비 산정 기준 제시

6-4

R&D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1) : 지방 연구개발사업 특성과 현황을 중심으로



주제어 연구개발 | R&D | 인력양성 | 교육 | 지방투자사업

연구책임 김지훈 • 연구진 김도영, 허은진, 전승훈, 박완규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교육) 사업은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현재에는 중앙정부 지침(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을 일률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은 연구의 규모, 기술 등에 차이가 있으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계수(성공률, 기여율 등)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반면 영향권은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방법론의 적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지역별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평가 방법론을 검토하고, 사업의 세부 유형별로 분석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현재에는 지침이 부재하여 사업별 방법론이 상이함)

» 기존의 방법론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침 마련이 필요함

- 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
 -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지방투자사업에서 타당성 조사의 수행 경험이 많지 않은 분야이나, 경향성을 봤을 때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함
 - 또한, 사업의 분석결과가 축적되고 쟁점이 많은 분야이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수적임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과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교육)사업을 추진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체육, SOC 등 시설에 대한 사업을 위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
- 국가 사업의 공모, 재원조달 참여 등의 추세에 따라 연구 관련 분야 참여가 높아지는 추세
 - (지방재정법)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식산업센터, 특성화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사업의 의뢰가 시작됨
 - (출자출연법) 지방에서 연구개발관련 펀드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출자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뢰가 있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타지역에서도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
- 물가상승으로 인해 기존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으로 분류됨
 - 연구개발 기반조성, 지원센터 건립 등의 사업들은 과거 500억 미만으로 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물가상승으로 유사사업들이 500억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
 - 해당 분야의 유형별 분석 절차와 지침이 부재하여, 일관성과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
- 해당 분야의 지침이 부재하여 앞선 사업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분석함에 따라 일관성과 형평성에 대한 쟁점이 발생함
- 이에 유형별 분석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III 연구의 주요내용

» 해당 지침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 및 방향 수립

- (1차년도) 기초연구
 - 문헌수집 및 분석, 현황조사, 한계점 및 쟁점 도출
 - 지방 사업의 분석방향 제시
- (2차년도) 지침개발
 - 유형에 따른 분석 절차 수립
 - 기술적검토 및 비용추정 절차 및 기준 제시(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방안)
 - 수요 및 편익 분석 방법론 정립
 - 기존 연구개발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한 적정 방법론 선정

- (3차년도) 지침배포 및 활용

- 확정된 방법론과 필요한 지표들에 대한 정리
- 최종 지침 작성

» 지방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교육) 사업유형 구분 및 적용방법론 현황조사

- 지방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현황조사 결과 시설구축, 연구지원 사업의 유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대부분은 순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구축된 시설에서 타 연구를 지원하거나 장비를 구축하여 시험·인증을 하는 시설이 대부분임

» 관련 연구조사를 통한 방법론 및 편익항목 발굴

-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사회적 편익, 환경측면을 고려한 방법론을 활용함

- 비용편익 분석 만이 아닌 사회적 회계 매트릭스(SAM), 이중차분법(DiD), 특허 데이터 분석,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등의 방법론을 연구 및 활용하고 있음

-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교육)에 대한 편익항목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짐

- 연구개발의 편익 항목으로는 생산성 향상, 신규 일자리 창출, 소비자 잉여 증가, 기술 혁신, 환경적 편익 등이 중점적으로 연구됨
- 인력양성(교육)의 경우 추가 소득 증가, 비용 절감, 사회적 자본 증가, 사회 복지 비용 절감, 경제 생산성 향상, 기회 비용 감소 등의 항목들이 분석되어 제시되고 있음

지침연구



정기간행물

1. 2024년도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2. 2024년도 지방자치정책브리프
3. 2024년도 지방의정브리프
4. 2024년도 지방행정연구
5. 2024년도 세계지방자치동향
6. 2024년도 유튜브





2024년도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 제 50호_3월

주제	인구감소지역 대응
인터뷰	인구감소지역이 협력하여 지역 간 상생 전략을 마련하여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을 만들 것 송인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괴산군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임형백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성결대학교 교수)
이슈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수립 의의와 개선과제 윤소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집중조명	인구감소지역대응정책의 협력적 추진 방안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성과관리, 주요내용과 과제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청년이 지방을 선택하는 이유 김동영 전북연구원 박사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이관률 충남연구원 박사
우수사례	일본의 과소지역 지속적 발전 우수사례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탄광촌의 개들은 다시 지폐를 입에 물고 다닐 수 있을까? - 2024년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평가최우수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김주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탐방	지역경제 활력 불 지피는 파주페이의 파격(김진 부연구위원)
경제동향	더 싸고 잘하는 집 없고? 착한가격업소!

» 제 51호_6월

주제	행정체제개편
인터뷰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지방행정체제의 미래를 설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갈 것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행정안전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위원장
이슈	문제해결형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검토과제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집중조명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논의,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 주민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한 자치제도설계로부터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몇 가지 제언 남재걸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체제개편 프로세스와 갈등관리에 관한 논고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우수사례	행정체제개편 - 노르웨이 행정체제 개편 사례 선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탐방	지역의 미래를 재창조하는 투자회사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1호사업 선정된 단양군 스토리
경제동향	탄소 '0'를 실천하면 가계에 '0'이 하나 더 붙는다

» 제 52호_9월

주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1주년
인터뷰	지방시대 컨트롤 타워, 우동기 위원장 인터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슈	지방시대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집중조명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하정석 지방시대위원회 총괄기획과 전문관
	성공적인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 박기관 상지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 해외에서 지켜보고 있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기대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우수사례	전라남도 지방시대계획 수립·이행 1주년, 가시적 성과 창출 - 기회발전·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 인구정책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등- 김재경 전라남도 균형성과담당관 균형발전팀 전문위원
	무엇이 지방을 풍요롭게 하는가 - 지방시대를 준비하는 경상남도 - 이교은 경상남도 균형발전단 지방시대지원파트 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탐방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국가로의 실험: 행정체제개편을 통한 특별자치도 설치의 실효성 확보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동향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시니어 일자리 정책

» 제 53호_12월

주제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향후 관리 방향
인터뷰	지방채 관리를 위한 적절한 예방 시스템과 활용 모두 필요하다 금재덕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이슈	우발채무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집중조명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를 위한 제언 김수희 서울시립대학교 조교수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향후 관리 방향 허정 행정안전부 서기관
	지역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투자평가부장
우수사례	지방정부 우발채무 관리에 관한 해외 사례 전영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탐방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도시, 경상남도 진주시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동향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와 경제적 영향



2024년도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	호수	제목
1	제173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홍근석 연구위원
2	제174호	인구감소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생활인구의 도입 이원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3	제175호	지역주도적 균형발전정책으로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의의 이소영 지역균형발전실장
4	제176호	2024년 지방행정 트렌드 유수동 미래전략연구센터장
5	제177호	이북5도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재정립 방향 김수동 부연구위원, 이재용 부연구위원
6	제178호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선 방향 양원탁 부연구위원
7	제179호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강영주 지방행정혁신실장
8	제180호	2023년도 한 해 동안 개인으로부터 10조원 모금한 일본의 고향납세 신두섭 지방재정경제실장, 오유리 전문연구원
9	제181호	[40주년 특집]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박진경 연구위원
10	제182호	인구감소시대의 조직관리 효율화 방안 김지수 연구위원
11	제183호	'쉬었음' 청년 지원 방안 유자영 부연구위원
12	제184호	국고보조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제시 김성주 연구위원



2024년도 지방의정브리프

No	호수	제목
1	제41호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집행부간 정보비대칭 개선방안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2	제42호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3	제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현재와 지향점 황외성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
4	제44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최현재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2024년도 지방행정연구

» 제 38권 제1호_통권 제136호

No	제목	집필자
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대상 COVID-19 재난지원 정책 도입과 규모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이세미, 이태천, 이지연
2	정부간 관계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라소영
3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활용한 정부 간 갈등 비교 분석: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을 중심으로	양승일
4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수행기능과 업무량 분석에 관한 연구	김지수, 양은진
5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의 방향: 세출예산 및 협력의 우선순위 분석	박재희, 김봉균
6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이서호
7	트리플 헬릭스 모형(Triple-Helix Model)을 활용한 주민자치회 이해관계자 집단 간 상호작용 및 성과요인 연구: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흥주, 강인호, 황광선
8	여성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양호
9	준실험설계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양윤서, 전재범

» 제 38권 제2호_통권 제137호

No	제목	집필자
1	프랑스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역적 통합전략에 대한 연구	윤광재
2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청년의 주거불안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구한민
3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사무조사 자동화 기초연구	주희진, 최인수, 전대욱, 박재희
4	조직성과에 대한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의 구조적 효과: 조직공정성과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인석, 이용모, 정원희
5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의 영향요인: 협력적 소비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 사례	송영현
6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2014~2021년 지방재정공시를 중심으로	김진, 김성주, 전영준
7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한 지방세수 예측 방안 연구	문소영, 이서희
8	혁신도시 기촌 청년층의 가족동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전입유무별·정주기간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임태경
9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의 영향요인: 부산광역시 교정시설 입지 사례	김재식, 정혜진

» 제 38권 제3호_통권 제138호

No	제목	집필자
1	〈기획논문〉 증거에 기반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 지방행정의 수요-공급 변화를 중심으로	전대옥, 김순은
2	〈기획논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0년의 성과와 과제: 지방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손희준, 홍근석
3	〈기획논문〉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의 과제: 분권과 균형의 상향적 통합전략의 모색	박진경, 한표환
4	ESG가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인성, 이세규
5	한국 중소도시 미군기지 주변의 근린 비교와 특성 연구	윤복상, 김길
6	세종시 출범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	양준석, 김현우
7	일본 기업판 고향납세에 대한 고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국중호
8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전영준, 홍근석
9	체계적인 향토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향토유산 조례 연구: 지방자치단체 향토유산 조례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강용수, 전인석
10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지방자치의 인식 분석: 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란, 김필

» 제 38권 제4호_통권 제139호

No	제목	집필자
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지방분권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정숙
2	지방행정체제 개편 저해요인의 우선순위 분석 : 전주·완주 통합 실패 사례에 대한 계층화분석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최윤, 이유현
3	공공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인식을 향상시키는가? 유형별 플랫폼의 활성화 수준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유란희, 이경은
4	재정분권과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 지방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 재정분권의 재정적자 억제 효과를 중심으로	한승희
5	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유입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임태경
6	마을관리소를 통한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요인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신수경, 이상현
7	암행순찰 교통경찰관의 직무특성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이건, 정지수
8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수용성에 대한 실증연구: 님비(NIMBY) 태도의 인과기제를 중심으로	박천희, 한혜지, 이채은, 최준혁, 박정우, 김민희, 김서용, 홍은영,



2024년도 세계지방자치동향

» 제 54호

No	나라	제목
1	일본	일본 광역연합의 특징과 시사점
2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메가시티에 관한 일고 : 지속가능한 광역행정의 관점에서
3	미국	미국의 초광역권 : 메가리전(Megaregions)
4	프랑스	그랑파리(Le Grand Paris)로 살펴보는 프랑스의 메가시티 전략 : 경제 활동 인구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 보호
5	한국	‘충청시대’를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현황
6	한국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사례

» 제 55호

No	나라	제목
1	독일	독일의 디지털 AI 혁신 프로젝트 - 시민 코딩(Civic Coding)
2	미국	디트로이트 권역의 보조교통시스템 기술혁신 프로젝트
3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과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4	일본	일본 지방대학의 반도체 연구·교육 거점 확보 및 인재육성
5	한국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갈림길에 서있는 ‘AI법’
6	한국	부산광역시 도로파손 데이터 관리 고도화 프로그램

» 제 56호

No	나라	제목
1	미국	보스턴 씨포트 혁신 특구(Boston Seaport Innovation District) 사례
2	일본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전환 금융 및 자산운용특구 - 북해도와 삿포로시를 중심으로
3	네덜란드	네덜란드 민생특구-네덜란드 NPRZ의 사례
4	미국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핵심 기회 특구
5	한국	영국 정부 특구를 활용한 지역 경제성장 정책
6	한국	한국 경제특구 세제혜택 기준과 지침의 필요성

» 제 57호

No	나라	제목
1	미국	뉴욕 청소년 정신건강 안전망 B-HEARD 프로그램
2	미국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청년 정신건강 지원사업
3	일본	일본 히키코모리 지원의 변천과 시사점
4	프랑스	청년 자립도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5	한국	은둔형 외톨이 및 고립 청년을 위한 지자체 지원 조례 제정 현황
6	한국	고립 · 은둔 청년지원정책



2024년도 유튜브

No	제목
1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 활성화포럼
2	Innovative Local Governance Webinar – Launch of the Handbook Series on Innovative Local Governance
3	2024 제15회 한일공동세미나 (KOR)
4	2024 제15회 한일공동세미나 第15回 日韓共同セミナー (JPN)
5	지역별 고향사랑 기부제 성과, 어떻게 다를까? 지방소멸을 막는 노력
6	지자체 재난 대응,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7	지방소멸 위기 속 새로운 대안, 생활인구
8	2024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9	20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국문 홍보영상
11	(국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0주년 기념
11	(영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0주년 기념
12	개원 40주년 기념 세미나
13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
14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20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서

IV



부록

2024년도 연구과제 수행 목록



2024년도 연구과제 수행 목록

1. 기본연구과제			
분야	No	과제명	저자
자치분권 제도	1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	박재희, 김건위, 정기용, 선소원
	2	지방이양정책의 진단 및 평가 연구 : 사무이양정책 및 지역맞춤형 특례정책을 중심으로	주희진, 고경훈, 전대욱, 유수동
지방행정 혁신	3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전략- 시나리오 플래닝을 중심으로	김지수, 최지민, 유자영
	4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수동, 강영주, 이재용, 이경은
지방재정 경제	5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의 개선방안	김성주, 전영준, 최정우, 김윤승
	6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홍근석, 이서희, 유보람
지역균형 발전	7	인구감소지역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발전전략 연구	이소영, 이원도, 윤소연, 김주락
	8	 지방시대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방안 연구 : 지역 간 기능적 연계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박진경, 김도형, 김민영, 양원탁
지방투자사업 관리	9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선방안 연구Ⅱ : 지방사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송지영, 이민기, 정연백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

분야	No	과제명	저자
자치분권 제도	1	지역 맞춤형 시·군·구 특례검토 및 사례 연구*	정기용, 박재희
	2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구역 제도 개선 연구*	전대욱, 최지민, 주희진, 최인수
	3	지방의회의원 겸직 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건위, 주희진
	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현황분석 연구*	최인수, 최지민 장인성
	5	지방규제 영향분석 방안 마련 연구	전대욱, 정기용, 김필, 김해솔
지방행정 혁신	6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지수, 안혜경, 강희송
	7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 방안연구	최지민, 최인수, 전대욱, 강영주, 김지수, 주희진
	8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재용, 김수동
	9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지원 제도화 방안*	김수동, 이재용
지방재정경제	10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	유보람, 이서희
지역균형 발전	11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구분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	김민영, 이소영
	1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성화 방안	박진경, 양원탁
	13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도입 방안 연구*	양원탁, 윤소연
	14	 지역청년지원에 관한 법·제도 수립방안 연구	박진경, 김민영, 조정찬, 최민정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15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우발채무 관리 방안 연구	송지영, 김상기, 김지훈, 박선영

* 비공개 기간 만료 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과제

지역	No	과제명	저자
서울특별시	1	서울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전적격성 검토 방안 연구*	전대욱, 선소원, 황도원
부산광역시	2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추진 방안 연구	윤소연, 김도형
대구광역시	3	대구광역시 시비 보조사업 재원분담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홍근석, 최정우
인천광역시	4	카지노 관리·감독 권한의 지방이양 타당성 연구	최지민, 강영주
광주광역시	5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정책 추진 방안 연구	김주락, 김도형
대전광역시	6	대전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전영준, 유보람
울산광역시	7	울산형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방안	유자영, 이경은, 김주락
세종특별자치시	8	지방시대 종합타운 건립 필요성 및 활용방안	박재희, 주희진
경기도	9	경기도형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 내수면 수상레저활동을 중심으로*	정기용, 선소원, 김해솔, 김민정
강원특별자치도	10	DMZ권 국립산림치유원 조성방안*	최인수, 전대욱, 장인성
충청북도	11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김성주, 김윤승
충청남도	12	충청남도 건설업 지방세 감면 타당성 분석 및 법률 개정 사항 검토*	최정우, 이서희
전북특별자치도	13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방안	고경훈, 김건위
전라남도	14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이원도, 김주락
경상북도	15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방안 연구	양원탁, 박진경
경상남도	16	경남의 '쉬었음' 청년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유자영, 이경은
제주특별자치도	17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도형, 이원도

* 비공개 기간 만료 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

4. 정책이슈리포트

지역	No	과제명	저자
서울특별시	1	서울시 소재 경로당 중식 5일제 전면 추진의 수요 예측에 대한 연구	선소원, 주희진
부산광역시	2	부산 인구가소지역 생활인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원도, 윤소연
대구광역시	3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대구관광 활성화 방안	김민영, 양원탁
인천광역시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카지노 레저세 신설 방안	이서희, 홍근석
광주광역시	5	광주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윤승, 홍근석
대전광역시	6	대전광역시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김도형, 양원탁
울산광역시	7	울산광역시 도시 브랜드 제고 방안	이소영, 박진경
세종특별자치시	8	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 대행 주체의 적정성 분석	김윤승, 전영준
경기도	9	경기도 미래지향적 소방력 운영 및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윤소연, 이원도
강원특별자치도	10	강원특별자치도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 방안 연구: 중소제조기업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이경은, 유자영
충청북도	11	산업단지가 충청북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홍근석, 전영준
충청남도	12	지방관리 향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발방안 연구: 대천항을 중심으로	김성주, 김윤승
전북특별자치도	13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 타당성 연구	박진경, 이소영, 조정찬
전라남도	14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및 지역정착 지원 방안	정기용, 주희진
경상북도	15	지속가능한 대학-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해외대학 혁신사례 분석	김성주, 최정우
경상남도	16	경남 투자선도지구 활성화를 위한 유사사례 연구	김민영, 이소영
제주특별자치도	17	특별자치시도 공동협력과제 발굴 및 개정안 마련	고경훈, 선소원

* 비공개 기간 만료 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

5. 자체연구과제

분야	No	과제명	저자
기획조정	1	2025 지방행정 트렌드	유수동, 이서희, 이원도, 유자영, 김필, 문혜리, 김자연
자치분권제도	2	지방자치 30년 평가 기초 연구	박재희, 최인수, 김건위, 김지수, 최지민, 주희진, 양원탁, 최정우
지방행정혁신	3	데이터기반행정 구현을 위한 지역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개선 방안 연구 : 인허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재용, 이경은, 김수동, 강희송, 박영민, 노형후
지방재정경제	4	지역경제 진단지표 설계와 검증방안 연구	이서희, 신두섭, 유보람, 최정우, 오유리
지역균형발전	5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발전특구 관리방안	이소영, 박진경, 김도형, 김민영, 김주락, 최민정

6. 지침연구과제

분야	No	과제명	저자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1	의료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1)	송지영, 정연백, 박소연, 조현민
	2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영향권 설정에 관한 연구	김남주, 심대용, 김진호, 이진우, 정병관
	3	폐기물 부문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지침 연구	김상기, 박용덕, 이정희, 주재문
	4	R&D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1) : 지방 연구개발사업 특성과 현황을 중심으로	김지훈, 김도영, 허은진, 전승훈, 박완규

7. 수시연구과제

분야	No	과제명	저자
자치분권제도	1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 관련 제도개선 연구	정기용, 김건위
지방행정혁신	2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 관련 쟁점 및 사례분석	이경은, 유자영
지방행정혁신	3	빈집 정비 관련 해외사례 연구	박해육, 강영주
지방행정혁신	4	읍·면·동 제도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 검토	최지민
지방재정경제	5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정책효과 분석	전영준, 유보람

8.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분야	지역	과제명	저자
지방재정경제	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 컨설팅	유보람, 신두섭, 전영준, 오유리
지역균형발전	화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컨설팅	박진경, 김도형, 김민영, 양원탁
지역균형발전	단양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컨설팅	이원도, 이소영, 윤소연, 김주락

9. 공동연구과제

공동연구기관	과제명	연구참여자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역특화 발전 방안	윤소연

10. 수탁연구과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조직 분석 및 진단 연구용역’ 등 총 22과제

11. 타당성조사과제

‘OO OOOOO 건립사업’ 등 총 81과제

